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충 청 북 도 의 회

균형발전 정책,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과밀화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도정의 균형발전 정책 사업들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2020년 9월 16일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 등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89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에 인구유입과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과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에 우리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 전략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등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정부기관에 건의하고, 5분 자유발언,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비록 2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및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조성, 정부예산,

뉴딜사업과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은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어야 합니다.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주거·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 관계자, 균형발전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신 164만 충북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균 형 발 전 특 별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숙 애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제출)함.

2022. 3.

위 원 장 **이 숙 애**

부위원장 **윤 남 진**

위 원 **김 영 주**

위 원 **박 상 돈**

위 원 **심 기 보**

위 원 **이 상 정**

위 원 **이 수 완**

위 원 **임 동 현**

위 원 **전 원 표**

목 차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1.1. 구성 목적 ·····
1.2. 구성 경과 ·····
1.3. 위원회 구성 ·····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1.5. 중점 활동 방향 ·····
1.6. 위원 명단 ·····

제2장 주요 활동 상황 ·····

2.1. 특위 활동 일지 ·····
2.2. 특위 위원 ·····
2.3. 특위 활동사진 ·····
2.4. 회의 개최 ·····
2.5. 5분자유발언 ·····
2.6. 인 터 뷰 ·····
2.7. 기관 및 현장방문 ·····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

3.1. 특위활동 결과 ·····
3.2. 특위활동의 아쉬운 점 ·····
3.3. 정책제언 ·····
3.4. 맺 음 말 ·····

제4장 부 록 ·····

4.1. 주요 언론보도 자료 ·····
4.2. 특별위원회 회의록 ·····
4.3. 충청북도 업무보고 ·····

contents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1. 구성 목적

1.2. 구성 경과

1.3. 위원회 구성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1.5. 중점 활동 방향

1.6. 위원 명단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1. 구성 목적

○ 국가 및 도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 등을 통한 불균형 해소와 정부예산 확보, 정책개발, 투자유치 활동 등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대응과 정부예산 확보 등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함.

1.2. 구성 경과

○ 구성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2020. 9. 15.)

○ 의안심사 : 제38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2020. 9. 15.)

○ 발의의결 :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 9. 16.)

○ 위원선임 :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 9. 16.)

1.3.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9인(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7)

○ 활동기간 : 2019. 9. 16. ~ 2022. 5. 31.

- 특위 활동기간 연장(본회의 의결, 2021. 6. 23.)

○ 위원 명단(소속 상임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위원장	이 숙 애	정책복지위원회	위 원	이 상 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 남 진	산업경제위원회	위 원	이 수 완	교 육 위 원 회
위 원	김 영 주	교 육 위 원 회	위 원	임 동 현	교 육 위 원 회
위 원	박 상 돈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전 원 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 원	심 기 보	행정문화위원회			

○ 활동지원(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 위	성 명	비 고	직 위	성 명	비 고
의회운영수석 전 문 위 원	김 광 래		운 영 특 위 전 문 위 원	정 훈	
행 정 6 급	이 형 령		교육행정6급	금 진 혁	
행 정 7 급	박 충 순		행 정 7 급	오 수 진	

○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특별위원회)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

가. 활동대상 기관

○ 중 앙 : 국회, 중앙부처 등

○ 지 방 : 충청북도(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나. 사무 범위

○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활동지원 등

1.5. 중점 활동 방향

○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 정부예산 확보

○ 도정 현안에 대한 조정·지원 및 대외협력 활동 등

1.6. 특위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정책)		이 숙 애 (청주1)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산업)		윤 남 진 (괴산)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 부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교육		김 영 주 (청주6)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행정		박 상 돈 (청주8)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행정		심 기 보 (충주3)	(前)충북도의회 재11대 전반기 부의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산업		이 상 정 (음성1)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교육		이 수 완 (진천2)	(前)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現)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		임 동 현 (청주10)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충북도의회 제11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건설		전 원 표 (제천2)	(前)충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現)충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contents

제2장

주요 활동 상황

2.1. 특위 활동 일지

2.2. 특위 위원

2.3. 특위 활동사진

2.4. 회의 개최

2.5. 5분자유발언

2.6. 인터뷰

2.7. 기관 및 현장방문

제2장 주요 활동상황

2.1. 특위 활동일지

《 특위 구성 》

○ 2020. 9. 15.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2020. 9. 15.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회 의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20. 9. 16.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0. 9. 16.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명)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1. 6. 23.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21. 6. 30 → '22. 5. 31)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회의 개최 》

○ 2020. 9. 16. :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0. 10. 22. :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

○ 2020. 12. 7. :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

○ 2021. 1. 28. :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 업무보고

○ 2021. 3. 22. :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등 업무보고

○ 2021. 6. 22. :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2021. 10. 14. :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 2022. 1. 26. :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 2022. 3. 24. :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충북도 대응 계획 등 업무보고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자유발언 》

○ 2021. 3. 11. :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발언의원 : 이숙애 위원장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

○ 2021. 4. 21. :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발언의원 : 전원표 위원

-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 인터뷰 》

○ 2021. 3. 16. : KBS라디오 이해수의 시사투데이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필요성 등에 관한 인터뷰

○ 2021. 3. 17. : MBC충북 시사토론 창

- 시멘트, 세금 VS 기금 논란

《 기관 및 현장 방문 》

○ 2021. 9. 10. :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방문(영동, 옥천)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 점검
  ·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옥천 테크노밸리 사업현장
-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청취

2.2. 특위 위원

<table>
<tr><td>
</td><td>
</td></tr>
<tr><td>이숙애 위원장(청주 제1선거구)</td><td>윤남진 부위원장(괴산 선거구)</td></tr>
<tr><td>
</td><td>
</td></tr>
<tr><td>김영주 위원(청주 제6선거구)</td><td>박상돈 위원(청주 제8선거구)</td></tr>
</table>

심기보 위원(충주 제3선거구)	**이상정 위원**(음성 제1선거구)
이수완 위원(진천 제2선거구)	**임동현 위원**(청주 제10선거구)
전원표 위원(제천 제2선거구)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전체)**

2.3. 특위 활동사진

제1차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0. 9. 16.)

제2차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0. 10. 22.)

제3차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0. 12. 7.)

제4차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1. 1. 28.)

제38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위원장, 2021. 3. 11.)

MBC충북 시사토론 창 인터뷰 (이숙애 위원장, 2021. 3. 17.)

제5차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1. 3. 22.)

제39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전원표 위원, 2021. 4. 21.)

제6차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1. 6. 22.)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영동레인보우힐링관광지 현장방문(2021. 9. 10.)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영동레인보우힐링관광지 현장방문(2021. 9. 10.)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옥천테크노밸리 사업장(청양식품) 방문(2021. 9. 10.)

제7차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1. 10. 14.)

제8차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2. 1. 26.)

2.4. 회의 개최

2.4.1. 제1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9. 16.(수) 10:5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9명
- 특위위원(9) : 이숙애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심기보 위원, 이상정 위원, 이수완 위원, 임동현 위원, 전원표 위원
○ 안 건
- 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선임의 건

Ⅰ 회의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Ⅱ 회의 결과

○ 위원장 선임 :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1)
○ 부위원장 선임 :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괴산)

Ⅲ 기타 협의사항

○ 제2차 회의 일정 협의 : 2020. 10. 22.(목) 16:00
-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

2.4.2. 제2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10. 22.(목) 16: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0명
- 특위위원(9) : 이숙애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심기보 위원, 이상정 위원, 이수완 위원, 임동현 위원, 전원표 위원
- 충청북도(1) : 정일택 정책기획관

○ 안 건
-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Ⅰ 회의 내용

○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정책기획관)

Ⅱ 질의 · 답변내용

〈 박상돈 위원 〉

○ 우리도에서 만든 행정수도 완성 CF를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격려 말씀 드림.

〈 이숙애 위원장 〉

○ 세종시가 커질수록 충북도민들이 세종시로 흡수되는 것 때문에 충북이 그만큼 발전효과가 없다는 고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는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충청권이 공조하기도 하지만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 드림.

➡ (정책기획관) 우리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성장분야 등을 용역을 통해 준비하고 국가균형위 등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할 것이며,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이디어 수렴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 이수완 위원 〉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1년전부터 오고간 내용인데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계획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접촉하고 있으며, 충청권 4개시·도가 협력하여 정부기관 등을 어떻게 유치할지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과정임.

○ 균형발전 차원에 철도, 공항, 공공이전 문제 등 중앙지침을 토대로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회의에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상정 위원 〉

○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준비된 게 없어 논의할 부분이 많지 않아 아쉬움. 다음회의에는 기초자료라도 준비하여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지 논의 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람.

〈 임동현 위원 〉

○ 세종시의 경우 투트랙 전략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은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궁금함.

➡ (정책기획관) 국가균형발전 민·관·정협의회 충청권 4개시·도가 합의하여 9월달에 출범하였고, 금일 자료에 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음.

〈 전원표 위원 〉

○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시즌2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 국회의원이 함께 움직여 줘야 되고 어떤 결정이 선행되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됨. 또한 충북 도내 균형발전도 중요한데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도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 김영주 위원 〉

○ 의회에서도 도와 같이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어 같이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간다는 생각이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림. 또한 정치권에서도 당을 떠나 함께 고민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 바람.

2.4.3. 제3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12. 7.(월) 14: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3명
- 특위위원(8) : 이숙애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심기보 위원, 이상정 위원, 임동현 위원, 전원표 위원
- 충청북도(5) :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정일택 정책기획관, 김인 균형건설국장, 이제승 균형발전과장, 정진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 안 건
- 충북형 뉴딜사업,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

Ⅰ 회의 내용

○ 충북형 뉴딜사업,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

Ⅱ 질의 · 답변내용

〈 임동현 위원 〉

○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은 21개 사업이 2021년까지 마무리 되는지?

➡ (균형발전과장) 기반조성사업은 보통 이삼년 사업기간이 걸림. 금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2021년 이후까지 가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음.

〈 전원표 위원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숫자는 얼마이며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해 주는 것인지?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공식적으로 122개 기관이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님.

➡ (균형건설국장) 처음 공공기관 이전 시 다른 지역보다 늦어 배정을 못 받은 입장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우리 지역에 연관성 있는 기관을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임.

○ 공공기관 적극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즌2에서 혁신도시 타운을 별도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혁신도시에 배정하는 것인지?

➡ (균형건설국장) 양질의 기관이 올 수 있도록 균형발전위나 국토부에 건의하는 활동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혁신도시가 전국 권역에 조성해 놨기 때문에 기존 혁신도시에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됨.

〈 이상정 위원 〉

○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도시적 특성, 일자리, 정주여건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며 공공기관이 더 이전해 와야 함.

➡ (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며, 주민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정밀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임.

○ 충북도가 중심이 돼서 음성군, 진천군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행정적인 민원에 대해 대처해 주길 바라며, 소방병원도 군비 부담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 (균형건설국장) 혁신도시와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나누어 있지만 그런 조율 관계에서는 충북도가 책임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열심히 뛰겠음. 국립소방병원은 전액국비로 알고 있음.

○ 혁신도시 한복판에 로데오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니 추경에라도 예산반영 필요, 기관이전 대상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 다음회의에는 더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균형건설국장) 혁신도시 중심 2차 기관 오는것에 대해 양질의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수치적으로 접근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겠음.

○ 시·군 균형발전사업의 경우 특수성이나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관광사업 위주인데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음.

〈 윤남진 위원 〉

○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3단계 진행되고 있는데 1,2단계 사업은 다 완료된 것인지? 그리고 보고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바람.

〈 이숙애 위원장 〉

○ 충북혁신도시에 대해 취재한 TV프로그램에서 지역의 정주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이전률이 낮은 지적과 통근버스로 혁신도시가 공동화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 기관들과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 (균형건설국장) 코로나 관계 때문에 협의하였는데 난색을 표함, 다행히 정부에서 '22년부터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나 공사, 공단은

노조가 있어 저희와 갈등이 있음. 위원장님 지적대로 통근버스가 안 다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주하는 비율이 낮아 주변상인들이 폐업하는 문제 발생,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충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주거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 바람.

➡ (균형건설국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 진천군 지역화폐를 통합시켰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심기보 위원 〉

○ 하수처리 주변을 가보면 냄새가 심한데 기술적으로 냄새 포집이 되는지?

➡ (기획관리실장) 수질·대기 환경 관련된 저감시설 등은 최근에 상당히 기술 진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Ⅲ 회의 결과

○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

⇒ 수정의결(표현이 “여·야”로 된 것 삭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마련하기 바랍니다”로 자구수정)

Ⅳ 향후계획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건의안 발송

참 고 **대정부건의안 원고 전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목적과 국민의 여망이 상실되었습니다.

지난 7월 여당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청와대, 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말 기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2%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특히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전년 동기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 시·군·구 중 46.1%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초 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비정상적 국가형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 2020. 3~4 2만7,500명 유입, 2019년 3~4월 1만2,800명 유입
* 2020. 5월 현재 전국 228개 중 105개 시군구(46.1%) 소멸 예측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하는 파국은 예견된 수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인 시행은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길일 뿐입니다.

수도권 초 집중화, 지방 소멸위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존속 위기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혁신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근본 처방과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제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으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수도권 초 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상태 방치를 당장 중단할 것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촉구하며 164만 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길 요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국회는 현행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격상·강화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합니다.

2020. 12. 7.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2.4.4. 제4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1. 28.(목) 14: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3명
- 특위위원(7) : 이숙애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이상정 위원, 이수완 위원, 임동현 위원
- 충청북도(6) :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신성영 정책기획관, 홍순석 세정담당관, 김인 균형건설국장, 이제승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 안　　건
- 업무보고의 건
  ·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

Ⅰ 회의 내용

○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Ⅱ 질의 · 답변내용

〈 이수완 위원 〉

○ 현재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4단계에는 진천과 음성을 포함한 9개 시·군으로 선정 가능한지?

➡ (균형건설국장) 4단계 지역 선정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 분석, 실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발전 지역을 균형발전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임.

○ 균형발전사업의 예산이 보통세 징수액의 5%로 되어 있는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균형건설국장)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봄.

○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내역에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오는 계획이 단선인지 복선인지? 철도망 구축 계획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 (균형건설국장) 각 지역주민마다 바라는 사업이 다르고 순서를 정하면 사업이 빠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계획이 국가계획에 담겨서 실행과정에서 사업 추진시 이것저것 요구해야 하는 입장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뉴딜사업을 하는데 추경에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길 바람

➡ (정책기획관) 시군에 필요사업, 시군 대표사업을 뉴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이며,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 편성하겠음.

〈 이상정 위원 〉

○ 시멘트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세금과 기금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입법화 과정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데 왜 안 되는지?

➡ (기획관리실장) 이 기금은 공적기금이 아니라 일종의 기부금 내지 상생지원금으로 보면 됨. 제도화나 공식화 된 것이 아니어서 시멘트 업계가 여유가 생기면 자의적으로 주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역 여건 개발이 안 되므로 세금을 주장하는 것임.

○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철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문이 잘 안 되고 있고 논리싸움으로 서로 간 갈등 우려가 있음. 목적되는 부문들이 잘 달성됐으면 좋겠음.

○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전국 전체적으로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 (균형건설국장) 전체 170여건으로 규모가 255조 정도 된다고 들음, 예산을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 중으로 몇 건이 들어갈지는 알 수 없음.

○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음성이나 진천도 같이 해주면 좋겠으며, 만일 안되면 군 내 저개발지역(면단위)을 선정하는 방식도 검토바람.

➡ (균형건설국장) 저발전된 면지역의 경우 행복마을, 우리 뉴딜사업이나 지역균등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중임.

○ 균형발전사업시 보통세의 3%수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5%~4%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시·군별로 차별성 있는 사업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음.

➡ (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데 더 명확하게 하도록 정리하겠으며,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도 노력하겠음.

〈 김영주 위원 〉

○ 국회 본청은 헌법적 판단에 의해 내려오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상임위를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확인된 게 있는지?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상임위가 이전한다는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기획관리실장)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단TF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에 설치하고 상임위 10~11개 정도 이전하는 걸로 발표 한 바 있음.

○ 균형발전사업시 기준을 갖고 해야 함,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회계마다 정해진 목적이 다르니 목적에 맞게 사용바람.

〈 윤남진 위원 〉

○ 지지난번 선거구 획정으로 충북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곳이 괴산군임. 중부 4군에 있다가 동남부 4군으로 갔는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충북도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도 않으며, 이에 대처하는 액션을 보여줘야 함.

➡ (균형건설국장) 충청북도의 어느 한 군이라도 소외되면 안 되며, 저희들도 계획단계에서 괴산군을 더 심도있게 보면서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임동현 위원 〉

○ 시멘트세 관련하여 기금과 세금의 차이를 지역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도 차원에서 신경쓰셔서 지역주민들이 지금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음.

➡ (기획관리실장) 주민들에게 세금과 기금의 차이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리고, 입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음.

○ 뉴딜사업 관련해서 충북형 사업 자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다른 사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 (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뉴딜이라는 것이 지역별 특성과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효과 내도록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별로 뉴딜계획을 세우도록 했음.

〈 이숙애 위원장 〉

○ 언론에서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 국토부가 충북선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국토부에서 충북선을 고속화하고 있는데 청주시내는 시민을 위한 도 철도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음, 저희는 대전부터 청주까지 연계돼 있는 광역철도로 봐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임.

○ 시멘트 자원시설세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기금과 세금 부분의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지역사회가 모두 한 힘이 되도록 당부 드림.

2.4.5. 제5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3. 22.(월) 14: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3명
- 특위위원(7) : 이숙애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심기보 위원, 이상정 위원, 임동현 위원, 전원표 위원
- 충청북도(6)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성영 정책기획관, 김인 균형건설국장, 이제승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 안 건
- 업무보고의 건
  ·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

Ⅰ 회의 내용

○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Ⅱ 질의 · 답변내용

〈 임동현 위원 〉

○ 충북 지역균형뉴딜 사업별 추진상황 중 추진 불가 2건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 (기획관리실장) 비대면 협업 소프트웨어 실증랩 구축사업은 부처에서 취소했고, 하나는 장기 추진과제로 전환돼 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남.

〈 이숙애 위원장 〉

○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하실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 바람.

〈 이상정 위원 〉

○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인데 충북뉴딜사업 추진시 탄소중립과 어긋난 부분이 없도록 원칙을 갖고 추진바람.

➡ (기획관리실장) 그린뉴딜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음.

○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임. 단지 에너지 전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구조가 바뀌는 것이므로 그린뉴딜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포괄적으로 봐야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함.

➡ (기획관리실장) 산업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우리생활 모든 측면을 친환경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분야가 연계되도록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사님께서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충북이 요청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요청한 것이다 해 가지고 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 (균형건설국장) 지사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 혜택이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경기도에 혜택이 더 있지 않나하는 측면으로 말씀 드린 것으로 해명자료가 나와 정정했고 진천군에도 그렇게 통보함.

○ 중북내륙선 지선처럼 광역철도의 경우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커다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 (균형건설국장) 현재 입장에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고 재원부담 문제는 실행과정에서 논할 문제임.

〈 윤남진 위원 〉

○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비 확보액이 2,000억원이 덜 된 상황인데 이게 해소 가능한지? 그리고 지연이나 부진사업 16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림.

➡ (기획관리실장) 2,000억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 공모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응모해 연말까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부진사업이 현재 16개인데 사업일정이 연기되거나 공모일정이 확정 안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김영주 위원 〉

○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민·관·정 TF를 구성시 교수, 연구원, 담당자 등 너무 관주도로 가는데 민간이 참여하는 회의도 열고, 충청권 4개 시·도의회도 같이 논의하면서 메카시티를 구축하고 충청권 상생발전 하는데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행복도시 광역생활권과 광역생활경제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업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음.

➡ (기획관리실장) 행복도시 광역생활권은 행복도시 중심으로 광역권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광역생활경제권은 광역지자체 간에 연계해서 광역화로 가는 메가시티, 부·울·경 이런 것을 말함.

〈 이숙애 위원장 〉

○ 최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발표를 보면 충주, 제천, 단양은 제외되었는데 그 지역분들의 여론과 이에 대한 충북의 대책은?

➡ (균형건설국장) 당초 용역시 충주, 제천, 단양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1시간이내 70km로 설정한 것임. 지역의견이 있을 시 그것을 토대로 다시 건의해 보겠음. 도시계획 측면에 안들어가도 개발축이나 교통축 녹지축은 광역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임.

○ 충청북도 뉴딜공모팀이 신설되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것인지? 뉴딜공모팀이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당선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 (정책기획관) 지역균형 뉴딜사업 전체적인 관리가 우선이고, 중앙부처 공모 동향을 파악해 실과에 전파하고 공모가 들어가기 전 사전컨설팅 및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논리 등 개발을 도와줌. 단독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부서와 협력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너무 미약해 보임. 기초지자체에서 이통장 협의회에 충분히 공지하여 주민들을 설득 바람.

➡ (정책기획관) 단양, 제천 주민들이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단양군수, 제천시장 등을 뵙고 시멘트회사 노조도 만남. 주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등을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에서 계속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전원표 위원 〉

○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균형발전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잡아 나가야 함. 북부권은 균형발전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인프라를 갖추길 바라는 항상 계획단계에서 제외되는 상황임. 충청내륙고속도로도 청주에서 제천까지 돼 있지만 충주 금가까지만 연결되고 제천까지는 기존 국도를 이용하게 돼 있음. 모든 인프라가 청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외된 지역도 다른 대안이 필요함.

➡ (균형건설국장) 도 입장에서는 저발전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균형발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4.6. 제6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6. 22.(화) 15: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7명

- 특위위원(7) : 이숙애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 이상정 위원, 이수완 위원, 임동현 위원, 전원표 위원

○ 안 건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Ⅰ 회의 내용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활동기간 연장사유
  - · 수도권집중화와 지방소멸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지원과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
  -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충북의 발전방향을 모색
  - · 도내에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위원의견 수렴

Ⅱ 회의 결과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채택 ⇒ 수정의결

- 당초안 :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수정안 : 2022년 5월 31일까지 연장

2.4.7. 제7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10. 14.(목) 14: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1명
- 특위위원(7) : 이숙애 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이상정 위원, 임동현 위원, 심기보 위원, 전원표 위원
- 충청북도(4)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성영 정책기획관, 홍순석 세정담당관,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 안　　건
- 업무보고의 건
  ·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응전략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상황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
  ·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Ⅰ 회의 내용

○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Ⅱ 질의 · 답변내용

〈 심기보 위원 〉

○ 충주 살미~제천 한수간 국도를 4차선으로 바꾸는 것인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많으니 추후라도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부탁드림.

➡ (균형건설국장) 현재 도로가 급곡선으로 돼 있고 좁아 이것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진행, 자연경관에 맞게 안전사고 위주로 개량할 계획임.

〈 임동현 위원 〉

○ 시멘트세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면 19대, 20대 때 다 폐기 되었는데 21대 때도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지 않는지?

➡ (기획관리실장) 11월에 지방세 관련법령 심의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행안부, 충북도, 강원도가 밀접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준비하고 있음. 국회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통과될 수 있게 준비중임.

○ 단양, 제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도에서 별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기획관리실장) 지사님, 경제부지사님이 BH에서 관련 수석을 만나 협조를 부탁.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담당국장을 만날 예정이며, 충북·강원·전남 민간단체입법공동추진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막판에 힘을 쏟아 부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

○ 균형발전 측면에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세부내용을 보면 충북의 특화된 게 없으며, 정주여건이 이루어져야 지역주민이 외부유출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균형건설국장)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했으며, 나름대로 미래과학기술 인프라, 바이오 주력사업 등 나름 열심히 노력했으며, 추가적으로 발굴할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분산배치보다는 지역에 맞게 특화된 것들, 지역실정에 맞는 산단 조성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전원표 위원 〉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진행현황 및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기획관리실장)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 한분한분 방문해서 자료와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도 수시로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음.

○ 지금 지역 국회의원 등이 시멘트업계와 기금조성을 협약을 맺으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지방세 신설에 협조를 먼저해주고 무산됐을 때 “기금 조성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줘야 함. 그리고 공장 근처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등을 소각시킴으로써 오염물질이 나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이상정 위원 〉

○ 제천, 단양 두 자치단체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반대는 안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하는 입장인지? 제천, 단양지역의 시멘트사업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이며, 탄소배출 문제 해결도 필요함. 세금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기획관리실장) 제천, 단양 자치단체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반대하지는 않음.

○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용역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도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획관리실장) 용역이 나온 다음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님. 현재 62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용역을 통해 추가·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임.

○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보면 국비나 지방비도 없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게 종합계획에 들어가는게 맞는 것 인지?

➡ (균형건설국장) 내륙권첨단산업 발전계획은 국비, 지방비, 민자를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람.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면 대부분 관광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지역에 필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고민해줬으면 좋겠음.

➡ (균형건설국장) 4단계부터는 미래성정동력사업등을 추가로 발굴해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함.

○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중요한 포인트이며, 지금 혁신도시 시즌2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균형건설국장)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김영주 위원 〉

○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및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용역이 동일기간에 공통분모가 너무 많은데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용역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획관리실장) 용역마다 주체와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 박상돈 위원 〉

○ 2단계 지방이전사업을 공공기관 이전사업 이행에 대해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 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 신경써주시길 바람.

〈 이숙애 위원장 〉

○ 박상돈 위원님 등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도가 타 시·도보다 발전이 덜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적극 개입해 줄 것을 당부하신 것임. 용역도 유사사업이 여기 저기 써놓은 느낌이 들며, 충북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충북도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백두대간 발전종합계획에 등 사업보고 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람.

2.4.8. 제8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2. 1. 26.(수) 09: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8명

- 특위위원(8) : 이숙애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이상정 위원, 이수완 위원, 임동현 위원, 전원표 위원

○ 안　　건 :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Ⅰ 회의 내용

○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검토 및 채택

- 건의안 제안 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되었음.

· 그러나 법 제정 시행 이후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과밀화는 더욱 집중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 일부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본래의 취지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가 있음.

＊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

·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164만 도민과 함께 수도권 초집중화를 가속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림.

Ⅱ 회의 결과

○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 원안 가결

Ⅲ 향후계획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건의안 발송

참 고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원고 전문**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수많은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적정하게 배치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산업의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멸하는 파국은 예견된 수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수도권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2021년 12월 27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현재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붕괴와 국토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및 자본 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방법으로 **수도권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은근슬쩍 법을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 시도도 당장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와 164만 충북도민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더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분권, 자치,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2.4.9. 제9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2. 3. 24.(목)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5층)
○ 참석현황 : 12명
- 특위위원(8) : 윤남진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심기보 위원, 이상정 위원, 이수완 위원, 임동현 위원, 전원표 위원
- 충청북도(4)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박기순 정책기획관, 김주회 세정담당관,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 안 건
- 업무보고의 건
  ·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충북도 대응 계획(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북도 계획 및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상황 등)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계획
  · 도내 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Ⅰ 회의 내용

○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충북도 대응 계획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기획관리실)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기획관리실)
○ 도내 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기획관리실)
○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Ⅱ 회의결과

○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보고

2.5. 5분자유발언

2.5.1. 5분자유발언(이숙애 위원장)

개 요

○ 일 시 : 2021. 3. 11.(목), 14:00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 발언의원 : 이숙애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 내 용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Ⅰ 추진 배경

○ 시멘트 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업계와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반성과 태도 전환 촉구

○ 정부와 국회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무를 즉각 수행하도록 촉구하며 도민들의 결집을 제안

Ⅱ 주요내용

○ 지난 60여년간 시멘트업계는 우리나라 고속 성장발전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생산지역 주민들은 오염물질 등으로 생존권이 박탈 당함.

○ 회사 이익에 매몰되어 주민들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하던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세 입법이 추진되자 기금조성을 운운하며 반대

○ 시멘트세와 기금의 차이를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시키고, 시멘트세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의 생명권 보장과 피해 보상해야 함.

참 고 **5분자유발언 원고 전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최근 시멘트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여 모두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에 앞장서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입법 반대기류 형성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패싱하고 업체와 협약식을 한 점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성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 의무를 즉각 수행하도록 촉구하며 도민들의 결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5천만톤 시멘트생산량 중 충북에서만 1,700만톤(33.9%)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시멘트업계는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발전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생산지역 주민들은 분진과 오염물질 유출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해왔습니다. 시멘트 소성공정의 기존연료인 유연탄이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으로 대체되어 전국의 재활용 폐기물 소각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폐기물은 2019년 809만 3천톤으로 폐합성수지만도 2018년 90만톤에서 연간 200만톤 이상 활용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2016년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전체 만성폐쇄성폐질환자 933명 중 충북은 221명(23.7%), 진폐증 34명 중 8명(23.5%)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체가 돈 받고 폐기물을 소각하고 연료와 부원료를 대체, 폐열발전 등으로 1석 3조의 혜택을 보는 사이 주민들은 병마에 시달려 온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단양지역 시멘트업체는 제주도의 반입거부폐기물 2만 2천여톤을 42억원을 받고 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였고, 일본의 폐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여 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회사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던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세 입법이 다시 추진되자 기금 조성 운운하며 온갖 로비와 반대 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멘트세는 연 500억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하며 충북에 17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지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이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나 기금은 업계의 자의적 기부로 재원확보가 불확실하고,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금은 투명사용이 불가능하고 주민에게 전액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환경시설이나 병원건립 등 공공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톤당 천원의 과세는 시멘트 40kg 1포당 40원 부과로 시멘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외부 불경제유발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의해 원자력세는 2006년, 화력세는 2014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필사적 노력으로 신설되었음에도, 시멘트세 도입은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으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노릇입니다.

석회석 광업과 시멘트 제조업은 별개의 사업이며, 시멘트업계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4.43%보다 9.2%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이 대기오염배출 2순위임에도 60년간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심히 어긋납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시멘트세 신설임을 인식한다면 업계의 입법저지활동에 더 이상 속아선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시멘트세 입법 방해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둘째, 엄태영 의원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태도를 전향하여 시멘트세 도입에 사활을 걸어 올 상반기 안에 입법 완료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셋째, 제천시, 단양군 등 자치단체와 의회, 이통장협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에게 시멘트세 신설의 당위성 및 기금과의 차이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생명권 보장과 피해보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시멘트세 입법임을 정확히 인식시켜야합니다.

넷째, 해당 지역주민들은 업계의 입법 저지활동에 절대로 속지말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결집해야 합니다.

다섯째, 언론들은 시멘트업체와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홍보내용 전달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분석·보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입각하여 시멘트세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지켜주십시오.

강원도의 석탄광산 폐광 이후 폐허가 된 사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충북의 시멘트 생산지역 만큼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국회, 지자체, 도민 모두가 결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2. 5분자유발언(전원표 위원)

개 요

○ 일 시 : 2021. 4. 21.(수), 14:00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 발언의원 : 전원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내 용 :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Ⅰ 추진 배경

○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 등 수많은 환경적 문제점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과세에 대한 요구 쇄도

○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격고 있음

Ⅱ 주요내용

○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최소한의 보상

○ 기금모금은 자율적 기부로 안정적이지 않고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책이 최상책임.

○ 시멘트 생산지역에 거주하는 수십년간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 시멘트 과세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도 힘을 모아야 함.

참 고 **5분자유발언 원고 전문**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제천시 제2선거구 전원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회 등 세 곳의 시멘트 생산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경관을 훼손시키는 등 수많은 환경적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과세에 대한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의회와 충북도는 물론,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타 시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격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명 ‘시멘트세’라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최소한의 보상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시멘트 한 포에 40원, 1톤 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천과 단양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세입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에서 소각하는 폐기물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그리고 석회석 채굴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도로파손 등은 개별 시멘트 회사의 소규모 기부금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여 주변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멘트세 부과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모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지역주민들을 선동, 분열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금모금은 말 그대로 강제 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거니와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민들 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기금을 모금 한다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이 좌초되었을 때 차선책으로 마련해야 할 그야말로 하책에 불과합니다. 최선책인 상책을 마련하고자 충북도와 해당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마당에 기금모금이라는 엉뚱한 제안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딴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렇듯 인근 주민들을 선동, 기만하는 행위는 결국 공해유발 기업에게 휘둘린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공해유발 업체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딴지를 걸며 업체 편에 서려는지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권석창 이철규 국회의원이 2016년 공동으로 법안발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영 이철규 유상범 권성동 국회의원님!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갑론을박 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다면 기금모금이라는 편법으로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정도를 위해 매진해 주십시오.
지자체는 물론 국회차원의 협력을 네 분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멘트 생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진과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수십년간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멘트세 과세는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생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관철 되도록 충북도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해당지역 국회의원 모두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 추진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 인 터 뷰

2.6.1. KBS라디오 이해수의 시사투데이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21. 3. 16.(화)

○ 장　　소 : KBS 라디오 스튜디오

○ 프로그램 : KBS라디오 이해수의 시사투데이

○ 출 연 자 : 이숙애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내　　용 : 시멘트세 입법문제 논의

Ⅰ 주요내용

○ 시멘트세 입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세수확보를 통해 주민건강 피해지원,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등이 있음.

○ 조세보다 기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세금이 예산편성 및 체계적인 집행으로 재정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음.

○ 충청권 광역철도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중부내륙선 지선 등 국가균형발전차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

2.6.2. MBC충북 시사토론 창

인 터 뷰 개 요

○ 일　　시 : 2021. 3. 17.(수)

○ 장　　소 : MBC 충북 청주 스튜디오

○ 프로그램 : MBC 충북 시사토론 창

○ 출 연 자 : 이숙애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단양군의원, 김종태 전 단양군의원

○ 내　　용 : 시멘트, 세금 VS 기금 논란

Ⅰ 주요내용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필요성 및 입법 추진과정 설명

○ 세금과 기금의 장·단점을 통한 차이점 비교 설명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결집을 통해 시멘트세 입법 촉구

Ⅱ 인터뷰 사진

MBC 충북 시사토론 창(2021. 3. 17.)

2.7. 기관 및 현장방문

2.7.1.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방문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21. 9. 10(금), 10:00

○ 장　　소 :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 방 문 자 : 4명

- 특위위원(4) : 이숙애 위원장, 김영주 위원, 박상돈 위원, 임동현 위원

○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 점검
-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청취

Ⅰ 현장방문 사업개요

1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 위　　치 :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23년

○ 사 업 비 : 약2,693억원

○ 사업면적 : 1,749,477㎡

○ 사업내용

- 공공부문 : 과일나라테마공원, 영동와인터널, 복합문화예술회관,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축제광장, 기반시설
- 민자부문 : 호텔(콘도), 상가시설, 연수원, 골프장 등

2 옥천 테크노밸리조성사업

○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일원
○ 사 업 비 : 517억원
○ 사 업 량 : 357,831.5㎡
○ 기　　간 : 2015년 ~ 2021년
○ 유치업종 :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뿌리산업 등

Ⅱ 주요일정

○ 영동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사업 브리핑, 복합문화예술회관 시설 점검 및 와인터널 체험

○ 옥천테크노밸리 추진상황 브리핑, 1호 입주기업(청양식품)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Ⅲ 현장방문 의견

1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 지역특성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사업 추진
○ 민간사업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 레인보우힐링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2 옥천 테크노밸리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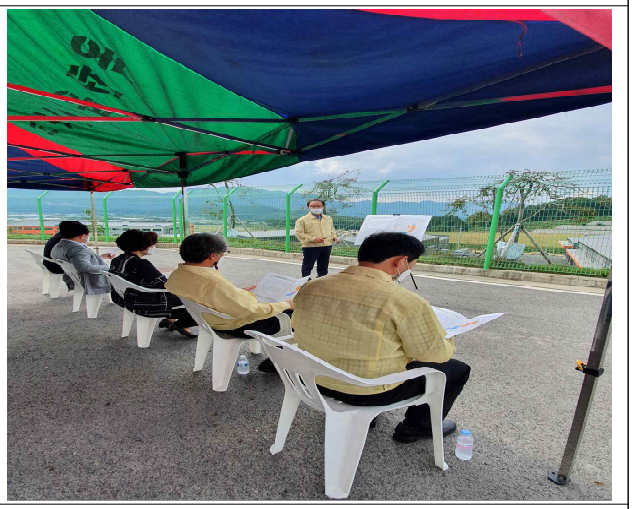
○ 2021년 연말 완료되는 테크노밸리조성사업단지 조성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Ⅳ 현장방문사진

영동레인보우힐링타운 사업 브리핑

복합문화시설 점검

와인터널 체험



옥천테크노밸리 사업 브리핑

청양기업 방문

청양기업 애로사항 청취

contents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3.1. 특위활동 결과

3.2. 특위활동의 아쉬운점

3.3. 정책제언

3.4. 맺음말

제3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3.1. 특위활동 결과

3.1.1.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결과

1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 추진상황 종합점검 및 지원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북도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 보고(수시)

○ 여·야 정치권 및 세종 등 충청권 지자체 동향 파악

○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충북의 영향 분석 및 장·단기 대응방안 논의

2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활동

○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촉구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활동

- 충북·전남·강원지역 지방의회·시민단체 등과 공동 추진

○ 인터뷰를 통한 시멘트세 입법 필요성 및 기금과의 차이 홍보

-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3 도내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사업 점검 및 논의

○ 시군대표 뉴딜사업 계획 점검 및 중요사업 발굴 논의

- 관광 등 획일적인 추진보다는 지역특색을 살린 사업 실시
- 시·군 우수사례 발굴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광역철도망,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3.1.2.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1 행정수도 완성 및 도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

-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상태 방치 중단 요구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대응전략 논의

○ 충북 뉴딜사업, 지역균형발전 조성사업 등 도내 저발전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 방안 논의

2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한 지역 내 찬성 분위기 조성

- 지역방송 인터뷰 등에서 시멘트세의 필요성, 세금과 기금 간 비교를 통해 입법 여론 형성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시멘트생산지역 주민 설득

○ 의정발언을 통해 시멘트세 입법을 위한 주민 결집 제안

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반영

○ 통탄~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신설로 경기남부권과 충청권을 엮는 초광역 생활경제권 조성

○ 철도 불모지인 진천에 광역철도사업 반영으로 충청내륙지역 거점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 도모

3.1.3.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연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2020. 9. 16.(수), 10:5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2020. 10. 22.(목), 16: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2020. 12. 7.(월), 14: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충북형 뉴딜사업 등 업무보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1. 28.(목), 14: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 업무보고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일시: 2021. 3. 11.(목), 14:00 - 장소: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 발언자: 이숙애 위원 - 내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입법 촉구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KBS 인터뷰	- 일시: 2021. 3. 16.(화), 08:40 - 장소: KBS 청주 라디오 스튜디오 - 내용: 시멘트세 입법 필요성 등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MBC 인터뷰	- 일시: 2021. 3. 17.(수), 13:30 - 장소: MBC충북 청주 스튜디오 - 내용: 시멘트, 세금 VS 기금 논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3. 22.(월), 14: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등 업무보고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일시: 2021. 4. 21.(수), 14:00 - 장소: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 발언자: 전원표 위원 - 내용: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6. 22.(화), 15: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기관 및 현장방문	- 일시: 2021. 9. 10.(금) - 장소: 영동, 옥천 - 내용: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상황, 효과 등 점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일시: 2021. 10. 14.(목), 14:0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 일시: 2022. 1. 26.(수), 09:3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 일시: 2022. 3. 24.(목), 13:30 - 장소: 특위회의실 - 내용: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충북도 대응계획 업무보고 및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3.2. 특위활동의 아쉬운점

○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개발 등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외협력 활동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균형발전 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아 대외협력 활동,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입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3.3. 정 책 제 언

3.3.1.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

○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필수적인 국회 세종 의사당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와 공조하여 정치권, 정부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 수도권 과밀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사업의 필요성을 충청권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균형발전에 쓰이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편성방향과 흐름을 잘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3.2.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대책 강구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5년(19대 국회)부터 입법발의가 되었으나 7년여 동안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도내 생산지역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등의 기금 조성론 등에 부딪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정부, 국회,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 바람.

3.3.3.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 모색

○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충청권 내에서 충북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수도권에 상응하는 충청권 광역생활권(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용역에 충북의 전략과 우선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논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3.4.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

○ 도내 인구와 산업, 개발 수요가 청주에 집중되고, 진천·음성군이 혁신도시 지정으로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도에서는 저발전지역에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집중투자하고, 충청북도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도 현재 보통세 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3.5%~5%까지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3.4. 맺 음 말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지난 2020년 9월에 구성되었음.

○ 국가·지역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북도에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등도 정부·국회 등에 전달함.

○ 또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의정 발언, 방송 인터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침.

○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 시멘트세의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동탄~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 등의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특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숙애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특위 위원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하여 위와 같은 성과를 도출해 냄.

○ 비록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행정수도 완성,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충청북도 시·군 지역균형발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contents

제4장

부 록

4.1. 주요 언론보도 자료

4.2. 특별위원회 회의록

4.3. 충청북도 업무보고

4.1. 주요 언론보도 자료

동양일보

2020년 09월 17일 (목)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 특위 구성

위원장에 이숙애 의원… "정책 대안 마련 · 지방분권 실현 앞장"

충북도의회는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와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종합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정부예산 확보 등 대외협력과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사진 · 더불어민주당 · 청주1)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더불어민주당 · 괴산)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김영주(청주6), 박상돈(청주8), 심기보(충주3), 이상정(음성1), 이수완(진천2), 임동현(청주10), 전원표(제천2)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이숙애 특위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불균형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충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재천 기자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2020. 9. 16.)

충청매일

2020년 09월 17일 (목)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행정수도 완성·지방분권 실현·대외협력 등 활동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은 윤남진 의원이 맡았다.

김영주 · 박상돈 · 심기보 · 이상정 · 이수완 · 임동현 · 전원표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정부 예산 확보 등 대외협력 활동에 나선다.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도 한다.

활동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이숙애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불균형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청주공항활성화지원특위는 회의를 열어 충북경제청으로부터 에어폴리스 1~3지구 추진상황과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분야별 질의응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명덕기자

忠淸日報

2020년 09월 17일 (목)
02면 종합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의원 9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이숙애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정부 예산 확보 등 대외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불균형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2020. 9. 16.)

동양일보

2020년 10월 23일 (금)
02면 종합

충북도의회 균형발전 특위 2차 회의

행정수도 완성 관련 충북도 향후 대응 계획 청취

충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22일 2차 회의를 개최해 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행정수도 완성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 · 청주 1) 위원장은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국회 · 타시도의회 · 시민단체 공조체계 마련 △국가 · 도내 균형발전 정책 대안 마련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엄재천 기자

제2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0. 10. 22.)

충청매일

2020년 10월 23일 (금)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균발위, 행정수도 완성 추진 과정 청취

충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행정수도 완성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숙애 위원장은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국회 · 타시도의회 · 시민단체 공조체계 마련 △국가 · 도내 균형발전 정책 대안 마련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영덕 기자

제2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0. 10. 22.)

중부매일

2020년 12월 08일 (화)
05면 정치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업무보고
與-野 지방분권 종합대책 추진 합의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현황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북도로부터 충북형 뉴딜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등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위기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극단적 국가불균형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공 건의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여·야 합의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종합대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 격상 강화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병갑

제3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0. 12. 7.)

충청타임즈

2020년 12월 08일 (화)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사진)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위기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극단적 국가불균형 사태 해결을 위해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균형발전특위는 설명했다.

건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여·야 합의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종합대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애 위원장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른 국가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忠淸日報

2020년 12월 08일 (화)
02면 종합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행정수도 완성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7일 3차 위원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위기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극단적 국가불균형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건의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여·야 합의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종합대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 격상 강화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숙애 균특위원장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른 국가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명식기자

제3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2020. 12. 7.)

충북도의회 도균형발전특위, 업무보고 받아

이재기 기자 | 입력 2021.01.28 17:06 | 댓글 0

균형발전특위 모습(제공=충북도의회)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8일 제4차 회의를 개최 했다.

위원들은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행정수도 관련 우리도 대응전략과 충북형 뉴딜사업,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에 대해 듣고,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특화된 충북형 뉴딜사업 발굴과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논리개발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숙애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업 추진 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이숙애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주, 박상돈, 심기보, 이상정, 이수완, 임동현, 전원표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제4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1. 1. 28.)

동양일보

2021년 03월 12일 (금)
01면 종합

"시멘트세 입법은 주민생존권 위한 국회의 책무"

이숙애 충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주민들과 상생·공존해야"

충북도의회 이숙애(사진·청주1) 의원은 11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멘트 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멘트 생산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시멘트세 신설임을 인식한다면 업계의 입법 방해활동에 더는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시멘트세 입법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도 태도를 바꿔 시멘트세 도입에 사활을 걸어 상반기 중 입법 완료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 역시 업계의 입법 방해활동에 절대로 속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결집해야 한다"며 "강원도의 석탄광산 폐광 이후 폐허가 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국회, 지자체, 도민 모두가 결집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강원도·전남도·경북도와 함께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의 입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세금 신설 대신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2면

업재현 기자 jc0027@dynews.co.kr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2021. 3. 11.)

충청투데이

2021년 03월 12일 (금)
03A면 종합

"시멘트세 입법은 국회 책무"

이숙애 의원

이숙애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은 11일 정치권을 향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라며 시멘트세의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세 입법 반대기류 형성을 주도하고 시멘트 업계와 협약식을 한 것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시멘트세가 입법화하면 연 500억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충북에 177억원의 '재원'(財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해당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 기업이 1t당 1000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건강권과 생활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공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환원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멘트 제조업체의 입법 방해 활동 중단 ▲제천시·단양군 등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등의 주민들에 대한 입법 당위성 설명 ▲언론의 냉정한 분석·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가 2016년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단양·영월·삼척 등 8개 지역의 1만 952명 가운데 933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자로, 34명은 진폐증 환자로 판명됐다. 시멘트로 인해 도시 발전 저해가 심각해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하위권을 기록하는 점도 대표적 피해사례의 방증으로 꼽힌다. 실제 2019년 기준 전국평균 51.35%이며 ▲제천 18.82% ▲단양 21.75% ▲동해 20.09% ▲영월 21.44% ▲삼척 17.39% ▲강릉 20.92% 등을 기록했다.

이민기 기자 mangsoo@cctoday.co.kr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2021. 3. 11.)

동양일보

2021년 04월 22일 (목)
05면 종합

"단양·제천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전원표 의원 개정법 통과 강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사진·제천) 의원은 21일 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는 물론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타 시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금모금은 말 그대로 강제 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높다"며 "소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세 과세는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충북도민과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kb0027@dynews.co.kr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2021. 4. 21.)

忠淸日報

2021년 04월 22일 (목)
02면 종합

전원표 충북도의원
시멘트세 신설 촉구

충북도의회 전원표의원(제천2·사진)은 21일 "시멘트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도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39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수십 년간 환경적 고통을 받는 현시점에서 시멘트세는 피해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금 조성은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사용상 분배에서도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재남기자

충청타임즈

2021년 04월 22일 (목)
05면 종합

전원표, 단양·제천 지방세법 내 시멘트세 신설 촉구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 의원(제천2)은 21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양·제천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방세법 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도의회와 도는 물론,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타 시·도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회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재통기자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2021. 4. 21.)

충북일보

2021년 06월 24일 (목)
06면 정치

청주공항·충북선·균형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

충북도의회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의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북선 철도 고속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충북도의회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도의회는 23일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철흠),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 등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공항활성화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공항활성화특위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면허 취득을 계기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국내선은 취항했으나 국토부의 운송면허(AOC) 발급 지연(448일 소요)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공항활성화특위는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관광·항공 활성화 방안 강구는 물론 회전익 중심의 항공정비 단지로 조성 중인 에어로폴리스사업의 본격 시작에 따른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공항복합신도시 조성, 도심형 항공교통(UAM) 산업 지원 등을 위한 활동도 펼칠 전망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특위는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 등 충북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KTX제종역 저지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내년 5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균형발전 특위도 내년 5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다. 균형발전 특위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충북의 발전방향을 모색이 필요하는 의견에 따라 연장이 결정됐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실태, 저감대책 추진상황 점검, 미세먼지 줄이기 합동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지난 2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충청북도 제7차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8건, 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

한편 392회 임시회는 오는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안혜주기자

충북도의회가 23일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북도의회

제6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1. 6. 22.)

통양일보

2021년 09월 13일 (월)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지난 10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사진)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영동 해인보우힐링관광지 조성사업지를 방문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기준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옥천 테크노밸리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좋은 기업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입주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영재천 기자 jc0007@tynews.co.kr

충청매일

2021년 09월 13일 (월)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균형발전 특위, 현장 방문

충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가 지난 10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영동 해인보우힐링관광지 조성사업지를 방문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기준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옥천 테크노밸리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좋은 기업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입주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최영덕기자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기관 및 현장방문(2021. 9. 10.)

충청매일

2021년 10월 15일 (금)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장기·종합적 균형발전사업 추진 요구

균형발전특위 회의 개최

충북도의회가 14일 제394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위원회는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행정수도 완성 충북도 대응전략 용역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에 관한 추진상황을,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사업(메가시티) 등 사업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내용이 많다"며 "통일된 장기적·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에 신설에 대해 해당 지역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11월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균형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숙애 위원장은 "균형발전사업은 우리나라 장기적인 발전에 보탬이자 사회적 사명"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주길 바라며 도의회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락기자

제7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1. 10. 14.)

충청매일

2022년 01월 27일 (목)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수도권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국가균형발전 역행"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26일 제8차 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위원들은 "수도권 발전은 비수도권의 자본 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이 없는 주장"이라며 "수도권에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철회 △분권·자치·균형발전 법률 제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숙애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산업 초집중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도의회는 국가 미래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영락기자

제8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2. 1. 26.)

忠淸日報

2022년 01월 27일 (목)
02면 종합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중단하라"

충북도의회 균발위, 건의안 채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철회
국민 체감 균형발전 추진 등 강조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8일 8차 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에 포함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이를 저지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위원들은 "수도권의 발전은 비수도권의 자본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이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수도권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은근슬쩍 법을 개정해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분권·자치·균형 발전 법률 제정 촉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숙애 위원장은 "도의회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3월 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박재남기자

제8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2. 1. 26.)

중청타임즈

2022년 01월 27일 (목)
01면 종합

'수도권 규제완화법' 개정 반대 충북도의회 특위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8일 제8차 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데 따른 대응차원에서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분권·자치·균형발전 법률 제정 촉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제3차(3월)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박재돌기자

제8차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22. 1. 26.)

4.2.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1 호

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10시5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1면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면

(10시5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균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이숙애 위원님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숙애 위원님께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애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숙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직무대행, 이숙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2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1조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윤남진 위원님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남진 위원님께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남진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부족한 저를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기 함께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충북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윤남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윤남진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심기보	전원표	이수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	정 훈

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2 호

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16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 2면

(16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의장님, 오늘 균형발전특위 저희 구성되고 처음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의장님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희 마이크 켜도 돼요?

(「예」하는 이 있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마이크를 켜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우리 균형발전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일차로 한 것이 황석영 작가를 모셔오는 것을 일차 사업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황석영 작가를 두 번 모셔서 한 번은 오찬, 한 번은 만찬을 하면서 진지한 상의까지 드렸고 본인도 우리 충북에 오셔서 여기에 묻히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셔서 모든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회기 때문에 예결위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특별위원장님도 같이 가셔야 되는데 같이 못 가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남부권에 소속돼 있는 금강유역본부가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그 전주에 있는 것을, 사실은 영산강하고 거기 있는 강이 뭐죠? 금강하고…

(「낙동강」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임진강… 아니 섬진강!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3개의 수계를 관리하기 위한 본부가 전주에 있었습니다.

전주에 있었는데 영산강하고 섬진강 본부는 광주로 분리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금강 본부가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직원은 약 한 90여 명 정도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용담댐하고 대청댐, 용담댐 하류 또 내지는 대청댐 상류가 옥천이나 영동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어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열두 분이 무주에 오셨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남대전IC 근방의 식당에서 뵙고 건의서도 전달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래서 어제 송옥주 위원장, 이수진 위원, 노웅래 위

원 그리고 장철민 우리 대전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한테도 정중하게 건의를 드려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질의 받는 대로 우리 충북도의회로 연락을 주시는 걸로 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말씀 듣고 왔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역, 지역별로다가 우리가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균형발전특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과 더불어서 함께 좀 논의해 주시고 깊이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우리 충북도의 역할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만든 특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어우러져서 정말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짧게 인사만 드리고, 또 충주무예영화제가 오늘 개막을 해서 거기를 제가 다녀와야 될 상황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식사 같이 못하는 것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16시10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 관련 동향과 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련 동향과 우리 도의 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 관련 동향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현재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를 바탕으로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7월 27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서울 노원구 을의 우원식 의원이 단장이고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충북은 이장섭 국회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지역 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 순회토론회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최근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의사당 기능 이전을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하였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페이지, 국민의힘 동향입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해야 된다고 하였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균형발전특위는 행정수도 이전이 전제가 아닌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종시 동향입니다.

세종시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한 후에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을 완전 이전하는 것이 목표이고, 단기적으로는 국회 세종시 의사당 건립에 집중하고 있습니

다.

세종시 의사당은 설계비가 '19년·'20년에 10억 원씩 반영되었고, 세종의 홍성국 의원과 충남의 박완주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 우리 도 대응계획입니다.

대응방향은 충청권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충북도 자체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충청권이 행정수도 완성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이시종 지사님이 제안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시도지사 4명, 시도 의장 및 민주당 도당위원장 각 4명, 균형발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대표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기별로 시도별 순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지지 확산, 전국 국가균형발전 단체와 공조, 국회·정부 대응 등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서 협의회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10월 30일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협의회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응전략을 전문기관의 용역과 충북 민·관·정TF 운영을 통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21년 2월부터 9월까지이고 용역비는 7,600만 원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행정수도 완성의 추진방향을 전망하고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단기적으로는 국회·청와대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KTX오송역·청주국제공항의 신수도권 관문역할 강화, 우리 도의 신성장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북 민·관·정TF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충북 민·관·정TF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충북 도내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나오는 과정에 맞추어서 추진할 것이며 민은 학계 등 전문가, 관은 도청 정책기획관·균형발전과 등 관련 부서, 정은 도의원님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 완성 관련 동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보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중파 방송을 보니까 우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CF 만드셨죠? 혹시 정책기획관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괜찮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방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그거 좀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

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러면은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세종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세종시가 지금 막 이렇게 커나가면서 사실 빨대효과 이래 가지고 충북의 도민들이 많이 세종시로 흡수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졌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충북이 그만큼 발전효과가 없다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과 연관 지어서 충북이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대략 어떤 점에 방점을 맞추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시도에서는 실무위원도 구성하면서 큰 틀에서 논의할 그런 의제들 같은 것도 조율하지만 일단은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에 대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일단 수립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장재력이나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이고 협력해야 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준비한 다음에,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지금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균형위라든지 그런 기관들하고도 밀접하게 지금 협력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정책의 계획이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기본 절차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어떤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모방식도 있잖아요, 아이디어 공모방식.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희도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도 단계별로 준비하는 그런 사항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수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저희도 그런 분야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그런 접수되는 아이디어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사실은 이게 정책연구는 지금 한 6~7개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늦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항상 선제적 대응 면에서는 상당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충청권이 함께 공조하는 것 같지만 또 내면으로는 서로가 경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저희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쳤고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다 이렇게 PPT자료 보니까 자료가 돼 있는데 먼젓번에도에서는 TF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 연구용역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TF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기획관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이 업무담당은 광역팀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현재 실무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 있고 TF는 아직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지금 기획관님 오시기 이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행정수도 이전 이래 가지고 122개 공공기관을 이렇게 이전할 대상을 뽑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혁신도시하고 맞는, 그렇죠? 유치하기 좋은 입지에 맞는 그러한 공공기관을 36개를 입지선정을 해서 지금 도청 직원들이 그 이전할 공공기관 대상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응 계획서를 보면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1년이 넘도록 뭐 했느냐 이거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시즌2 옮긴다는 이야기가 오늘 내일 주고받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년 전부터 오고 간 내용인데 이게 무슨 용역이 나오고 말이야, 그때도 TF팀을 만드는 거라고 하고 TF팀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 1년이 넘도록 그 팀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 오늘 특위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좀 갖고 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상의 특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이러한 공공기관은 충청북도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은 꼭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제시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위에 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균형국에서 또 혁신도시추진단에서 나름대로 기관 유치에 대한 거는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부에서도 이거를 발표, 아마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표를 유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위원회, 저희 직원도 거기 파견 간 직원이 한 분이 있는데 일단은 공공기관 이전 지방, 아까 말씀하신 시즌2에 의한 그 기관들을 국토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역별로 배분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드렸는데 일단은 발표를 유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이전도 물론 큰 틀에서는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그거는 핸들링하지는 않고 그거는 균형국에서 또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기존의 조직이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정부기관과 관련된 국회, 청와대 또 유관기관과 관련된 거를 어떻게 우리가 4개 시도가 협력하면서 그걸 논의할 건지 그런 것들은 지금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근데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도에서 움직이는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부수적으로 균형국에서 하고 있고 새롭게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사당 이런 부분에 대한 입지 강화 이런 쪽으로다가 힘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럼?

새로운 로드맵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의사당이 올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올 것이냐 이런 거 논의 중이다, 이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 이전에 행정수도 시즌2와 관련돼서 이런 거하고는, 여기는 대응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 등등 시즌2에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여기 표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어휘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균형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건설, 여기 특위에 와서 그 국에서도 와서 설명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우리 특위가 열릴 때 그럼 무슨 우리 하는 게 많잖아요, 철도 관련해서 하든가 공항 관련해서 하든가 아니면 시즌2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충남·대전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중앙에서 지침을 주면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대안 같은 거 갖고 와서 다음 회의 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특위에서 설명을 하고 또 보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이 행정수도 관련한 업무를 맡기로 한 게 언제쯤 정도 될까요?

그런 업무분장 한 지가…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했기 때문에 대략 금년 7월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희가 지금 오늘 회의 우리 균형발전위 회의는 사실상 처음 회의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첫 사업으로 사실 행정수도 완성 관련한 과제가 떨어져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지금 사실은 별로 이렇게 준비된 게 없어 가지고 특별히 논의할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7월 달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으면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들을 지금 대충 보고를 해 주셨으면 구체적인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회의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당시 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커다란 의제 속에서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의 현황이 어떻고 또 그러니까 어느 부서, 부처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또 서울에서 와야 될 기관들은 앞으로 가능한 기관들은 어떤,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안들이 좀 있었으면 오늘 회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잘해 보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허전한 회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현

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이전기관들, 예를 들어서 의사당부터 해서 청와대부터 해서 올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그것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하고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용역 만능주의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 가지고 용역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용역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보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과제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의 때에는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좀 내실 있는 위원회 회의기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정말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챙겨서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한데 9월 28일 날 세종시에서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출범식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사실은 그게 사업계획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지금 7페이지 보시면 현재 협의회 활동계획, 시도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충청권의 서명운동을 언제부터,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서명운동을 해서 또 내년 2월쯤에 청와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기에 열거한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치에 관련된 어떤 기관들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단편적으로 뭐 정부·국회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물론 저희들이 그냥 찾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자료가 얼마큼 이렇게 충실할지 그런 건 좀 의문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이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앞으로 좀 챙겨서 추가로 위원님께 다 각자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최소한 회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고 앞으로 계획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좀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민·관·정TF 구성 운영이 있는데 그전에 협의회가 있으셨다고 그랬었죠? 그 협의회는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죠?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9월 28일 날 세종에서 출범식을 가졌고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 명단은 여기에 민·관·정 협의회 위원 명단이라고 그래서…

○임동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TF 구성은 이번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협의회가, 전에는 협의회로다가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균형발전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정일택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9월 28일 날 결성이 된 것이고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 업무는 현재 균형국하고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이미 조

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유치할 대상기관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저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뭐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저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투 트랙 전략을 이미 선정을 해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충북은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나 싶어서.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회의 자료에 세종시는 그래도 어떤 전략을 좀 정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충북에는 이런 거가 그동안 없었는지 아니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행정수도 원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민·관·정 협의회 제안을 우리 지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은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신 게 4개 시도가 공감을 했고 힘을 합치자 그런 데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9월 달에 이게 출범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충분히 못 드린 것은 지금 기본 큰 틀을 각 정당별로 거기도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그동안에 7월 이후에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 회의 자료에 담지 못했지만 저희도 지금 뭐 특별한, 이거를 동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한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없지만 그런 준비는 있고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자료가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4개 시도·군 같은 경우에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 옮기는 거 세종시 쪽으로 같이 협조하자 이런 차원이고, 충청북도의 로드맵은 먼젓번에 122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충청북도혁신도시에 유치할 것이냐 또 거기에 준하는 다른 공공기관을 발굴해서 어떻게 어떻게 또 우리 충청북도 발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다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큰 틀에서의 얘기는 위원님들이 우리 특위에서는 별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충청북도 해당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TF 할 때 용역을 주더라도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하고 혁신도시 시즌2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큰 그림은 정부기관이나 아니면은 또 국회의원 이분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결정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준비

된 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차원에서 동의하고 전적으로 참여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당장 혁신도시나 행정수도 이전을 또 논의하기 전에 우리 충북 도내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하고 혁신도시 이전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어떤 여러 가지 집중돼 있던 공적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균형발전을 많이 가져왔고 우리 충청북도도 진천·음성에서 혜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경제성 면이나 그런 걸 따지고 그거를 옮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했던 거고 또 그런 때의 정책이 지금은 참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잘했구나, 잘한 정책이다."라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 연수원들도 함께 10여 개 포함돼서 그때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사실은 자치연수원 이전이 지금 이슈가 돼 있고 많은 논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요구를 하고 또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도 산하기관들을 가능하면, 억지로 옮기자는 건 아니고 가능하다면 우리 각 시군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 균형발전특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것들은 당장 저희들이 논의를 함으로써 실행이 가능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엮어 보면 어떤 경제성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이 우선돼야 되고 시군으로의 어떤 공적 인프라를 이동시키는,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치연수원을 시발점으로 다른 기타 산하기관들도 각 시군으로 옮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옮겨서 지방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꼭 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원래는 업무보고의 건은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첫 회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위원님들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온 김에 원래 행정수도 완성에 관해서,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온 거고요.

이수완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혁신도시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배치될 거냐의 문제는 아마 또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혁신도시관리본부나 균형건설국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만 가지고 정책기획관에서 보고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회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도내 균형발전이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구성결의안에 전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갖고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또 추후에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직접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동향이나 협조 또 민·관과 연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단순히 정책기획관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부서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특위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특위가 우리가 일상적인 의회처럼

견제·감시하고 지적하고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도와 같이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간다는 생각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그냥 우리 위원회하고 틀린 거니까.

하나 여쭤볼 거는 민·관·정을 하는데 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아마 국회의 구성이 바뀌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권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도당위원장만 참석을 하셨고, 물론 내용 보면 중앙 차원에서의 국회 특위 논란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국민의힘은 민·관·정이라는 하나의 주체인데 참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지켜보자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O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지난번 9월 28일 세종에서 출범식 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앙당부터 참여하지 않겠다, 일단은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시도당까지 다 그게 전달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이게 로드맵이 개략적으로 만들어지면 아마 같이 동참하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O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협의하고 타협할 문제지만 또 도 입장에서는 무슨 당을 다 떠나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행정수도 완성이 충북의 미래를 더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도에서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지금 올해 설계비가 10억이 국회에서 반영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종의사당이 대략 언제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는 대략 계획은 돼 있나요?

O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지난번 출범하는 날, 9월 28일 날 의사당 부지를 둘러보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추진일정 같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의사당 추진 관련된 것도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계속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위원장 이숙애 저희가 이 특위는 사실 자주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좀 전에 김영주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함께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함께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건데 혹시 이번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용역비 말고 예산을 얼마 정도 '21년도에 편성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O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용역예산 말고는 아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드맵이 나오는 거 보고서 필요하면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선제적 대응전략을 빨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적어도 본예산에 최소한의 활동예산은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서, 여기에 보면 김태년 의원이 법 개정을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특위가 이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저희가 국회에 전달을 하든지 이런 저희가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특위가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특히 좀 전에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가셨지만,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만 참석을 하신 거고 지역내 균형발전이라든가, 균형발전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장님들을 모셔서 업무보고 들을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세종시만 완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충북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인기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회를 했다라는 뉴스를 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다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주지할 수 있는 언론과 함께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하셔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책연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학자 몇 분에 의해서 나오는 연구는 뻔한 연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대응하시라는 위원님들의 이런 당부를 좀 면밀히 받아들이셔서 수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심기보	전원표	이수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	정 훈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 3 호

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1면
-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2.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 16면

(15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과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의 건

-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15시10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조직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존경하는 이숙애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충북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3,079개 행정리·동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708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확대와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뉴딜사업에 1,93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두세 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시군대표 뉴딜

사업 중 신규사업에 3,979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에 3,57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한 충북형 뉴딜과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제3차 추경에 반영된 충북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에서 계획한 충북형 뉴딜사업에는 10개 사업에 2,371억 원, 한국판 뉴딜에 반영된 충북사업에는 31개 사업에 1,199억 원이 투입되는 등 총 41개 사업에 3,57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자체로 계획한 충북형 뉴딜사업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눠 말씀드리면,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ICT 진단 기기개발을 통한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구축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554억 원이 투입되며 그린 뉴딜 분야에는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구축사업과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771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산업혁신 분야에는 글로벌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사업과 미래유망산업 선점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에 1,046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경제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자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이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 중에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을 합친 개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판 뉴딜은 전체 160조 원 예산 중에서 지역사업으로 75.3조 원이 투입되며 디지털 뉴딜에 58.2조 원, 그린 뉴딜에 73.4조 원입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 자체재원과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은 공공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위기극복을 넘어 지속성장의 대전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합니다.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공간 뉴딜로 구성되며 추진체계는 현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조정관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뉴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세부 실행과제입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스마트 산업 시스템 강화, 신성장산업 고도화, 기술혁신 체계 구축 등을 위해 74개 과제 2조 4,22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스마트 물관리 및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구축, 저탄소·녹색도시 모델 창출 등을 위해 63개 과제 4조 9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휴먼 뉴딜 분야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10개 과제에 1,285억 원을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공간 뉴딜 분야에는 도로·철도 등 SOC 확충과 균형발전 공간 구축 등을 위해 5개 과제에 2조 4,719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총 152개 과제에 9조 3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지난 1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지난 국회 정부예산 확정, 국

비 확정 내시,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추가 발굴, 시군별 계획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내 인구와 산업 개발수요 등이 청주권역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에 지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2007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저발전 시군의 균형발전촉진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736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저발전 시군인 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등을 대상으로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 보통세의 5% 이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은 사업 선정을 위해 자문회의, 보고회 등을 거쳐 2010년도에 총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금년 연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기존 추진하던 공모사업과 인센티브 사업이 소규모 사업만 가능하여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두 사업을 통합하여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지원코자 '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3개 사업은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모 및 인센티브 사업은 '17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모두 완료하였으며, 행복마을사업은 매년 1단계로 20개 마을을 선정 지원 후 평가를 통해 그중 우수마을 열두 곳을 2단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매년 추진상황 점검, 관계관 합동워크숍,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은 3단계 사업 마지막 해로 3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22년부터 추진 예정인 4단계 사업을 위해 시군별 발전도조사, 지역 시군선정, 사업규모 등을 담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집중 작성 등 저발전 시군의 자립성장 도모를 위해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부터 6쪽, 사업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배경입니다.

2003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및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2012년 12월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2019년 완료되어 지역 간 불균형 시정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로 마련하였으나 정주여건 부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9대 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 시즌2를 선정하여 공공기관 이전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신성장 지역거점으로 육성 추진하고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과 상생발전 도모, 혁신도시에서 주변 지자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전략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및 과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계획으로 혁신도시 시즌2를 네 가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과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과제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운영제도를 추진하여 '18년 21.2%, '19년 20.4%, '20년 39.8% 달성 등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다음은 이전공공기관 주관으로 매년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18년 172개 사업, '19년 203개 사업, '20년 23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과제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6,697㎡ 연면적 7,44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국비 99억, 지방비 99억으로 전체 198억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연장, 일자리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센터로 '22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 9,343㎡에 300개 병상 21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으로 전체 1,401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4년 준공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협업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도, 진천군 공동 주관하여 국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비대면 교육특화, 교육콘텐츠 개발·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과제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산업단지·특구 지정 및 운영 추진입니다.

2011년 태양광특구 지정을 통하여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을 유치하고 2018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능형 첨단부품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2019년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지정 등과 연계하여 대학·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받아 에너지안전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3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2억 원 규모로 입주기업 임차료 및 부지매입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과제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직거래, 환경정화, 신규직원 스터디투어, 지역공동체 8개소 지원, 이전기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협의체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

행사, 진로체험, 지역주민 애로사항 불편해소를 위해 연 3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특구 현황 관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복합혁신센터 완공, 국립소방병원 준공 등 충북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상황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상주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통신, 교육, 공공서비스 기관의 이전으로 지역발전 견인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 및 500인 이상 대규모 기관이 없고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되어 연관 산업 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실적과 예산규모가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는 주요 사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추가이전 대응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2회 운영하였으며, 2017년 9월 충북연구원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국토부,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6월 충청권 민주당 당정협의회 시 추가이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충북혁신도시 방문 시, 그리고 11월에는 균형위 위원장을 방문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 수준인 충북혁신도시에 최소한의 보완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방침입니다.

우리 도의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중 공기업 대규모 기관을 유치하여 타 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충북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관된 친환경에너지 기관 유치 및 집적화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향후계획입니다.

중앙정치권과 관련 부처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예산규모와 매출액, 상주인원이 많아 지역발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그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21개 사업 중에 4개가 완료되고 지금 공사 중이 14개, 실시설계 중이 3개라는데 이게 '21년까지 다 마무리인가요?

우리 김인 국장님, 1페이지 설명할 때…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임동현 위원 예예.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다가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보통 한 이삼 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선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21년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년도에 선정될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이삼 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 '21년도라고 계획이 서 있는 거는 '21년 안에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예, 예산 확보해서 교부해 주는 것까지는 마무리되는데 사업이 완공되는 것까지는 이삼 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21년까지는 예산 확보에 대한 거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사업 진행에 대한 거는 그 후 이삼 년 이렇게…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숫자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국에 122개 기관이 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대상기관이요. 그런데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전원표 위원 12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이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건 저희들이 수요조사해 가지고 이전 안 된 것을 조사한 것이고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한 건 아닙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이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는데 예전에는 혁신도시를 각 도별로다가 배정을 했어요.

배정을 해서 몇 개의 공공기관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다 조율을 해서 줬는데 지금 시즌2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시즌2에서는 우리 대상 범위, 각 지역별로 지금 2차 이전을 원하는 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기관이 전이 안 지정된 것이고,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공공기관이전이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 지역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배정을 못 받은 입장이고, 지금은 저희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번 때 못 받았으니까 우리 지역에 연관성 있는 기관을 좀 달라, 그래 자꾸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원표 위원 지금 어떻게 이전을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 보면 향후계획이라든지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그렇게 지금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진전이 된다면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하면서 어느 시점이 될 때 저희

들도 그 준비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양질의 기관이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강원도에 몇 개 보내고 충북도에 몇 개 보내고 이렇게 다 조율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건지, 이게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전원표 위원 그런데 각 기관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어떤 권한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그 기관한테 로비를 하고 '충북으로 와라. 어디로 와라.' 얘기를 하지, 그게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대응 이게 되겠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찾아 방문하고 그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배정보다도 이렇게 좀 저희들의 기관에 맞는 양질의 기관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균형발전위나 국토부 이런 데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 측면하고, 지금 어느 특정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보내달라보다도 앞으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저희 지역에 이런 양질의 기관이 좀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건의를 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요.

○전원표 위원 그래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즌2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지금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는 먼저 기관마다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역 간에 갈등도 있을 거고 서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서로 달라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발표된 바는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 충북도에 1차 공공기관이전 때는 상당히 다른 도에 비해 가지고 좀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양질의 기관이 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렇게 해 달라,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일률적 배정을 하지 말고 기관의 특성, 성격을 고려해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 건의하는 입장입니다.

○전원표 위원 결국 각 기관 개개의 기관이, 별개 기관이 자기네들이 가고 싶다고 어디로 가고 그런 건 아니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전원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즌2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전과 같이 혁신도시타운을 별도로 조성해서 오게 됩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에 재배정하는 기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런데, 기존 혁신도시에 저희들 같으면 충북혁신도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는 거로, 지금 혁신도시가 전국에 열 군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혁신도시에다가 충분한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전원표 위원 그것도 아직 정부에서 결정이 안 된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전원표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데에다 계속 혁신도시 거기다가 추가로 입점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균형발전하고는 별개,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런데 지금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된 단계에서 다가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또 새로운 것을 마련해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혁신도시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국 권역에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부지나 이런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에, 국토 활용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전원표 위원 일단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신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원표 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균형국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도 혁신도시가 저의 지역구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게 혁신도시 주민들이 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히려 더 실망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셨지만 혁신도시가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고 그래서 다 정부를 믿고 그리고 충북도를 믿고 혁신도시로 아파트 먼저 되니까 다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 거기 직원들조차 한 25%밖에 안 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상정 위원 혁신도시 이주율이 전국 최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무늬만 혁신도시지 실지로 혁신도시의 어쨌든 내용, 도시적 특성, 일자리, 정주여건 이런 건 너무나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서 좀 나아지려니 하고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혁신도시 시즌2를 우리가 균형발전 위에서 내용으로 잡아서 그나마 관심 가지는 부분들은 다행이지만 이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신 현재 추진상황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혁신도시 시즌2 얘기할 때부터 그러면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고 핵심은 공공기관들이 훨씬 더 이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맹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알맹이를 어떻게 채우는 거가 초점이 돼야지 '기존에 하던 계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어쨌든 기존에 추진하던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주민들도 저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혁신도시 위치가 수도권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때 기업 유치할 때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와 있는 입장이고,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돼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도 좀 상주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 점에서 적극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주여건 조성하려고 주민들의 상주여건을 늘리려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고 이것이 단시일에 되는 문제가 또 아니고요. 그 측면이 있고, 또 그와 연계해 가지고 클러스터 용지도 지금 분양이 저조한데 그것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이자로 해 준다든가, 이것을

또 지금 소분할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은 또 용도변경해 달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계속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런 중에 있거든요.

그 측면이고 또 이와 별도로 지금 앞서 한 120여 개 기관도 지금 남아 있는, 저희들 조사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시간을 갖춰가면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설계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충북도가 어쨌든 가장 주체잖아요. 충북도가 중심이 돼서 음성군·진천군 이렇게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북도가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우리 단장님 와 계시지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신도시에 대한 충북도의 역할 이 부분이 기존 사업들 하는 데에 있어서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소방전문병원 얘기하시는데 국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들어갔나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병원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 너무 황당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충북도가 중심을 갖고 책임져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나눠 있지만 그런 조율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나가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저희 지사님도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이렇게 오실 때마다, 대통령 오실 때도 건의하시고 국토부장관 오실 때도 쫓아가시고 또 지난 11월 달에는 균형발전위원장님 만나봬 가지고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뛰고 두 번째 국립소방병원 여기에 관련돼서는 저는 전액 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정 위원 음성군의 군비 부담해야 된다 그 얘기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거는 아닙니다, 예예.

○이상정 위원 그거는 도가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런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얘기 중앙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었고요. 기재부에서 부담하라는 얘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 서운해하는 부분들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중간 한복판에 로데오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계속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그런 것도 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여건이 그랬는데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과 저희들 협의체를 공동으로 해 갖고 계속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건을 봐 가면서 좀 더 그런 방안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사업은 혁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리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2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계속 얘기 나왔

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122개 기관이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앞으로 공이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하고, 저는 우리 충북도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대상 기관들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2차 기관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 같이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전략적인 건데 일단 뭐냐 하면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봤을 때 매출액이나 그다음에 예산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있는 중에서 저희들 최하위다 꼴찌다, 상당히 최하위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로 만들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 좀 보고 고려해 달라 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장님도 저희들 지사님과 면담했을 때에 충분히 충청북도 입장을 고려하겠다, 다만 지역 간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장도 상당히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만약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막연히 달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수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제삼자가 봤을 때 '아, 맞아 충청북도 혁신도시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나중에 돼 가지고 진짜 쭉정이만 갔구나' 그래서 양질의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다음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관련한 그동안에 지금 여기 보면 5개 일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분명히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도 이전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전하고 '다음은 그러면 어디냐' 이런 구상들이 계속 나올 텐데, 공공기관 이전은 저희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단지 그냥 말로만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전략적인 측면들까지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이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의 고견과 관심과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제일 앞에 시군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저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도에서 노력했다라고 보기는 너무 약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심적인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균형건설국장 김인 지금 내년에 4단계 계획 수립할 때에 한번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우리가 균형발전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지만 각각의 시군, 7개 시군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맞는 것, 지금은 대부분 관광사업 위주잖아요? 7개 시군이 다 똑같은 관광사업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을 정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물론 1단계, 2단계 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 완료된 것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왕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것 같으면 그 비고란에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두시지 말고 상세하게, 이거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윤남진 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비고란에 좀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서 물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현황은 잘 알지만 또 다 지역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3단계 전체 7개 시군이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모두 마무리가 된 거고요.

3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략, 이게 군 쪽으로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5년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을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확정 후 이삼 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 각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순조롭게 한 70~80%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18년도에 선정된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예를 들어서 7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고 2019년 사업…

○윤남진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예예.

○윤남진 위원 기왕에 보고해 주실 것 같으면 요 4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어느 사업은 완료가 됐고 이렇게 좀…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잘 안 들리는데…

○윤남진 위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사업명을 말씀드릴까요?

○윤남진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선정된 거 같은 경우에는 보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또 옥천에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또 영동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또 괴산에 버섯광장 조성사업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제천에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증평의 통합가족 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단양의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또 7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하소천 만들기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 4월경에 준공 예정이고 또 보은의 뱃들놀이터 및 편의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옥천의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사업 또 영동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아열대 온실 조성 또 증평의 생활SOC형 행복라키비움 조성 또 괴산의 달래강 물빛따라 고향 가는 길 조성, 단양의 두산지구 도로정비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된 게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6

월이나 9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윤남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시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죠?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간혹가다가 행정 처리상 예를 들면 문화재 조사하는 차원에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거의 다 해결이 돼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윤남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제 혹시 TV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충북혁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어제 프로그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로 짚은 거는 지역의 정주여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이전률이 낮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통근버스 운행을 통해서 수십여 대가 6시 8분 되니까 다 출발을 해서, 혁신도시를 출발을 해서 그야말로 혁신도시는 공동화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들과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금지시켜 달라고, 특히 코로나 관계 때문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고 이런 입장이고, '왜 충북도만 그렇게 하느냐, 세종도 가만히 있고 강원도 원주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가급적 우리 지역의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많이 그거는 노력했고요.

다행히 정부에서 '22년도부터 통근버스를 없앱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또 보냈죠.

보내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부기관은 괜찮은데 정부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이런 공단 같은 데요.

그런 데는 또 노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또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통근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주여건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까 국장님께서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전국 타 시도의 혁신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정주율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주변지역 금왕이나, 음성이나 진천에서 또 이렇게 빨대효과로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거기에 정주하는 비율은 너무 낮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인데 사실은 교육의 문제가 있고 문화·복지·의료 등의 문제가 있는

데 여기에서 교육의 문제는 그래도 고등학교 2개, 중학교가 지금 2개가 됐죠? 그리고 초등학교 2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봤을 때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근린생활시설조차 활용을 하지 않으시니까 주변의 상인들조차 폐업을 하는 현실까지 오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상인들, 지역의 상가 이용하기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진천이나 음성군과 함께 협의하셔서 고민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쪽에 공기관의, 지역화폐도 마련됐지만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양쪽 군수님하고 해 가지고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기관이 쓰는 데에 대해서 아무 지역 권계없이 그래 하고 그 지역의 행정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단일 도시다, 단지다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그 외로 정주여건은 정주여건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미분양된 클러스터 용지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더 거기에 단지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양가를 좀 내려달라든가, 그다음에 무이자로 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분양면적을 소분할해 가지고, 대분할하지 말고 소분할시켜 가지고 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용도변경해 달라든가 이렇게 저희들 계속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균형발전위에도 건의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기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잖아요, 뭐 분양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저는 충북의 혁신도시는 가족동반 거주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만드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뉴딜 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오늘 보고를 하셨고요.

사실 1단계 뉴딜사업에서는 뉴딜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다,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비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비교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하신 자료 중에 기존의 사업과 신규사업이 구분이 잘 안 돼서 3단계의 신규사업 16건 이외에는 4단계에만 신규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도 그래 표시가 돼 있지만 오늘 보고의 초점은 4단계가 초점이고 그게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니까 1·2·3단계는 거의 다 그냥 사업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인 거죠?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우리마을 뉴딜사업도 원래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신규라는 의미는 그런 측면에서는 신규가 맞고요.

다만 한국형 뉴딜이라는 발표 이후에 충북에서 새롭게 기획하고 디자인한 거는 4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4단계요.

여기에 2단계에 보면 투자유치 뉴딜사업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그냥 해 왔었던 사업이신 거죠? 보조금 확대라든가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정책수단은 동일하지만 더 확대된 규모로 추진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2페이지의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 대표사업에서 보면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개발 플랫폼 구축이라고 100억 5,000만 원 이렇게 대표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성됩니다.

소비자들의 사용된 데이터들, 테스트된 장비의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일종의 빅데이터 형태로 공유하고 서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이고,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들 화장품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는 테스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기존에 화장품 업체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기업들 주체들이 다양하고 많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공유하는 것을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여기에서 이 빅데이터는 그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그다음에 연구자, 기업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공유되는 형태가 빅데이터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 공유를 업체들이 수용을 하는 건가요? 동의를 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공유를 원하는 사람끼리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위원장 이숙애 이것은 어느 지역에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송 지역을 후보군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번 정부 예산 사업에도 동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기로 이번 국회 증액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VR·AR 테마파크는 어느 지역에다 하실 예정이시죠?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구체적인 지역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후보지역을 여러 군데를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청주에 개발되고 있는 산단 쪽이 후보군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입지와 형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와 진전이 있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나 충북에서 예산은 3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민간의 공모를 통해서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구체적으로는 국비 30억, 도비 20억, 민자 300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지금 구상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총액이 350억 원이군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그래서 민자가 3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구축은 지금 대부분 충주 쪽에 이거 수소와 관련한 산업들을 구축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그런 입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음성 쪽에 가스안전과 관련된 교육관이라든지 가스안전공사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유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해서 평가인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수소 모빌리티는 주로 충주와 음성에 걸쳐서 이렇

게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클러스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평가인증 시설입니다. 일종의…

○위원장 이숙애 평가인증 시설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수소차 연료전지 중에 핵심 부품이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택 제조기술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인력하고 장비하고 연구시설들을 해서 지금 한 26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게 순수하게 이번에 충북형 뉴딜은 충북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내신 거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에 340억 원이 있는데요.

충북형 청정연료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고 생각해 왔던 것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청정연료를 어떤 걸 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표현을 국비 확보 받는데 그린뉴딜스러운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한 거고요.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걸 포집을 해 가지고 메탄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양 쪽하고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부분이 있고 관련된 국가 연구기관하고도 연구가 진전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단양 쪽으로 이 관련된 시설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물밑작업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숙애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전이 됐던 거고요.

이거는 이번에 국회 증액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필이 되어서 일부 국비가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지금 한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먼지는 포집이 되죠?

그런데 냄새 포집됩니까, 냄새?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실장입니다.

상당히 기술 테크닉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냄새 중에서 지금 어떤 냄새를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심기보 위원 하수처리 과정 같은 데, 충주에도 보면은 하수처리하는 데 동네 가면 냄새 심하기든요.

그런 데 뭐 냄새 포집 같은 게 안 되나? 기술 아직 안 되나?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그런 수질·대기 환경 관련된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최근에 진전이 많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

2.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6시07분)

○위원장 이숙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협의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 일정상 조금 부득이 회의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자 마지막 페이지에 "여·야 합의로"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라는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합의로, 뭐 여·야 이 부분은 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상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냥 건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내서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별도로 내야 돼서, 또 박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님이 건의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수정안 내에서 또 수정안 통과하고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박상돈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안 내용 논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중에서 보낼 곳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포함을 하고 또한 건의문 중 여·야의, 표현이 여·야로 된 것을 삭제를 하고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등의 문체의 자구수정을 하는 것을 수정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뽑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

신 수정안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심기보	전원표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	정 훈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	한순기
정책기획관	정일택
·균형건설국	
국장	김 인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

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4 호

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8일(목) 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1면
-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의 건

-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

(14시03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입니다.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신행정수도권의 관문역할 수행, 6대 신성장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충북 분야별 발전을 도모하고, 청와대·국회 이전에 따

른 정부 주요 기관 등 추가 유치, 또한 11개 시군 특성과 의견을 반영하고 충청권 4개 시도 협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협의, 용역 심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계약 공고 중에 있고 2월 10일경에 계약 예정입니다.

2월 말경에 착수보고회를 거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도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충북 자체 민·관·정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 도 관련 부서, 도 의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한 충북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설명과 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고 2월 10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TF를 통해 발굴된 충북발전 전략과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협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에 충청권이 공조 대응하기 위해 우리 충북이 제안해서 지난 9월에 20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정부 대응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에 개최 예정인 1분기 협의회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곧바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광역생활경제권의 핵심적 선제 사업으로 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충청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4개 시도 연구원이 함께 수행할 이 용역은 다음 달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협력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보고자료 4쪽,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도는 자체적으로 4단계에 걸친 충북형 뉴딜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월 25일 현재 1단계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3,673개 사업을 추진하고 연인원 12만 명 규모의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단계 투자유치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25개 회사에 703억 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100억 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단계 시군대표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29개 사업은 국비 755억 원을 확보하여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평종합운동장은 내년 완공 예정이고 영동 체육공원은 올해 2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4단계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은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4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157개 과제, 10조 8,000억 규모의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에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11개 시군 자체 뉴딜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뉴딜공모팀을 신설하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그린·휴먼·공간 등 4개 분과의 뉴딜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조직 기반을 갖추어 나감은 물론,

공모사업 응모계획 심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운영되는 심사평가단을 통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중점 뉴딜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등에 참석해서 부처별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계획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금주에 지역균형 뉴딜 및 공모사업 추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도 6대 신성장동력 산업과 연계한 대표사업을 선정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중앙 부처 뉴딜·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신규사업을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확보 및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추진상황 보고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조정·관리와 뉴딜 붐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충북형 지역 뉴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 보고자료 8쪽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시멘트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세수의 65%를 피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힘써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논의되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고 금번 21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생산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주민의 반대기류가 형성이 되어 법안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쪽,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전남 등 관련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단, 시장·군수 공동건의문은 물론, 충북 11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강원·충북 시멘트 생산지역 시장·군수 공동협약서 등 시군 및 시도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단양·제천 지역주민에게 시멘트세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반대기류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지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 통과를 건의한 데 이어 올해는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등 위원회 속개를 건의하는 등 정부·국회·정당 건의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향후계획입니다.

주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민·관·정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충북·강원 공조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 구성·운영 계획을 협의하고 2월 중에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멘트세 신설에 대한 지역 내 찬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멘트세 신설과 기금 조성 간에 찬반논쟁을 종식시킬 방송 토론회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충북세정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설명하는 등 국회 입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시멘트세 법안심사 속개를 건의하는 한편, 강원 등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쟁점사항 대응논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성의 법적근거로 안정적·지속적 재

원 확보가 가능한 시멘트세 신설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및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과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국축계획은 2005년 「철도건설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금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거쳐 수립될 예정입니다.

충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업 반영을 위해 '19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최적노선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19년 10월 충청권 광역철도 등 13건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후에는 논리 등을 보완하여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내역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오송연결선, 중부내륙선 지선 등 13건 사업입니다.

건의노선은 3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건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입니다.

'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년 9월 대전, 세종, 충북이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제출한 이후 12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 대전, 세종, 보령 등 신행정수도권 내 광역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의 핵심사업입니다.

특히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등의 효율적 수단으로 급부상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핵심사업으로서 전체 147.5㎞ 구간 중 충북도 도심을 통과하는 신탄진~조치원~청주시내~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사업규모는 49.3㎞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 5,776억 원입니다.

5쪽, 청주시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효과입니다.

첫 번째, 85만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일 16만 5,000명 규모의 인적교류가 광역철도 구축으로 22만 명으로 약 33%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통행시간 및 교통비의 획기적 절

감입니다.

청주에서 대전 간 통행시간은 70분이 단축되고 교통비는 3,900원을 절감하게 되며 세종 간은 통행시간 52분이 단축되고 교통비는 1,450원이 절감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청주시민의 오송역 이용자 증가입니다.

서울 간 버스 및 승용차 이용자가 KTX로 교통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현재 연간 860만 명의 수준에서 1,016만 명의 수준으로 약 1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오송연결선입니다.

'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기술적 문제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19년 12월 자체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년 4월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을 추후 별도 검토하는 방안으로 오송역에서 청주역까지 12.6㎞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사업비는 4,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오송 분기기를 시행 중인 오송~평택 간 2복선 사업에 우선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오송역 상행 7㎞ 지점에 550m에 이르는 구간으로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 및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입니다.

먼저 중부내륙선 지선입니다.

감곡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노선으로 54.9㎞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조 6,499억 원입니다.

경강선 복선전철, 중부내륙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과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및 강원권과 충청권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 가능하며 음성, 금왕, 혁신도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입니다.

동탄에서 혁신도시, 청주시내를 거쳐 오송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104㎞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조 7,049억 원입니다.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을 거쳐 경부·호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수도권 기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접근성 개선의 효과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오송역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과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노선 성격이 다르나 중복구간이 있어 어느 한 노선이라도 반영될 경우 나머지 노선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입니다.

대전 오정역에서 옥천에 이르는 광역철도의 사업규모는 20.2㎞이며 총사업비는 403억 원입니다.

옥천군과 대전시를 광역철도로 연결하여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 대중교통망의 개선과 침체된 충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에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역 신설과 운영비 분담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었던 사업입니다.

'19년 10월에 국토부, 충북, 대전의 기본계획과 사업비 분담안이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3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21년 설계를 거쳐 '22년 착공하여 '23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기타사업입니다.

첫 번째, 원주연결선입니다.

강호선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목포~강릉 간 직결 운행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복선 기준 규모는 9㎞에 총사업비는 1조 1,764억 원입니다.

두 번째,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입니다.

향후 남부내륙철도, 수서～광주 구간 개통에 따른 소요량 확보와 소외지역인 동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가역 기능변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3㎞이며 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금가신호장에서 동충주산업단지 지선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충주 동부지역 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이며 총사업비는 1,579억 원입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입니다.

중부권의 서해안 산업클러스터와 동해안 관광벨트 상호 연계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45㎞이며 총사업비는 4조 7,824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입니다.

중부 내륙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20㎞이며 총사업비는 4조 8,000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청주공항～보은～영동 간 철도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권역 확대와 보은, 영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및 청주시의 광역도시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5㎞이며 총사업비는 2조 1,446억 원입니다.

15쪽 일곱 번째, 충주～보은～영동 간 철도입니다.

충북 북부권과 남부권을 잇는 철도로 도내 균형발전 및 관광지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이며 총사업비는 2조 5,706억 원입니다.

마지막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입니다.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과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2.5㎞이며 총사업비는 5,081억 원입니다.

16쪽 두 번째,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배경입니다.

도내 인구와 산업, 개발수요 등이 청주권역에 집중되고 진천·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역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발전지역에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집중투자로 지역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도 보통세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공모 및 인센티브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원 시군 선정은 단계별로 지역발전도 분석을 통해 발전도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738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분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은 특화산업 육성·지원, 산업단지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2015년 대비 2018년도에 각각 5.3%, 6.3% 증가하였으며 관광객 수도 2015년 대비 2019년도에 7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단계 지표 활용 발전도를 전후 비교해 보면 저발전지역의 지역 격차는 '16년에 -4.27에서 '20년 -3.96으로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18쪽, 4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방향입

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저발전 시군 집중 지원으로 저발전 지역의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4단계 지원대상 시군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 대표성 있는 지표, 사회반영 최신 지표 등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지원기준 및 재원 검토입니다.

사업별 지원기준은 발전도 분석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재원은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3단계 수준인 보통세 3% 이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계획입니다.

'21년 2월까지 불균형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선정과 지역발전도 분석을 통해 저발전 시군을 선정하고 '21년 4월까지 시군별 사업계획 발굴이 제출되면 도 및 센터와 연계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현지실사, 보고회 등을 통해 저발전지역의 성장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사항을 지금 낙후 시도 6개 군, 제천시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성, 진천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내용이?

16페이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발전 시군 해가지고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 3단계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 4단계 때는 전체 11개 시군 대상으로 이런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어느 단계에 포함할지는…

지금 어디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우리가 그런 지표 같은 걸 여러 분석을 통해 가지고 4단계 때 새로 선정할 겁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7개 시군 단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수완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네, 현재.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또 앞으로 3단계부터 신규로다가 진천하고 음성까지 포함해서 9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해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 그것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우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게 대상은 되는 거죠. 대상은 되는데 상대적으로 했을 때에 이 지역이 저발전 지역에 포함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표로 여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선정할 것입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60억 정도 돼요, 이게.

한 7개 시군에 5단계 사업으로다가 총예산 금액이 대략 150억 원에서 한 160억 정도 되

는데 여기에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5% 이내.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수완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시군 단체에서 그렇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음성, 진천이 들어가면은 그 160억, 150억이 줄어서 백이삼십 억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쓸 수 있는 이게 양이.

그렇다고 뭐 도 예산이 막 이렇게 팽창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린 보통세 징수액이 5%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늘어나면은 예산도 커지지는 못할망정 같은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6%로 올린다든가 상향 조정한다든가 이거는 근본적으로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브리핑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우리 김인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이랬을 때는 우리도 여기 지금 현재 보통세 5% 이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 확대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군 대상 여부는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부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지역이 된다 안 된다, 몇 개 시군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종 4월 달에…

이것을 상반기에 6월 달인가 이때가 되면 그때에 우리가 실사를 통해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렇게 PPT 자료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거예요.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자료를 갖고 오시면 안 되지.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 제 말씀은 3단계 때는 이렇게 했는데 4단계에서 또 대상 시군을 넣을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상 시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이수완 위원 아,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지금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음성, 진천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3단계 사업부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럼.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새로…

○이수완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지만 예산 규모는 5% 이내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6%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사업이나 내내 균형발전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러면 충주만 빠진 거네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요 그렇게…

○이수완 위원 청주시만 빼놓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고 지금은 대상에 들어간다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수완 위원 못 드리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것은 아니고 된다면은, 만약에 그게 우리가 대상에 들어간다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이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더 재원 확

보 측면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환경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행할 때 문제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 부러지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그런데 지금 이게 국장님께서 철도에 관해서 13개 지역에 대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내역" 이렇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이수완 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어디 뜬금없는 거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발전계획안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혼돈이 오는 부분이 여기 이상정 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동탄하고 혁신도시로 우리 청주공항 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감곡에서 혁신도시 오는 거.

어느 게 먼저 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래보다 계획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복선이었었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또 단선으로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선으로 바뀌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복선으로다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것은 지금 계획은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철도는 요즘은 다 복선으로 갑니다, 또 전철로 운영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수요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운영할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낸 것은 지금 한 거는 다 복선 개념으로 이렇게 대다수가, 단선 개념도 있기는 있지마는 추진과정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복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팀장님하고 주무관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하도 갑갑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이왕에 선로를 만들 때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복철을 못하면은 부지만이라도 확보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교통량이 늘면 한번 깔면 되니까.", "그거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돌었기 때문에 맥이 달라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주무관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늦어도 복선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제가 건설소방에 있을 때 보고받았을 때에는 230㎞로다 복선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청주공항에서 동탄까지 34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안성하고 거쳐서 갔을 경우에.

그러면 1시간 안에 서울시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청주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안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추진상황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류돼서 사업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충청북도를 끌고나가기 위해서 이런 철로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죽 나열해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전철 같은 경우는 대

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에서 지금 조치원 거쳐서 청주공항 해서 청주시내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철도가 맥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찍는 것마다 1번, 2번 순위가 바뀌고, 이게 로드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에서 최우선 순위는 이거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순번이 매겨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고 막 이렇게 돼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매겨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야, 다음 순번은 우리가 되겠구나.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1번이다. 청주공항에서 동탄까지는 1번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데는 전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이수완 위원 동탄이나 감곡에서 연결이 되면 그 라인 타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돌면 되거든요. 수서로다 이렇게. 그렇죠?

통탄으로 돌든 수서로 돌든 돌면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 청주공항까지 온 길로 그냥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철도가 없어 가지고. 받아서 가져갈 데가 없잖아요.

원주로 갈 수도 없고 제천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도권의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형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청주공항에서 동탄이 됐든 감곡이 됐든 2개 다 좋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청주시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까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죠? 좀 늦어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3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각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고 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계획에 이것을 담아놔야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사업을 수요나 이런 걸 봐서 빨리 할까 늦출까는 있는데 지금 그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게 되면은 사업이 빠질 수 있습니다. 추진이 그만치 10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는 모든 계획 13개 해서 요구한 대로 다 담기를 원한 것이고 다음에 계획에 담겨 놓으면은 그다음에 추진과정에서는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가지고 사업시기는 조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국가 몫입니다.

저희들 지방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 몫은 뭐냐 하면 이걸 국가계획에 다 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보다도 저희들은 13개 사업이 다 이래 담겨야 되는 게 맞고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다면 그다음에 실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국가에서 할 때 저희들은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면서 요구를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재정여건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순위를 가지고 어떤 게 우선이 된다, 이거 전체 계획 13개 가지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13개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세우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이수완 위원 13개 중에서 몇 개가 반영이 되겠어요? 한두 개도 어려워요. 다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죠. 노력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몇 개, 몇 개도 어려워요. 한두 개 들어가면 다행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 집어서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내가 에둘러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말귀를 알다듣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렇게 조치원으로 해서 청주공항, 청주시내~청주공항 가면은 그거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로 나가는 길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순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하여튼 저희들은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1개라도 더 우리 충청북도가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아, 우리 정책기획관님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뉴딜 사업에 있어서 단위가 큰 게 있잖아요, 2,000만 원짜리 말고. 그렇죠?

큰 금액, 4차선 연계사업을 한다든가 뭐 300억짜리, 400억짜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표를 보면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꼭지는 달아줬는데.

이거 사업이 뉴딜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빨리빨리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 늘어지는 사업하려면 신규사업 하나 반영되는 거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기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총괄적으로 뉴딜 사업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시군 뉴딜 사업을 선정하면서 시군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 시군에서 대표될 만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별로 보면 추진시기가 어떤 조사까지 이루어진 어느 정도 준비가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가 됐든 공사 착공비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일부를 반영시켰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준공시기 정도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해서 재정이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예산부서하고도 또 실·과하고도 그렇게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뭐. 그렇죠?

지연되면 약속 어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멘트 자원시설세 관련해서요.

설명은 잘 들었고 과정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시멘트 자원시설세냐 아니면 기금이냐라는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기금으로 하는 그 지역 제천·단양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금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장들을 세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토론회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게 적극적인 수용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기금의 개념과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은 소위 기금관리법상 공적기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기부금 내지는 상생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가 지역주민들한테 소위 명절이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생활지원금 형태로 주는 자금을 이분들은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은 제도화됐거나 체계나 공식화가 된 게 아니고 시멘트 업계가 여유가 생기고 일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의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금과 세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제대로 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또 지역 여건 개발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세금으로 주장하는 거고요.

다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멘트 업계가 소소하게 이렇게 자주자주 푼돈을 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솔깃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로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세금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결국 이게 돈 나오는 거는 비슷하지 않느냐,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그런데 왜, 또 실지로 쓰는 것도 사실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느냐에 좀 거기에 대한 답답한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그쪽 기금으로 하자는 측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업들이 소위 명절 때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제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종의 병풍처럼 주민들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색내고 싶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입막음용으로 주는 돈을 그거를 존중하고 우리가 끌어안는다는 거는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요.

사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딛고 우리 도시가 발전한 게 시멘트 업계지 않습니까? 그럼 왜 지역주민들이 이런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되고, 그것도 입막음용으로 간헐적으로 주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분개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이 제대로, 희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계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기

금을 업체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떡값 주듯이 줘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게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게 입법화에서도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제가 기왕에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강변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성격의 기금을 주장하시는 지역의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협의하고 합의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진짜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이 정작 여러 가지 폐질환을 안고 있는 분들 또 환경기초시설도 없는 거에 대해서 업계의 그런 노림수에 놀아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대응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도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그게 변화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논리싸움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적으로 해서, 어쨌든 결국 이렇게 손부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제가 보고 내용도 그렇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점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 업체들의 기금이라는 좀 호도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충북 도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를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방송 토론회든 행사든 위원회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잘 돼서 원래 목적되는 부분들이 잘 달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김인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쪽에 나와 있는 13건을 우리가 중앙에 이대로 건의한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중앙에서 우리 충북의 13건을 이 순서대로 평가를 할 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이 몇 건이 들어왔고 지금 전체 몇 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균형건설국장 김인 지금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 170여 건을 지역에서 건의했고 규모는 255조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170여 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170건 이상에 규모는 250조 이상, 255조 정도 건의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계획 규모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재원규모를 40조 할 거냐 50조… 3차 때는 40조 규모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기재부하고 랜선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기재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게 없는데 계속 국토부는 확장할 입장이고 더 소위 얘기하면 크게 가자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재정을 다루어 가지고 최소로 가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숫자는 나온 게 없고요.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13건을 계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저희들은 반영되면 좋겠다 싶고, 그걸 떠나서 우리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거든 간에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는 입장이고 다만 몇 건 들어갈지는 모르는 것이고.

좀 전에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마는 사업 추진절차는 그때 우선순위가 나오지마는 계획에서는 우선순위 없이 전체가 몇 건 들어가든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전체 예산을 3차 때 45조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 내지는 그것보다 확 대폭 늘린다 그런 부분들도 안 나와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런 것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혀 액수는 안 나온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전체 감을 잡기가 어렵겠네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전혀 없고 총액만 기지고 이래 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도 의견만 들어주고 논리싸움만 계속 하는 입장이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정해지고 시간 되는 대로 공청회 거쳐 보면 그때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4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도 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이나 진천이나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좋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만일에 양개 군이 다 안 되면 또 이게 군 내에서 아주 저발전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군 자체적으로 원래 이대로라면 진천하고 음성은 기존의 3단계처럼 하면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군이 그런 정도의 능력들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자체적 균형발전사업들을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진천이나 음성 이게 2개 군 정도 해서 아주 저발전지역은 내부적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면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개 군에서도 아주 심한 데가 있거든요. 나머지 7개 군의 면 단위의 평균에도 미달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 균형발전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부응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지금 전략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저성장 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의 길로 가는 그런 제도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진천 중에서도 아주 저발전된 면지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정 위원 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 행복마을 우리 뉴딜사업이나 지역균등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확대하는 방향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쪽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3단계까지 7개 군에 한 게 너무 기계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7개 시군을 나눠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다 해서 나머지 지

역의 면 단위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인 특별회계 액수를 5% 이내로 해서 보통 3%로 했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현재 3%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조례는 보통세의 5%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정 위원 3단계까지 3%로 한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3% 수준으로 해 왔습니다.

○이상정 위원 4단계도 그렇게 예상하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4단계 되면 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를 키워 가지고, 파이를 키워 가지고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가 청주시 중심의 충북의 집중된 발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 공론화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를 어쨌든 더 상향으로 올릴 수 있는, 4%가 됐든지 3.5%가 됐든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가서 심사를 해 보면 이게 여기 자료는 조금 더 다양한 거로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사업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거의 다 관광사업, 개발사업 중심으로 큰 차별성들이 없어요, 7개 시군이.

그래서 그거를 전체 7개 시군이 똑같은 관광개발사업, 둘레길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다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4단계 사업 할 때는 훨씬 더 지역에 밀착한 그리고 각 시군별로 차별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에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가점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적극 노력하고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이상정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7개 시군이, 기본 최소한 6개 시군은 다 이렇게 관광성 사업이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저희들도 지역별로 다 이렇게 테마가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도 조례에 보면 5%까지 조례 범위 안에서 저희들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충청북도 대응전략은 우리가 한 차례 1차 특위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됐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특별하게.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위에서는 주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관련한 합의문과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 위주로 드렸고요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라든지 TF 구성이라든지 협의회 운영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추진사항이 있어서 오늘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 보면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건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청북도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따로 들어 보니까 국회가 본청은 헌법적 판단에 의해서 내려오기가 어렵지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방안을 국회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확인된 게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9일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단 TF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에 설치하고 상임위를 10개 또는 11개, 11개 정도를 이전하는 걸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것 관련된 '21년도의 예산 일정 부분이 세종시 쪽에 반영이 된 게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 위원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한계기 있으니까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아마 서울이나 과천에 있는 부처의 상임위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이전을 하는 걸로 추진, 그렇게 상임위가 이전한다는 것들이 온전하게 국회나 행정수도 완성은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기나 물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차 철도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데요.

이것도 다 건의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건의하시고, 건의하는데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 나왔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 13개 사업들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네?

○김영주 위원 13개 사업 다 건의가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서가 중요도나 충청북도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건의의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순위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까 이수완 위원님은 혁신도시 지나가는 걸 먼저 위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김영주 위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맨 위에 올라간 것이 그래도 도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닙니다. 이거는 도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은 내 지역이 가장 1번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의 입장에서는 각 시군의 모든 사업 13개가 다 동등한 최우선 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왜 1번을 충청권 광역철도로 올렸고요. 예?

왜 1번으로 올렸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가 더 많습니다.

왜, 1번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거는 그냥…

○김영주 위원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규모입니까, 거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게 지금 위원님이 규모나 비용 봤을 때에, 사업규모나 사업비 봤을 때에 순서대로 적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리한…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13개 사업 가지고서 빵빵이 돌려 갖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른 지역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김영주 위원 보편적으로 볼 때 다 반영시킬

수 없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4조 나오더만요. 그렇죠?

아까 뭐 10년 동안 몇 조야, 40조 들어간다는데 충북 것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할 테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거 지적 안 하려다 지적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갖고요.

2페이지에 3번 중부내륙선 지선 몇 억으로 돼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중부내륙선 지선 말씀입니까?

○김영주 위원 네.

○균형건설국장 김인 거기에 54.9㎞에… 오타입니다.

○김영주 위원 1.6억 원이면 무슨 창고 하나 지어도 1.6억…

○균형건설국장 김인 오타입니다, 이거는.

○김영주 위원 예?

○균형건설국장 김인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래서 지적 안 하려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해서 지적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계산하다 보니까 틀려요. 이거 도대체가 얼마인가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조인데 억으로 잘못 표기가 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냥 업무보고고 그리고 또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계획은 주로 건의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해 주시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균형발전사업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저는 1단계부터 지켜봤는데요. 5%로 정해 놓고 이내라고 해 놓고 5%를 왜 한 번도 안 맞추냐, 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낙후지역 정도가 틀린데 그러니까 윤남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괴산의 지역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천도 처음에는 안 들어갔다가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논란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차이가 똑같이 사업별로 진행하는 것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지역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특히 진천, 음성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발전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인구 20만 이하 도시 지원사업,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잡고, 보다 보니까 사업도 이게 원래는 저발전지역에다가 특별하게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별도로 심사해서, 그렇죠?

일반사업은 사업부서에서도 하고 이제 예산부서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부서와 균형발전과에서 이 심사를 하기든요.

이 예산 심의 하나하나의 사업도 그 사업부서에서 받는 게 의회에서도요 균형발전국에서, 그렇죠? 균형발전 건 사업으로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단계에 있어서 줄어드냐 늘어나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낙후지역이라고 우리가 기본안을 설정하는 지표가 달라지면.

그거는 명확한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화사업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일반 시군에서는 어차피 이 돈도 돈입니다. 그렇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도비야.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도 도비입니다, 특별회계 다른 것도. 그다음에 무슨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조정교부금도 또 그 돈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

업을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이 죽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회계,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이거는 또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마다 정해진 대로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특화사업,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에 맞도록 그건 아마 계속 시군에 얘기하시고 또 심의위원들이 잘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오늘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좀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틀에서 봐서 건의 아니면 앞으로 계획 이런 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느냐 하면 지지난번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충북에서 가장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 괴산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괴산군 자체 내에서 괴산군민만으로 해결하기는 이거는 굉장히 버거운 문제였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도에서도 좀 나서줘야 된다.

사실 저희들이 중부4군에 있다가 동남부4군으로 갔습니다.

괴산군이 그동안 중부4군의 단체장들과 중부4군의 군민들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성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 차가 됐어도 정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늦었지만 또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손해를 본 곳이 괴산군입니다.

그래서 좀 자구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좀 대처하는 어떤 액션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느 한 군이라도 소외되면 안 됩니다. 같이 다 잘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맞고요.

어떻든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괴산군에도 같이 좀 해서 더 심도 있게 보면서 조금 더 여기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의원님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다 하면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외되지 않게 저희들도 열심히 챙겨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본 위원이 동남부4군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대중교통 한 군데도 연결된 곳이 없어요.

보은이 연결됐습니까, 옥천이 연결됐습니까, 영동이 연결됐습니까?

이런 것도 괴산군의 불편사항이다.

진작에 좀 챙겼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죠.

지방선거야 그렇지만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서 과감하게 지금 어떤 공공기관도 다 저희 괴산은 충부3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점을 정말 챙기는 것이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특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4단계 할 때에 괴산군 직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할 때에.

○윤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시멘트세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무슨 당근 받듯이 그거는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했다,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봐도 그렇고 향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런 거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금과 세금과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아마 이분들도 세금을 택하지 않을까, 추후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추진되는 거로 보면 그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또 다른 지역민과의, 지금 이런 거 말고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기부금… 저는 기부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부금이나 아니면 지역 의원께서 기부금에 대해서 솔깃했던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나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 150억, 200억 정도의 여러 가지 지원이 직접적 지원으로 오는 데 비해서 세금으로 하면 500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에서 좀 떼고 시군청에서 떼고 이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지 100억도 안 될 거다, 이런 오해 때문에 아마 그런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상으로 우리가 입법적으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목적세로 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반드시 편성을 한다.

그다음에 65% 그러니까 500억 중에 65%면 한 350억 되는데요 그 350억을 시군에 내려준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에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다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과정을 관리한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게 세금이 만들어져 갖고 이리 새고 저리 새지 않고 이 목적만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를 반드시 법적·제도적 장치로 저희가 이렇게 입법을 재설계하고 방안

을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 계획으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군과 도 간에 합의서를 쓰고 또 시군과 지역주민 간에 합의서를 쓰고 이런 합의서를 통해서 반드시 해 나간다는 거를 담보를 했고요.

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뭐 여러 가지 입법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활동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 하고 한 달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쉽게, 쉽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두 달 아니면 삼사 개월이라도 계속 이해를 구하고 지역주민한테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알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글쎄요, 이렇게 저도 지난번에 계속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반대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기업에서의 그런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는 도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해서, 금방이야 정말 안 되겠지만 향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지금과 같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계획을 잘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4쪽에 추진상황을 제가 보니까 실행과제에 10대 프로젝트 157개 실행과제에 예산이 10조 8,000억가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7,145억이 됐다는 얘기죠, 이 예산 중에?

그런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가?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지금 여기 10조는 5개년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21년부터…

○임동현 위원 아, '21년…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5개년이고요.

○임동현 위원 '21년부터입니까, 향후 5개년?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5개년이고요.

○임동현 위원 아,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지금 현재 그렇게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나 지역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담아 와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충북형이거든요.

우리 충북형이라 사업 자체에 대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할 필요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사례들도 중요하고 또 지역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좀 특화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도 줘서 남부3군이라든지 중부3군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걸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서 그걸 그 지역에서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 뉴딜이라는 거는 지역별 특성과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그게 최대한 더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도 뉴딜계획을 세우도록 했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시군별로 지역에 맞는 거를 발굴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모쪼록 지역이 원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 이게 당장 올 한 해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 우리 도 자체에서 각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살린 용역들을 따로 줘서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거꾸로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향후에는 필요하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수완 위원님 조금만 참으세요.

언론에 보니까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국토부가 충북선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우리가 계속…

국토부는 지금 충북선이 고속화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내는 시민을 위한 도 철도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니다, 충북선은 우리 청주시내로부터 한 70㎞ 이래 되어 있다, 일반철도다, 그리고 우리가 광역철도가 도시철도 아니냐, 그리고 청주시만의 계획으로 수립한다면은 국토부 말이 맞는데 대전부터 해 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권역으로 봐 달라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사실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세운 논리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실 지자체만의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민·관·정 잘 협력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더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 시멘트 자원시설세 저도 이거는 기금과 세금에 있어서의 차이를 주민들이 너무 몰랐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너무 그동안, 우리 충북도가 사실 이게 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분들이 국회의원인데 이 분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해요, 사실 도의 대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하셔서 타 자원에 대한 시설 세금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아까 이 자료 보니까 65%, 35% 이렇게 죽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 잘 설명하셔서 지역 사회가 모두 한 힘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국회의원들도 계속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잘 좀 그 취지에 맞게 성공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해서.

답변하시면서 충북선 국토부에서 70㎞가 아니고 7㎞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 그게 우리 도심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청주 광역, 청주에서는 7㎞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10㎞로 봅니다, 많이 떨어졌다 그만큼.

○김영주 위원 아까 70㎞라고 답변을 하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요, 10㎞.

○김영주 위원 10㎞요?

○위원장 이숙애 아니 저는 7㎞로 들었는데.

○균형건설국장 김인 10㎞.

○김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숙애 7㎞로 들었어요.

○이수완 위원 저도 7㎞로 들었어요.

○김영주 위원 7㎞로 하셨나요?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 말씀하실 때?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 아, 제가 발음이 그래서 70㎞로 들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이수완	이상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	정 훈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	한순기
정책기획관	신성영
세정담당관	홍순석
·균형건설국	
국장	김 인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5 호

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22일(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면
-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인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충북선은 우리 청주시내에서 한 70㎞ 이내"의, 70㎞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7㎞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의 건

-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

(14시12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실장님은 여기 충북에 오시고 처음으로 균형특위에 오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행안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다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와 함께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환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등 2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지역균형뉴딜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균형뉴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0년 12월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투자계획은 디지털·그린·휴먼·공간 4대 분야 157개 과제에 5년간 10조 8,66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투자계획 대비 15.3%인 1조 6,598억 원을 확보했으며 분야별로는 디지털 5.2%, 그린 21%, 휴먼 23.8%, 공간 14.3%를, 유형별로는 한국판 1유형이 되겠습니다. 한국판 지역사업 분야에 24.3%, 지자체 주도 2유형 20.9%, 공공기관 선도 3유형 104%, 그리고 기타 국비보조사업 4유형은 10.9%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투자계획 대비 88.3%의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고 16개 사업은 부처의 공모일정 미확정 등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부처의 사업 취소 등에 따라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10건의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주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경진대회가 5월에 예정돼 있어 추진일정에 맞춰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목표는 167건 6,739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대응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공모사업 사전심사평가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응모대상 사업의 타당성, 재정부담 적정성을 심사했고 이 중 중점 관리대상 사업 20건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응모전 사업계획서 컨설팅과 경제부지사 주관 점검회의를 통해 내실 있게 계획서를 보완하고 응모 후에는 실·국과 공조해 부처 동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반도체, 바이오 등 12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자문인력을 구성하고 주요 공모사업 응모 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현안 점검회의에서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쟁점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공모사업 선정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딜 관련 정부의 추가 공모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실·국과 공조해 부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개요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화 대응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며 기본구상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으로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3월 11일에 계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4월에는 4개 시도가 모인 가운데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개 시도 기관장 정례 간담회와 충청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우리 도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추진방향은 청주공항과 KTX오송역을 비롯한 6대 신성장산업 등 충북의 강점을 극대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 시군의 공동 특성을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도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4개 시도가 함께 수립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에 충북의 발전전략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수도 완성 추진 대응 충북도 용역과 민·관·정 TF를 활용해 충북의 발전을 이끌 메가시티 전략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월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7월까지 충북도 대응전략과 사업들을 마련하고 민·관·정 TF 운영으로 용역에서 도출된 전략과 사업들이 실행 가능하도록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굴된 충북의 전략과 사업은 4개 시도가 공동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안건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간 광역시설

의 합리적 배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체계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라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되어 지역적으로 중복된 행복도시,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광역도시계획의 상충 방지와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의 광역계획권 설정으로 일관성 있는 개발축·교통축 설정 등을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목표 연도는 2040년이고 용역비는 18억 원이며 '19년 4월 착수하여 '21년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계획권 설정, 공간구조 구상, 기능분담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광역시설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18년 3월 행복청과 4개 시도 공동수립 합의 이후 광역계획권 조정안에 대한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광역계획권 지정과 공청회를 실시하여 하반기 국토부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입니다.

청주권, 행복도시권, 대전권, 공주역세권 등 4개의 광역계획권 중 행복도시를 기준으로 1시간 내에 도시경계에 도달하는 도시를 기준으로 반경 70㎞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향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충청권 전역을 고려하여 개발축·교통축·녹지축 구상과 충청권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년 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재 시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여건 변화에 따른 행복도시권 위상과 연계한 충북도 미래 발전상 정립을 위하여 1개 광역계획권으로 통합 조정에 대한 상위계획과 유기적 연계 및 기존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군 및 연구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도의 각종 현안사업과 전략적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도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2번 안전인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입니다.

전체 161.5㎞ 구간으로 사업비는 5조 6,342억 원이며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 그리고 오송을 잇는 구간은 22.2㎞로 사업비는 1조 3,882억 원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급부상한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의 근간 사업으로써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최고 효율적 수단입니다.

'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년 9월 대전·세종·충북이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한 이후 12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토부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청주 도심 통과 이유입니다.

첫째, 기존 충북선은 청주 도심에서 10㎞ 외곽에 위치하여 청주와 대전·세종시민 간의 철도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청주시민의 철도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그림과 같이 청주시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도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청주시는 철도사각 도시로 도시환경

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동차 위주 도시교통으로 전국 도시 중 최악의 초미세먼지 발생을 나타내고 있으며 간선도로는 최악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1920년 청주 도심을 통과했던 철도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청주시민의 기대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셋째, 청주도심을 패싱하여 기존 충북선 활용 시 도시를 연결하는 쌍방철도가 아닌 대전·세종시민의 청주공항 전용의 일방 철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효과입니다.

첫째, 85만의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일 16만 5,000명 규모의 인적교류가 광역철도 구축 시에는 22만 명으로 33%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통행시간 및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입니다.

청주에서 대전 간 통행시간은 70분, 교통비는 3,900원을 절감하게 되며 세종과는 통행시간 52분 교통비는 1,450원이 절감됩니다.

셋째, 청주공항과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19년 기준 300만 명 수준에서 4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오송역 이용객은 '19년 기준 860만 명 수준에서 1,000만 명 이상으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넷째, 경제 활성화와 도시 상권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충청권의 생산유발효과는 2조 7,497억 원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주는 구 도심권 상가 활성화와 도시재생 극대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10쪽,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3번 안건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와 중부내륙선 지선입니다.

먼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동탄~안성~진천선수촌~진천·음성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78.8㎞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 3,246억 원입니다.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경부와 호남권을 연결하는 국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에 부합하고 경기 내륙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시 1일 수송수요가 2만 8,000명으로 예상되며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시간이 107분, 비용은 1,207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3조 9,55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충청내륙권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1쪽, 중부내륙선 지선입니다.

감곡~진천·음성 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54.9㎞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1조 6,499억 원입니다.

경강선, 중부내륙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권·강원권과 충청권 간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중부내륙지역 철도 수혜 확대로 음성, 금왕, 충북혁신도시 등 충청내륙지역 거점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구축 시 1일 수송수요가 1만 4,000명으로 예상되며 수서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시간이 180분, 비용은 4,350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2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충청내륙권의 고용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와 중부내륙선 지선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충북 100년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사업별 추진상황에 추진불가가 지금 2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자체 추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무엇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불기기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하려고 했다가, 부처에서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사업입니다.

비대면 협업 소프트웨어 실증랩 구축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부처에서 취소를 했고, 하나는 장기 추진과제로 이게 전환이 돼서 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는, 안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임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공간뉴딜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뉴딜은 지금 51개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략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뉴딜사업은 이 사업 전체 4개의 영역 중에서 스마트디지털 그쪽을 콘셉트로 하는 사업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 산업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신성장산업을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세 가지 영역 분야별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해 가지고 1유형은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서 지역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고, 2유형은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 3유형은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하는 사업, 4유형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라든지 또 ICT 기술을 활용한 또는 AI,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하고 전개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를,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지금 저희가 뭐가 몇 건 뭐가 몇 건 이거만 봐 가지고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위원장 이숙애 전혀 저희가 파악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또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료 제출은 이미 갖고 계신 자료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위원장 이숙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뉴딜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세한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라든지 앞으로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기존에 진행된 정책들을 다 뜯어서 새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그것이 각 국가 간에 취향이나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지요, 탄소중립이?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의제로다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구나 우리 충북뉴딜사업은 그런 기후위기 또 어쨌든 지구의 온난화 문제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정책들을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새로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여기 157개 중에서 탄소중립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보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모를 따올 때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기 4개 뉴딜분야 중에서 두 번째 그린뉴딜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 가지고 원대한 국가계획을 세우고 있고 각 지역에서도 그에 맞춰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또 그린뉴딜정책을 개발해서 각 지역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 우리 도에서도 두 번째 그린뉴딜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린뉴딜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 물 관리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구축이 두 번째 분야가 되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도시모델 창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분야를 묶어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환경친화적인 또 탄소중립적인 사업들을,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응모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그린뉴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디지털뉴딜과 함께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저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산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에

너지를 다 사용을 해 왔던 기존의 산업, 물론 환경은 직접적으로 관련들이 있고 그렇지만 산업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화석연료를 썼던, 화석 에너지를 썼던 그런 산업들이 지금은 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지 에너지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전환까지 있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구조를 다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자체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뉴딜 중심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도내에서도 정부탄소중립위원회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그린뉴딜로다 보면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움에 제기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렇게 좁게 보는 측면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뉴딜로다 제안해서 탄소중립을 보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나중에 좀 어긋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이 문제는 그린뉴딜이 사업에 한정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수소 또 전기자동차 보급,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또 우리 생활과 관련된 측면 모든 것을 다 앞으로 이 탄소중립, 친환경적으로 모든 거를 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이것대로 해 나가고 큰 틀에서 앞으로 환경 쪽, 그린 쪽으로 모든 분야를 다 이것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선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다란 방향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린뉴딜 중심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한 것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예.

○이상정 위원 어쨌든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환이나 변화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북이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좀 포괄적으로, 또 이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도내에 설치되면 거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에 의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요, 우리 균형국장님 설명하신 기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에서 아까 우리 청주 도심 간선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F' 최악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공인된 자료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추정하신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닙니다. 이건…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건 공인된 자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균형건설국장 김인 환경하고 그다음에 교통서비스 측면.

○이상정 위원 일반적으로 청주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부분들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폐기물 소각 이런 측면에서 좀 컸던 것이지 어쨌든 이게 교통의 측면에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료는 이게 교통 관련해서도 최악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 A·B·C·D가 있는데요, F 수준은 최악의 수준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그 밑에 "첨두시 통행속도"는 이게 오타인가요? 청주시 오타인가요? 첨두시라는 것.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닙니다.

피크 시에, 그때의 통행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첨두시가 피크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에서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모르겠네요.

저번에 지사님께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충북이 요청한 게 아니라 이게 경기도에서 요청을, 수도권에서 요청한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서로 좀 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정리됐나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것은 지사님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수도권내륙선이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혜택이 우리가 통과를 하지 않으면은 경기도에 혜택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안한 것은 그 당시 4차 철도망계획에 진천군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해명이 이런 자료에 대해서 바로 입장도 나왔고 정정했고 그다음에 진천군에도 그렇게 통보했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갈등 해소되면서 마무리된 것, 해프닝으로…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광역철도잖아요, 일반철도가 아니라?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충부내륙선 지선처럼 일반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이 사실은 또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전체 사업비에서 약 7,000억 정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나 복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계획에 반영이 됐을 때 실행과정에서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그때 논할 문제이고 지금 일단 계획에 넣어놓고 난 뒤에 그걸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봤을 때.

그리고 계획에 이게 되었다 해 가지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과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일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우리가 논할 문제고요. 일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광역철도 관련해서 충청권 광역철도도 그런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뭔가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걸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은 국토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은 충북선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철도에 하기는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철도로 하면 어떻겠냐는 국토부에서의 제안이고요.

저희들은 도시철도에, 우리 청주시만 국한됐을 때는 도시철도로서는 맞는데 대전이나 세종이나 우리가 청주를 같이 광역도시 개념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봐야 되고

그래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로만 하기에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확보 차원에서 광역철도를 국가계획에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뭔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언론에 나와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지금 입장이 가타부타 하는 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 그런 쟁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지금 세 가지 철도 관련한 사안들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에 보니까 2025년까지 총 우리가 사업비를 10조 8,662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까지 계획이 지금 1조 8,791억 원인데 현재까지 확보가 한 2,000억이 덜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맞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2021년 연말까지는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2,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아마 계속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2,000억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리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니까 총 157개 사업에서 추진불가가 2개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 추가발굴을 10건을 더 추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추가발굴을 했습니다.

○윤남진 위원 이미 하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10건에 천팔백… 예 예.

○윤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정상추진이 139개 사업이 있고 지연이나 부진된 게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고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부진사업이 지금 16개인데요. 여기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보면 사업 일정이 좀 연기되거나 공모가 아직 공모일정이 확정이 안 됐거나 또는 국비 지원 예산규모가 확정이 안 됐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정 연기라든지 아직 공고기 안 났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별문제 없고 지연되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남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북 자체 민·관·정 TF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용역에 있

어서의 충북의 대응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김영주 위원 1차 회의를 3월 19일에 하셨는데 실장님 참석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TF 회의…

○김영주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거기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

대신 여기 정책기획관님이 참석을,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대신…

회의에서 어떤 의미 있는 논의와 또 사업이 논의가 됐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회의에 정책기획관이 참석을 했는데 대신 답변…

○김영주 위원 예예,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TF를 구성을 해서 처음 한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가시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공항이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까지도 좀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첫 회의니까 대략적인 설명과 공감 정도 있을 것 같고, 공식 명칭이 민·관·정 TF입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민·관·정 TF'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민·관·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김영주 위원 처음에 민·관·정 TF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이라고 보면은 '관'도 아닌 '정'도 아닌 충청권 메가시티를 고민하는 어떤 팀이자 대표성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관·정 TF라기보다는 보니까 교수하고 연구원 두 분씩 들어가 계시고 도의원 1명 넣었다고 해서 '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관'과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이지 않겠습니까, 구성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민·관·정이라고 하면 마치 이것이 어떤 범도민, 범시민 이런 기구로서 이렇게 내용만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성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 간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예.

○김영주 위원 교수하고 연구원하고 담당자들이 주인데.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 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할 수 있을지 해 가지고 구성한 TF인데,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어떤 건의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향후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돼서 금년도 10월 달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이 될 건데 그 사이에라도 조금 TF 활동이나 역할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관·정하고의 어떤 조직 성격상 다른 의미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도도, 충남과 대전과 세종도 이렇게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나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자체 TF팀이 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관·정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협의도 되고 하는데 '민'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이

것도, 그러니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4개 시도의 공동의 이해가 있는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가보면 또 충북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충남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세종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 혹시나 다른 시도에도 민·관·정 TF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열되 그렇게 '민', 4개 시도에 '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회의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갖고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 간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는 거는 물론 폭넓게는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북도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메가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하신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TF 그쪽도 한번 구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시도지사들 만나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죠? 또 기획실장들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연구원들끼리는 연구조직이 공통의 과제에 관해서 발주도 넣고 참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이라는 부분도 공통의 메가시티 과제, 충청권의 과제를 내서 한번 초창기에는 관이 주도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의 장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 또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단순히 우리 자체 TF에 도의원 한 분 들어가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도 같이 건의를 해서 세종시의회, 대전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해서 같이 한번 논의도 하면서 공통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충청권이 상생발전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들어서 민과 또 의회 이런 것들도 고민이 있는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하여튼 지금 연구원 간에는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4개 시도 실무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하거든요.

하여튼 4개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관 주도로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김인 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자료 3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역생활권 70㎞, 세종시에서 70㎞ 반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충주, 제천, 단양이 빠졌다라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그분들의 여론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충북에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당초 이거 용역을 할 때 처음에 변경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충주, 제천, 단양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물론 충남 쪽에도 그쪽으로 맞고요.

맞는데,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이게 광역도시권을 국토부는 한 40㎞로 줄이자, 광역교통권 수준으로요.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1시간 이내에 70㎞로 설정한 것이고요. 저희들 당초

는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도시권이 된 것이 지금 공주, 행복, 대전, 청주 4개 권역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이것이 1개의 권으로,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1개 권으로 묶는 그런 과정에서 행복도시 중심으로 한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천이 여기 안 들어갔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포함해서 같이 하는 측면이었는데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해 가지고 줄였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용역과정에서 개발축이나 교통축이나 녹지축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가져가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할 때도 저희들이 처음에 제천시 등에 물었을 때는 의견이 그때는 없었어요, 와 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논의과정에 있었고 지금 현재 다시 의견을 묻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로서는 건의가, 다시 요구를 해 오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는데 워낙 처음부터 용역이 이것 때문에 한 1년간은 또 용역과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메가시티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발축에서 연계해 가는 거고 도시계획 측면은 여기 현재 안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축이나 교통축, 녹지축은 연계가 같이 광역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북부권에서 항상 균형발전, 충북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항상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물론 세종시에서 이렇게 거리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쪽 지역에 특별히 정말 광역생활권, 광역계획권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 지역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건 우리 검토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을 지금 주로 국가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충청북도에 뉴딜공모팀을 신설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딜공모팀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맞습니다, 기획관실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뉴딜공모팀에서 그럼 157개 사업인가요? 이 사업들은 공모팀을 주로 거쳐서 응모를 했었던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 지역균형뉴딜사업 일단 계획수립은 작년 12월에 했고요, 공모팀은 금년 1월에 신설이 됐고.

○위원장 이숙애 그럼 올해 공모팀이 들어오고 나서, 공모팀이 신설되고 나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위원장 이숙애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공모팀 인원이?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하시면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뉴딜공모팀은 금년 1월에 조직이 새로 신설이 돼서 팀장 1명에 직원 4명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균형 뉴딜사업 전체적인 관리가 일단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뉴딜사업 내의 공모사업이든 일반 공모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

한 사전컨설팅하고 논리개발 그걸 통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이 제출이 되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니까 주로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공모 동향도 일단 파악을 해서 실·과로다가 전파를 해 주고 그 사업이 공모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컨설팅하고 사전점검회의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도만의 어떤 논리라든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공모 신청할 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그동안 충북연구원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공모서류 작성에 지원하면서 했었던 컨설팅작업을 이 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물론 여기 공모팀에서 지원은 하지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과학혁신원이나 아니면 TP, 연구원 그런 쪽의 어떤 연구원을 통해서 논리 그런 부분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아까 보고내용에도 있었지만은 공모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팀을 100여 명 정도를 구성해서 사업별로다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지금 이 뉴딜공모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저는 뉴딜공모팀이 그런 컨설팅도 좋지만 우리 충북도에 투자유치과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처럼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서 공모에 당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사실 일선 부서나 시군에서 온 것들이 미흡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게 공모사업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물론 저희들이 단독으로다가 그렇게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이고 잘 아는 거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활동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의 범위를 조금 정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어쨌든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건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최근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세정팀에서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알고 봤더니 지역주민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충북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초지자체의 노력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그동안에 고생했었던 보상이 가능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도는 기본, 변함없이 지역자원시설세로서의 시멘트세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의, 단양이나 제천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 지난주에 제가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수님도 뵙고 내일은 또 제천시에 시장님 뵙고 또 관련 시멘트회사의 노조도 만나고 또 만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멘트세가 도입됐을 때…

왜 도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기금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나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아마 민간단체 쪽에서도 지난 3월 12일 날 공동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제천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충북세종포럼이 열립니다, 단양에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관련 주체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자꾸 그런 기회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을 많이, 그동안에 몇 년간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지체되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지금 충북, 강원, 전남, 경북 4개 시도 의장님이 지난주에 세종에서… 아, 대전에서 모임이 있으셨을 때 저희 담당 팀에서 가 가지고 4개 시도 의장님들께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의회는 또 의회대로 국회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실장님, 도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그동안 너무 미약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 제천이나 단양의 이통장협의회에 거기에서 충분히 공지를 하고 그분들이 숙지를 하면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만 공략을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또 제천·단양을 섭섭하게 해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어떤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많이 걱정하셔야 되고, 우리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절차적인 것만 확인할 뿐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 그 대신에 우리가 충북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관여해서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큰 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는 사안인데,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제천·단양이 우리 메가시티 광역경제권에서 빠지고 들어가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세종, 대전, 충남, 또 청주권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같은 경제권으로 흡수되기는 어렵다, 워낙 거리도 있고.

대신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광역철도를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 교통인프라거든요, 그게.

교통인프라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를 갖춰 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경제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거리가 멀면 아무리 가까워도 같은 경제생활권에 포함되기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부권은 항상 소외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고 인프라를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보면 늦거나 아니면은 아예 무슨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균형발전에서 제외된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당장 우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만 보더라도 우리 김인 국장님,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충청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제천, 그다음에 원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니아니, 강호축 말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고속화도로, 예예.

○전원표 위원 예, 고속화도로.

○균형건설국장 김인 청주에서…

○전원표 위원 어디까지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제천하고 원주로.

○전원표 위원 원주가 왜 포함이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원주 진입부로 들어갑니다. 저기서 갈라져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니, 그 노선이 어디까지냐고요, 계획된 노선이?

○균형건설국장 김인 계획된 노선이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청주에서 제천까지가 우리 계획서…

○전원표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청주에서 영동까지이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영동은 아니고요.

○전원표 위원 영동까지도 포함돼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영동은 제2고속화도로고요, 제1고속화도로가 방금…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청주에서 영동, 또 청주에서 제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전원표 위원 그래 이걸 왜 제가 예를 드냐 하면, 지금 그 노선을 한번 정확하게 훑어보셨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전원표 위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충주 금가까지 돼 있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게…

○전원표 위원 금가까지 돼 있고 금가서부터 제천까지는 기존 국도를 그냥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개량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전원표 위원 이게 어떻게 제천까지예요, 충주까지지?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양을 빼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북부권을 소외시킨다 소외시킨다 하는데 이런 걸 자꾸 소외시킨다고.

예산이라는 기는 뭐 대도시나 작은 도시나 균등하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물론 작은 도시는 인구가 적으니까 적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 인프라는 다르거든요. 교통 인프라는 갖춰져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서울~부산 고속도로를 닦을 때 그거 타당성 나왔겠어요, 조사를 했으면?

충주~제천 간에 B/C가 안 나온다고 그걸 안 했다 그러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자체가 B/C가 나왔겠어요? 뭐 B/C가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더구먼.

지금 국도 다 닦여져 있고 철도 있고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예를 들어서 청주하고 서울 간 고속도로를 닦아요. 고속도로를 닦는데 음성에다가 고속도로 닦아놓고 청주~서울 고속도로라고 명명한다면 청주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음성까지 가야 되잖아요, 신호 수십 개를 거쳐서.

충청고속화도로라고 해 놓고 충주까지 갖다 놓고 충주~제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호를

그냥 그대로 다, 8개인가 신호가 있어요 제천까지 들어가는데, 제천 봉양까지 들어가는데.

그 신호를 다 거쳐서 가야 돼요. 기존 노선을 그냥 그대로 그 국도를 이용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제천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충주까지만 포함시킨 거죠.

이걸 억지로 제천까지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지.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에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고민해야 될 거는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든 인프라라든가 모든 사업 구상, 모든 플랜을 청주 중심으로 짠다는 거.

도지사님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큰 틀에서 국가적인 사업만 계획하시고 도내 균형발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 여기 지금 충주, 제천, 단양 빠진 거 그것도 좋다 이기예요. 대안이라도 줘요, 대안이라도.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균형발전이라면. 예?

여기 청주권 여기 메가시티를 만든다 뭐 한다 다 좋아요. 그럼 소외된 지역은 다른 대안을 찾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 인프라 하나 맞추는 것도 그것도 쏙 빼 먹고 제천 빼 먹고.

신호가 제천까지 포함해서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10개 있는데 제천 구간이 얼마죠? 육백 얼마 들어가죠, 예산?

신호 하나 딱 없어지더라고. 신호 하나 딱 없어져요.

그게 무슨 고속화도로예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가만히 나눠도 돼요, 그거. 돈만 아까워, 그거.

그거 몇백억씩 들여 가지고, 600억씩 들여 가지고 신호 하나 달랑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충주까지 신호기 다 거쳐 가면서 충주에서 고속화도로로 올라타야 되는데, 금가에서 올라타야 되는데 제천까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고민을 하려면 우리 충북도내부터 고민을 좀 합시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제천까지 가야 되는데 「국가재정법」에 의해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으로서 그 점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단 교통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하는데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타 과정에서, 충청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했으면 예타 과정에서 교통량이 집중 많은 데, 혼잡한 데는 1차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됐고요.

지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소외됐다는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측면인데, 이게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다 충족되지 못하겠죠.

다만, 이번에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안 될 것을 우리가 그 측면으로 해 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예타를 정책성 평가에서 통과돼 가지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고 이런 건데…

○전원표 위원 도에서…

○균형건설국장 김인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전원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충북도에서 그거 몇 번째로 집어넣었어요? 제천~영월 구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예타를 진행했죠, 봤을 때요.

작년 8월에 예타를…

○전원표 위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그걸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여기 우리 충북에서는.

끝찌로 넣었나 그랬어요, 세 번째로 넣었는지.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2순위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충북도에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거는…

○전원표 위원 뭐 그렇다고 충북도에서 아무것도, 손 놓고 있었냐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강원도에서 더 심도 있게 관심 갖고 거기서 추진했다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 도로는 충북도가 중점적으로 열심히 뛰었고요, 강원도보다도요.

저희들이 한 것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해도요 그것은 우리 충북도가 당연히 열심히 뛰었고 지사님께서 애착을 가져 가지고 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걸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2순위로는 끼워 주셨어야지.

○균형건설국장 김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강원도도 그 예타 면제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원표 위원 각 도마다 하나씩 했었잖아요, 예타 면제 사업을.

○균형건설국장 김인 우리는 충북선고속화를…

○전원표 위원 충북선고속화 집어넣어 가지고 강호축 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걸 예타 면제 받았죠.

○전원표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청주~평택 간도 했지.

그렇잖아요?

이게 3순위로 올라갔다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떻든 저희들은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발전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려 안 되게 저희들 우리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그리고 사실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는 사실 우리 충북에서 제천에서 강릉·삼척까지 고속도로 뚫리면 좋죠, 그거 나쁠 거 없죠. 충북도에서 바로 음성, 충주나 다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정말 그 도로는 필요한 사람, 정작 그 고속도로를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사람들이 더 급한 거예요, 그쪽에서 더 노력했고.

뭐 그 비중을 갖다가 우리가 잘했니 저쪽이 더 맞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원하던 상황이었었어요.

과거에 왜 그러냐 하면 충주까지밖에 안 닦여있을 때 그게, 충주~제천을 연결시킨 사람이 예전에 서재권 의원이거든요.

그때 예타 안 나온다고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라서 강력한 여당의원 힘으로다 밀어붙여 가지고 된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도에서 뭐 했다 뭐 했다,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보다 세세하게 우리 도내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

예타가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그런데 이거 자체도 예타가 원래 안 나왔던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확충을 해 놓으면 그만큼 그걸 이용하거나 또 그만큼 소외된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만들면서 충주

까지 제천까지… 청주에서 충주까지만 해 놓고 제천까지 했다고 그러면은 안 되듯이, 그렇게 하면 제천시민들 농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확실하게 못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노선도 다 보고 다 확인했는데 참 이거 어이없게 설계를 했더라고, 너무 어이없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단계에서 제가 확인 해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서운했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이게…

○전원표 위원 도에서 어떻게 됐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최소한 제천까지 연결시키려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신호는 다 지키고 충주국도를 타고 가게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다 차라리 붙여주든지 아니면 거기 다릿재 넘어가기 전에 붙여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신호는 안 지날 거 아니에요.

충주시내 금가면 8개 신호를 다 거쳐 가 가지고 그렇게 금가에다 떨궈놓고 제천까지라고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복합적으로 서운한 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충주·제천·단양을 또 논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라도 어떤 기획을 하면 반대급부를 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부권에 뭘 주면 북부권에도 그 대안으로 뭘 주고 청주권에 뭘 하면 그 외 지역도 나름대로 어떤 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뭔가,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이런 것들이 균형발전 아니겠어요?

어느 한 군데만,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거는 옳지 않아요.

대신에 교통 인프라라도 잘 닦아주면 제천~청주 간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전혀 소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계속 소외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선 잘했다고 진짜 팡파르를 날릴지 모르겠지만, 축포를 터트릴지 모르지만 제천·단양 사람들은 또 분통이 터질 거라고.

아무튼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계획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국가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충청고속화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 차원에서 수립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여튼 저희 도 차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니, 충청고속화도로 만드는 게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국비로다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전원표 위원 아니, 충북에서 의견이 다 반영된 거 아니냐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충북에서는, 우리 충북 위원님 말씀…

○전원표 위원 그거 해 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건의는 했는데, 건의는 우리가 했죠, 했는데…

○전원표 위원 건의를 하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줄까?" 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요, 그건 했는데…

○위원장 이숙애 예, 위원…

○전원표 위원 정부에서.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타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전원표 위원 아니, 그럼 정부에서 해 주는

대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죠,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절차나 이런 적절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위원님 이제…

○전원표 위원 따진 거 알아요. 따진 거 아는데 여기서 "이거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렇죠. 반영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그게 사업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도 차원에서 그게 없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고 싶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원표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이 메가시티 만드는 거 정부에서 환영하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디요?

○전원표 위원 이기 메기시티 만드는 기?

○균형건설국장 김인 메가시티도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정부에서도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원표 위원 광역철도망 이거 정부에서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저 뭡니까…

○전원표 위원 안 되지만 우리가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에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못 나오면 이 사업도 추진을 못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요.

지금 국가정책이 그렇게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저기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국장님…

○전원표 위원 그럼 타당성 안 나오면 스톱시켜요, 이거.

○균형건설국장 김인 안 나오면 스톱, 못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타당성 없는 사업은 전연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타당성…

○전원표 위원 이거 타당성 안 나온다고 얘기 못 들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떤 사업 말입니까?

○전원표 위원 이 광역철도망사업.

○균형건설국장 김인 광역철도망은 지금 타당성이 우리 도심지로 만들어서 타당성이 높게 나옵니다, 봤을 때.

그것은 실행단계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나왔을 때 사업을 구체화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면, 거기서 안 나오면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애 자, 이제…

예, 위원님…

○전원표 위원 이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기 하지 마시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봤을 때는.

○전원표 위원 앞으로 타당성 안 나오는 건 하지 마세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렇게 타당성 안 나오는 건 절대 못합니다, 저희들은요. 할 수 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안 나오는 걸 왜 여태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느 사업을요?

○전원표 위원 제천~영월 간도 타당성 안 나왔는데 왜 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거는 정책성 평가에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경제성 측면에서는 안 나왔지만 정책적 평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원표 위원 타당성이 2017년도였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디요?

○전원표 위원 2017년도 했는데 그 타당성 안 나왔거든.

○균형건설국장 김인 안 나왔는데, 이번에 했을 때는 우리가 균형발전 이런 측면 했을 때 그렇게 사업 시행 전후를 가지고 우리가…

○전원표 위원 안 돼도, 당시는 안 되지만 또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것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건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숙애 자…

○전원표 위원 당장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절차 또 밟아서 또 하게 되잖아요, 하잖아요!

○위원장 이숙애 예, 전원표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김인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이숙애 예,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전원표 위원 타당성 안 나오면 아예 안 해요, 포기하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됩니다, 봤을 때.

지금 국가 재정…

○전원표 위원 아니, 아예 포기하고 안 하냐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포기는 그거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전원표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거는 다음…

○전원표 위원 한번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포기하고 안 하냐고.

○위원장 이숙애 자, 이제 잠깐만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건 다음단계고요.

○위원장 이숙애 예, 전원표 위원님!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제가 정리 조금만 해도 될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충북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충북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타 시도에 뒤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에 집중돼서 발전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역권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의 지역균형도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뭔가에서 빠졌다라면 거기에 보상할 만한 대응책을 좀 충북도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시종 지사님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전원표 위원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와 제천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금가에서 끝나고 금가에서 다시 기존의 국도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에 대한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앞으로는 충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하시라는 당부로, 간곡하게 당부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가 2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역생활경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차이와 공통점을 누가 좀 간단하게 설명…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국토부가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광역생활경제권은 국토부가 주관하기보다도 시도지사의, 어떤 시도의 이해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서도 틀리고 근데 또 같은 궤를 하고 그렇죠? 같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협업은 잘 돼 기고 있는지.

2개가 지금 따로 돌아가는데 내용을 보면요, 틀리거든요.

그럼 차라리 주관 부서가 같으면…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기획…

○김영주 위원 틀리지만 같이 하겠는데 지금 담당 국이 틀리거든요, 아예?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권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광역생활경제권은 지금 현재 우리 전국,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광역화 현상에 따라서 기존의 연합형 그다음에 통합형 또 강소 메가시티, 크게 3+2+3 해 가지고 작년에 국가에서도, 여당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점차 이렇게 서로 연계, 광역지자체 간에 연계해서 광역화로 가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충청권도 수도권이나 부·울·경 이런…

○김영주 위원 아니, 내용은 아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김영주 위원 이게 그런데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주 위원 그런데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광역…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는 하나의 우리가 발전적 측면이고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국토관리 측면입니다, 국토관리.

도시관리, 국토관리.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서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것을 할 때…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같은데 사업은 따로 추진되고 이런…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요, 사업은 그래서 제가 여기 광역도시계획 심의할 때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도요, 우리 메가시티하고 광역도시는 같이 가야 된다 그 부분도 같이 가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는 큰 틀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거기에 작은 틀에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차원하고 하나는 생활·경제·문화적인 하나의 공통의 권역을 생성한다는 건데 기획관리실장님들 회의할 때 저는 담당, 이게 도시계획과죠, 균형개발과죠, 국토부하고 연관된 부서죠?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대응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뉴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박상돈
임동헌	심기보	전원표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	정 훈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	신용식
정책기획관	신성영
·균형건설국	
국장	김 인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 6 호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15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 1면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5시09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특위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말 못했는데요. 갑자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하면 활동기간이 6월 30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이렇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이번 우리 11대 의회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6월 종료되면 이미 임기가 7월 달부터 다른 의회 12대가 시작이 되는데 12대에다 보고하는 것도 옳지도 않고, 이미 종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어떻게 5월 말까지 할까요?

○김영주 위원 그래서 한번 의견을…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들 의견…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이숙애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30일 날 종료가 안됐는데 보고하기도 뭐하고 활동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래 저는 6월에 회기가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회기가 있는데 항상 있었었고 그때 본회의에 보고가 되게끔 하는 기한이 좀 맞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들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절충을 해서 5월 말일까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영주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만 6월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하니까.

○위원장 이숙애 예예, 6월 본회의에서 우리가 보고하고 마무리하는 거로.

○김영주 위원 예예, 6월 30일까지 하면 본회의 보고를 못해요, 활동 중이니까.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5월 말일까지 활동하고 6월 회기에 우리가 활동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5월 말일까지 활동을 하고 6월 달 회기에 우리가 활동보고를 하는 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임동현
전원표	이수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	정 훈

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7 호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4일(목) 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1면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응전략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의 건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응전략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시업 추진상황

(14시08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3건의 추

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2월에 착수하여 3월 착수보고회,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1월 중으로 결과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간보고 결과 4개 분야 62건의 사업이 발굴되었고 추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응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유치와 청년·파워엘리트 계층의 유입이 지속될 전망이고 충북에서 계획 중인 도 현안사업의 추진 시기가 당겨지거나 당위성에 힘을 얻게 돼 충북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청주공항·오송역의 신수도권 관문 역할 강화, 바이오와 반도체·이차전지·수소 등의 충북 신성장산업 글로벌 선도기지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 충북이 신행정수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쪽,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권을 형성하기 위해 '20년 11월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4월 착수보고회,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메가시티 기본방향·추진사업을 협의했고, 충청권 메가시티 1호 사업으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선정해 충청권이 공동대응하는 등 충청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 7월 중간보고 결과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등 총 3개 분야 9개 전략사업 23건의 사업이 발굴됐고, 11월 용역 최종결과를 토대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개요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목으로, 시멘트 생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시멘트 생산자에게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시멘트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세수의 65%를 피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국회 논의과정입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심사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논의를 했으나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업계의 반대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고, 금번 21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세 차례 회부됐으나 업계와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쪽,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 현황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 및 각종 가연성 폐기물 연소로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과 분진, 소음, 악취 등의 생산지역 주민의 정신적·건강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지역인 대도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반면에 생산지역인 강원, 충북 등은 도시 미관 저해,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 직간접 불이익으로 소멸위기의 자치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오염, 도로 파손 등 외부불경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익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멘트업체에 시멘트세 과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7쪽,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강원, 전남 등 관련 시도지사·시도의회 의장

단 공동협약서 체결 등 시도 및 시군 연계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방송 토론회와 단양·제천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회 등 입법 건의활동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시 증인심문 지원과 청와대 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 등을 지속 건의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 등 관련 지자체와 공조를 굳건히 하고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와 함께 입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시고 처음이시죠, 우리 균형특위?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난 7월 28일 자로 균형건설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정기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마이크…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지난 7월 28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이정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북도 발전과 나아가 우리 중부권에 충청북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위원회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및 수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공동으로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안을 권역별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동·서·남해안,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종합계획은 관광, 산업인프라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략별 추진사업의 발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한편 중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등 2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내륙첨단산업권은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의 25개 시군구가 속해 있고 우리 도는 청주시를 비롯해서 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군 등 6개 시군이 속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에 연한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두대간권은 강원, 충북, 전북 등 6개 시도의 27개 시군이 속해 있고 우리 도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속해 있습니다.

1쪽에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한 시도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4년에 계획기간을 2014년도부터 '20년까지로 하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계획 수립 이후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획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6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법이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2월 국토부와 종합계획 협정을 체결하고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변경계획을 마련해서 6월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6개 시도 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8월 4일까지 관계기관 중앙부처 협의와 9월 8일까지 국토정책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종합심의가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21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10월 말까지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6개 시도를 대상으로 25개 시군구를 공간범위로 해서 미래비전을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으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에 따라 총 1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3조 7,859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도는 41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25.7%에 상당하는 3조 5,467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 내지 4쪽에 여러 가지 세부내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은 6개 시도 27개 시군을 공간범위로 하여 미래비전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에 따라 총 150개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사업비는 총 3조 80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도는 3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11.3%에 상당하는 3,492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5쪽에서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핵심사업에 대하여 공공시설 투자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포함된 사업 중 우리 도 2개 사업이 2022년도 국토부 정부예산안에 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사업은 옥천 장계관광지와 괴산 산막이옛길에 총 2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내륙권 지원사업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7쪽,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배경과 개요입니다.

그간 우리 도내 인구·산업·개발수요가 청주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진천·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지역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내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중 투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6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원대상은 지역불균형 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역발전도를 분석하여 발전도가 낮은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규모입니다.

2006년도부터 1단계 1,2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3단계 3,741억 원, '22년도부터 시작되는 4단계는 3,806억 원으로 네 단

계별로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같은 지역발전 여건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성장동력 기반 구축 확보를 위해 4단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하단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4단계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간 추진될 사업입니다.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발전도를 분석해서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낮은 7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년 기준 3,806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위축에 따라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단계별 평균 규모인 3%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 지원대상입니다.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사업으로 국가와 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등 총 19건을 자체 발굴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컨설팅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사업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현황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돼서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이게 어디서 내가 봤어?

우리 국장님 지금 한 데 몇 쪽이야, 이게?

살미 1건 도로 있던데. 살미에서 어디까지야,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야?

살미에서 단양까지로 돼 있던가?

내가 금방 봤는데 몇 페이지냐?

도로던데, 도로.

○김영주 위원 4페이지 35번.

○심기보 위원 4페이지 35번. 한수네, 한수.

살미~제천 한수 간 국도 건설인데 지금 국도가 이게 옛날에도 2차선인데 2차선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이게 4차선 계획이에요, 뭐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한수에서 충주 살미 도로는요 현재 도로가 2차로 도로입니다.

○심기보 위원 글쎄 2차선이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현재 지금 급곡선이 돼 있고 또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서 이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로 확장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심기보 위원 그냥 구간구간별로 곡선이 좀 이렇게 센 데는 바로잡고 이런 사업이죠?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렇습니다.

O심기보 위원 이거 가지고 될까? 거기가 밑에는 댐이 있고…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O심기보 위원 위에는 산악지역이라 상당히 이렇게 구불구불하다고.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O심기보 위원 이거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잡히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잡히지 않고 하면은 2차 도로를 4차선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건의를 국토부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실 생각이 계신가요?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현재 도로의 사업은 경제성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개발 또 정책성 평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일정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를 4차로로 하기나 또 100% 신설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서 현지 여건에 적합한, 즉 너무 급커브인 구간을 좀 직선으로 펴고 또 직선구간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서 자연경관에 맞게 안전사고 위주로 개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거 안전사고는 좀 더 해야지 그거 적당히, 이거 지금 구억 몇천 잡혔죠?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현재 이거는 총사업비가 900억입니다, 900억.

O심기보 위원 900억.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런데 이거는 5년 동안, 금년도 9월 28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 916억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2021년부터 '25년까지 설계해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6억 중에 일부 설계가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심기보 위원 이게 그 도로가 그래도 수요가 꽤 많은 도로예요.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알고 있습니다.

O심기보 위원 거기가 월악산 등반객도 많고 여름에 휴가철에는 한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는 여름에 하루에 한 3~4만 명씩 그 계곡에 들어가는, 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거든.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O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추후라도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O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O위원장 이숙애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임동현 위원 우리 시멘트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면 19대 때, 20대 때 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 지금 21대 때 심사 중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기간 지나면 폐기되지 않을까요?

O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이개호 의원님이 발의한 이후로 작년 11월 그다음에 금년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서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후순위로 어떻게 밀리다 보니까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에, 11월 달에 주로 지방세 관련 법령들이 주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깃 시점을 다음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우리 도하고 강원

도가 서로 밀접하게,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법안소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안에 수차례, 수차례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왔고 이번 달 가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달에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게 정리가 돼서 보면은 우리가 주민들의 인구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단양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지금 인구수가 제천도 그렇고 상상 이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거 말고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이 관련해 가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요.

우리 지사님도 며칠 전에 BH를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경제부지사님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석님들을 만나서 직접 협조를 부탁했고요.

저도 다음 주 초에 산업부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방세니까 세우려고 하고 산업부에서는 또 기업에 부담을 준다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반대를 좀 줄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산업부를 방문해서 담당 국장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우리 충북·강원·전남 민간단체에서 입법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지금 3월부터 계속해서 거기 입법부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 하여튼 이런 모든 각계각층이, 우리 도와 또 시군과 각계각층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막판에 힘을 쏟아 부으면 아마 다음 달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임동현 위원 이게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지방분권,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금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세부내용도 받아 봤는데 특화된 게 없다, 우리 충북이.

이게 도로 이런 어떤, 가장 그 정주여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속에는 인프라가 있어야 그게 활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의 정주여건 쪽에 발전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민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발전종합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광 인프라 이런 거는 있는데 그건 어쨌든 외부에서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충실히 채우고 외부에서의 것을 오게 해야 그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이 특화된 게 없지 않느냐,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검토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국토부와 지역과 다 같이 합동을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반영을 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보고자료 3쪽에서 4쪽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미래 과학기술 인프라, 그다음에 바이오 주력산업, 그다음에 지역자산, 그다음에 권역내 지역인프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

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그래요.

사실은 보면은 제천 쪽이나 이쪽 산단 쪽에 일부 이런 것들이 물론 도에서 노력을 해서 기업 유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분산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것들이, 좀 굵게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로 막 이렇게 찢어 벌려놓는 것보다는 지역마다의 실정에 맞게 구분을 해서 산단 조성도, 산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열심히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지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 왔고요. 지금 거의 다음 달에 아마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이 돼서 심의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지난번 소위 때도 거의 상정되기 직전에 앞 순위에서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번 11월 달에는 아마 앞 순위 쪽으로 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통 매년 11월 달에 지방세 관련 법안들이 심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달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지금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 여덟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수차례 방문을 해서 관련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고요.

또 지난 10월 1일 날 그중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신데 그중에서 특히 이형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월 1일 행안위 국감 때 행안부 국감 때 증인으로 시멘트협회장을 불러서 시멘트세 도입과 관련된 업체의 의견을 듣는 그런 증인심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국회의원실 보좌관들하고도 수시로 서로 소통하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지금 우리 제천지역에 엄태영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당 쪽의 이철규 의원, 사실 이철규 의원은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그 분이 직접 지역자원시설세를 본인이 발의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기금 조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분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기금 조성하고 직접적으로 세를 부과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인데.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차원이 다르게, 물론 기금 조성은 직접적으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그 기금을 갖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감언이설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꼬셔가지고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반대를

하고 기금 조성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거기에 시멘트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까지 같이 동조를 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했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업계의 어떤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하고 사실 어떤 주민 편에 서서 정말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어떤 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길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업계의 어떤 논리에 매료돼 가지고 그분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맞습니다, 예.

○전원표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금 조성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 현재 네 분…

○전원표 위원 해당지역 네 분, 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2월 달에 협약을 맺으신 네 분의 현재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표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기금 조성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기금이 아니라 지방세를 도입하는 게 맞고요.

그럼 왜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업체와 기금협약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거기 관련 협약을 맺었던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면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기금이 아니라 지방세 도입, 시멘트세 도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대, 20대, 21대 오면서 이게 기간이 계속 늦어지니까 일단 그 중간과정이라고 할까요? 일단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한 1년에 250억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업체에서 한다고 하니 그걸 거부할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한 것이지 "기금이걸로 끝!"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세로 가야된다 그거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결국은 지방세와 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지속성 또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금을 내지 않을 때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의 개인들 주민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해당 시군이나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다만 그 협약을 한 것은 그런 중간과정이라는 말씀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좀 더 보니까 이전에도, 작년, 이전에도 업체에서 매년 기금 100에서 150억을 조성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 사회 공헌사업을 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헌을 한 사업은, 순수하게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한 20억에서 40억 그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거기 업계에서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오염방지 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한 거를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분류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역공헌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해서 일단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협약을 맺은 국회의원님들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지방세를 신설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

고 예를 들어서 그게 무산됐을 때 “아, 그러면 기금 조성이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북도하고 기타 다른 자치단체하고 열심히 지방세를 입법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 재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기금 조성이 옳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생산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 아주 근처 주민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기금 조성에 아주 올인이 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세금 걷어봐야 당신네들한테 이거 안 돌아갑니다, 잘. 그런데 기금 조성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기금 조성을 찬성을 하고 기금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자꾸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걸 갖다가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지금 시멘트 공장이 그냥 시멘트만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분진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에 여러 가지 폐기물, 타이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무지하게 거기 소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소각시킴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또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시멘트를 생산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폐기물 소각해서 버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폐기물 소각해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 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맞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사회환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에서 당연히 감당하고 감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걸 기업체 입장에서 동조해 주는 국회의원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요, 이분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맞습니다.

○전원표 위원 하여튼 우리 도의 입장을 사실 국회에다가 전달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참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행안부 쪽하고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 지방세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러면 제천시하고 단양군의 입장은 정리가 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장님 또 단양군수님을 3월 달에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업체와 기금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해당 단체장님께서 국회의원님과의 관계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건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그 지역을 몇 번 갔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부 주민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은 지방세 도입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두 자치단체는 반대는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 하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러니까 조금 눈치를 보는…

○이상정 위원 입장이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그런 조심스런 어떤 입장이신 것 같은데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핵심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때 기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산업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 중의 이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탄소 배출이 충북에서도 탄소 배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기업의 책임은 저는 공적으로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은 올리려고 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공적인 이런 세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지금은 도가 용역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기다려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도의 입장이라든지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가 구체적으로 타 관련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하면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9월 30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62개 사업이 발굴이 됐고요. 그중에서 인프라 관련이 27개, 그다음에 신산업 관련이 18개, 문화·관광이 13개, 그다음에 기관 유치가 4개 사업인데 현재 우리 도의 각 실·국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대비해서 또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각 실·국에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강조 말씀 좀 더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균형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다양한 방식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궁금한 거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의 발전사업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보면은 국비 사업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방비도 없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게 좀 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들이 굳이 이게 전체 종합계획에 들어서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내륙권 종합발전계획이 국비를 대부분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상정 위원 국비가 없는 사업들이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국비가 없는 사업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 내륙권첨단산업 발전계획이 국비, 지방비, 민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는 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방비 일부 매칭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없는 민자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는 말씀대로 미래 자동차 부품 단지 같은 거는 100% 민자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이상정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 안 하는데 민간에서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다 생각할 테니까 해 달라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맨 끝 부분인가요? 청주국제공항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국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업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어쨌든 계획은 다 확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최종적으로 10월 말에 고시 예정으로 해서 국토부의 마지막 심의가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전력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이 부분은 제가 균형발전 위원이라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알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쨌든 이게 도내 7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사실은 관광사업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전략사업이 관광사업 중심이 되고 신성장산업들이 약간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보면은 7개 시군이 대부분 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조성사업들이 많아서 과연 이것이 우리 도 입장으로 봤을 때 7개 시군이 똑같이 관광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출혈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전략사업이 비중이 다 높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관광사업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좀 집중할 데 집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7개 시군이 다 똑같이 관광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 최근에 미래신성장산업들이 조금 더 강화되기는 했는데 어쨌

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7개 시군이 도비로다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 공돈 이런 식의 취급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다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대부분 관광 위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지 않느냐, 앞으로 여러 가지 미래신성장동력도 들어갔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장래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발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3단계까지는 대부분 전략사업과 기반조성사업 또는 행복마을 이런 등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단계부터는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이 8쪽에 있습니다만 56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보고에 빠졌는데 어쨌든 혁신도시가 국가적인 균형발전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2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또 제대로 구체화되지도 않고 또 최근에 다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시즌2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혁신도시의 관련 내용이 왜 빠졌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동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위주로 해서 발전도가 마이너스 단계로 가는 지역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기타 진천, 음성, 충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사업을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도 반영을 안 했고 이제 4단계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지역발전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주로 이렇게 동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상정 위원 제가 4단계 발전사업에 왜 빠졌냐,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도에서도 그렇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김영주 위원 다음에…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오늘은 보고사항에 빠졌으니까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는 위원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저번에 들어서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이상정 위원님 또 할 때는 혁신도시 업무보고에 넣어서 그렇게 듣는 거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에서 지금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용역이 되고 하나는 심의위원회 마지막 단계에 있고 또 중간보고회도 한 게 있고 또 결과도 나온 게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이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사업들이 공통으로 섞여 있어요.

보시면요 일단은 내륙첨단산업권이 있죠?

발전종합계획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이 있죠?

충북과 우리 충북 내의 일부 시군이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의 전략과제나 세부사업들, 추진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렇죠?

죽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있죠?

이거는 충북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그렇죠?

또 보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이라고 그래서 대전세종하고 충북·충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페이지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을 하고 있죠, 국비하고 반반 들어서. 그렇죠?

1페이지의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분야별 사업발굴이 62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죽 보십시오.

그래 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용역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3월부터 기간도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망·철도망 건설 그 나머지 미래산업이나 인프라나 문화관광 분야도요 내용이 다 같아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눈에 띄는 것도 같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의아한 거예요.

동일기간에 하는데 이 사업에 두 가지 용역에 공통분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은 있는 겁니다, 충청권 메가시티하고 연구용역하고.

이 점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 내용들이 또한 내륙첨단산업 발전전략, 정부 발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또 일부는 백두대간 발전계획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용역이, 지금 용역도 했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4개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비슷하게 전략과제나 세부 추진상황이 비슷한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벌려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발전계획, 전략계획 수립을 하는 그러니까 우선권이랄까,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위를 규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지금 네 가지 용역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표현이 높다고 표현해서 뭐 하지만 어떤 큰 근원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파생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의 내륙첨단산업과 백두대간권 종합계획이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반영이 돼야지만 국비도 되고 지방비 투자하는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네 가지 용역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결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비슷한 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첨단내륙산업 용역할 때 충청북도에서 와서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 물어보고 협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맨 그거 들어갑니다.

백두대간 하면은 휴양림 조성하고 하는 거 맨 그거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또 여기 광역경제생활권 전략 수립에도 있고 충청권 대응에도 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용역만 이렇게 늘려놓고 하는 상황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용역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필요성에 의해서 해 봤자 이쪽에 용역이 안 들어가면 이게 수행이 안 되는 건데 괜히 고민하고 전략 세우고 용역해 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실행력이 담보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월에 국토부부터 해서 심의를 해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용역을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고민하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막 용역비만, 그냥 똑같은 사업 들어가면서 여기다 용역 주고 여기다 용역 주고 용역비만 그냥 낭비했다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당부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백두대간권 계획이나 내륙 발전 종합계획이나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대응전략, 그다음에 충청권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계획 이 네 가지 계획은 종합계획 맞습니다. 맞는데 그 주체와 목적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백두대간과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우리 전 국토를 놓고 각 권역별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각 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사업이 들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토적인 관점에서 세운 계획이고.

그다음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은 우리 충북도에서…

○김영주 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용역이 내용이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걸 질의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런데 위원님,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겹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 대응전략은 우리 충북이 순수하게 충북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게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계획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충북하고 충남연구원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데 이거는 충청권 전체 입장에서 각 시도가 산업경제와 인프라, 문화관광 쪽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어도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충청권 안에 우리 충북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겹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부 사업이 아니고요, 일부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하려고 하는 전략사업들은 이렇게 A·B·C·D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게 많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하면 연구용역 주고 또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똑같이 돌아가고 했던 얘기 똑같이 용역에 담고, 여기도 담도 저기도 담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담당자 바뀌고 해도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전략이 모든 국가전략이나 아니면 우리 충청권이나 충북 단독으로 하는 거나 또 우리가 하는 4차 균형발전 전략이나 한꺼번에 다 큰 틀에서 이게 정해져서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각개로 그냥 가는 것 같아 갖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저 혹시,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요.

제가 지금 내륙권 종합 발전계획을 제외하고 혹시 다른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된다면, 혹시 어제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집회하시는 거 보셨죠? 담당자가 누가 되실지 몰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2단계 지방이전사업을 공공기관이 210곳, 그다음에 공공기관 투자 출자회사가 279곳의 대통령 공약을 이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신 거 혹시 실장님은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내륙 종합 발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세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 분, 국장님과 실장님, 기획관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 받으셨다니까 저는 이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과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충북이 타 시도보다 발전이 덜 됐다라

고 보고 있잖아요? 도세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공약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제2차 이전 약속을 이행하라는 집회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거기에 가서 집회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당부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김영주 위원님의 의견처럼 정말 이게 너무 여기 저기 막 흩어져서 유사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참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든 게, 이렇게 나열한 듯한 느낌이 든 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번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상황에서 보면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서 추진과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3개 분야 9개 전략 23개 세부사업을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된 거는 아니겠지만 세 번째 분야를 보면 '사회문화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실장님?

그런데 거기 보면 문화관광만 들어가 있어요.

3개의 세부사업 전략 중에서 사회문화 분야인데 문화관광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이 제목부터 딱 보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갖다 써놓은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문화에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인프라도 있고 우리가 사회 쪽으로도 정말 시민사회 또는 우리 사회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대강… 그래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한다라는 비판과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와도 도에서는 전혀 그거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다 겪고 있는 일이지만 충북연구원에서 사실 인쇄물 저희한테 우편으로 오는 거를 보면 어마무시하게 연구결과들이 오거든요.

그중에서 과연 충북도가 얼마나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과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단은 이 계획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3조 5,467억, 그리고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에서 3,492억의 예산이 지금 충북에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기기에 보니까 6페이지 보면은 그간 우리 도 국비 확보내역이 한 256억 정도 확보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여기 과제도 이 사업들도 정말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제목들이 저희가 그동안 되게 많이 봐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스템반도체 특화산단은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3페이지에 보면은.

그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스템반도체 특화산단, 850억이 들어가는데.

6번이에요, 3페이지에.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괴산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계획을 보고를 하실 때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몇 백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목만 딱딱 써 놓으시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심기보	전원표	이상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	정 훈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	신용식
정책기획관	신성영
세정담당관	홍순석
·균형건설국	
국장	이정기

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8 호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월 26일(수) 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 1면

(09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8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2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09시39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8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전원표	이수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	정 훈

4.3. 충청북도 업무보고

Ⅰ. 2차 회의 자료(2020. 10. 22.) ·····

Ⅱ. 3차 회의 자료(2020. 12. 7.) ·····

Ⅲ. 4차 회의 자료(2021. 1. 28.) ·····

Ⅳ. 5차 회의 자료(2021. 3. 22.) ·····

Ⅴ. 7차 회의 자료(2021. 10. 14.) ·····

Ⅰ. 2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0. 10. 22.)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20. 10. 22.(목) 16:00
특별위원회 회의실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 행정수도 완성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

정책기획관

행정수도 완성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

Ⅰ 관 련 동 향

▸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 중

- 더불어민주당 : 국가균형발전특위 운영으로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 계획
- 국민의 힘 : 특위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함이 타당
- 세종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집중

□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연설시 행정수도 완성 제안(7.20.)

○ 주요전략

-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특위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출범 : 7. 27.

-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단장,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간사 등 17명
- 정례회(2차 8.10, 3차 8.18, 4차 8.24.) 및 토론회(8.19.) 개최
- 지역 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9.10. ~ 9. 28.)

○ 주요발언

- **이낙연 당대표** : 행정수도 이전은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로 추진 필요, 국회의사당 기능 이전을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준비 중(10.14.)
- **김태년 원내대표** :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 가능

□ **국민의 힘**(주호영 원내대표 주요발언)

○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

○ **민주당이 제안한 특위는** 행정수도 이전 전제가 아닌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함이 타당**(8.23.)

□ **세 종 시**(투트랙 전략)

○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지위 확보**(개헌, 합의 입법 등) 후, **국회 · 청와대 · 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

○ **(단기과제 병행 추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04년)에 반하지 않고,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

· 특히,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던 **세종의사당** 건립에 집중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진행상황**

○ **법안 :**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6.10, 홍성국의원 / '20. 7. 21 박완주의원)

※ 20대 국회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16.6월, 이해찬의원)하였으나, 미통과(자동폐기)

○ **공약 : 21대 총선 민주당 · 통합당 지역공약**에 세종의사당 설치 반영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17년)

○ **국회 : '19 · '20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씩 반영**(행특회계)

※ **국회사무처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전담조직) 출범('20.8.5)

Ⅱ 대 응 계 획

▸ 충청권이 공동 대응을 하면서 충북도 자체 전략 마련
-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구성운영
-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청북도 전략마련(용역추진, TF 구성·운영)

1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구성·운영

□ 목 적

○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충청권의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 충북에서 제안하여 대전·세종·충남이 합의하여 구성됨

□ 구 성

○ 인 원 : 20명
- 民(8명) : 시도별 2명
- 官(4명) : 4개 시도지사
- 政(8명) : 4개 시도의장, 민주당 4개 시도당위원장

○ 역 할 :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활동방안 강구

□ 운영계획

○ 회의개최 : 분기 1회(시도별 순환 개최) ※ 실무회의 별도운영

○ 주요활동
- (民) 공감대 확산 (官·政) 정부·국회 건의, 특별법 제정(안) 대응 등
- 토론회, 서명운동, 전국 국가균형발전 단체와 공조, 국회·정부 대응 등

□ 추진상황

○ 출범식 : 9.28(월) 10:30 / 세종시청 / 사업계획 보고, 선언문 낭독 등

□ 향후계획

○ 실무회의 : 10.30(금) / 세종시 / 4개 시·도 기획실장, 민간단체 관계자 등
- 협의회 세부 사업 추진계획 논의

2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충북도 대응전략 마련

□ 필 요 성

○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충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장·단기적인 대응전략 마련 필요

○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세종시 빨대 효과 등 부작용 대비 필요

□ 주요내용

① 영향분석과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

- 기　　간 : '21. 2 ~ 9월
- 용 역 비 : 76,000천원
- 용역내용

·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북·충청·국토 공간구조와 기능 변화 전망
·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향 전망 및 충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회, 청와대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현황 및 유치전략
· 신수도권 관문으로서 KTX오송역·청주공항 활성화 및 신성장산업 강화 방안
· 충청 신수도권 시대에 대비한 충북 권역별 발전전략 및 정책 제언
· 신수도권 시대에 대비한 충청권 상생 협력사업 발굴 등

② 충북 민·관·정 TF 구성·운영

- 기　　간 : '21. 1월부터　※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방안 마련시 본격운영
- 구　　성 : 학계 등 전문가, 관련부서(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등), 도의원
- 내　　용 : 행정수도 이전을 대비한 충북 발전 전략 수립

□ 향후계획

○ 충북 민·관·정TF 구성 및 용역계약 : '21. 1월 ~ 2월

○ 충북 민·관·정 TF 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1. 2월 ~ 8월

○ 용역완료 : '21. 9월

Ⅱ. 3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0. 12. 7.)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20.12월

충북형 뉴딜 추진상황 보고

< 목 차 >

1. 그간 추진상황

2. 지역균형 뉴딜 개념

3.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안)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충북형 뉴딜」 추진상황 보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충북형 뉴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림

1. 그간 추진상황

1 충북형 뉴딜 핵심사업 현황

합 계	10,187억원	주 요 내 용
[1 단계] 우리마을 뉴딜사업 (5. 6일 발표)	708억원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 - 시 지역 동(51개동) : 동별 2억원 이하 - 시군(3,028마을) : 행정리별 2천만원 이하 ※ 마을가꾸기, 체육공원, 마을회관, 농기계창고 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지원
[2 단계] 투자유치 뉴딜사업 (6. 2일 발표)	1,930억원	▸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확대 : 930억원** - 타 지역기업 430, 도내기업 500 ▸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 1,000억원** - 투자진흥기금, 5년간 조성
[3 단계] 시군대표 뉴딜사업 (6. 8일 발표)	3,979억원 (신규사업)	▸ **시군 지역발전 선도사업 : 8,332억원** - 신규사업 : 16건 3,979억원 - 기존사업(조기집행·조기완공) : 13건 4,353억원
[4 단계] 충북형 디지털·그린· 산업혁신 뉴딜 (7. 20일 발표)	3,570억원	▸ **디지털 뉴딜 : 4개 사업 554억원** ▸ **그린 뉴딜 : 3개 사업 771억원** ▸ **산업혁신 지원 : 3개 사업 1,046억원** ※ 한국판 뉴딜(충북예산) : 31개 사업 1,199억원

2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 대표사업

○ 총　　괄 : 41개 사업 3,570억원

○ 사업내역

구 분	충북형 뉴딜	한국판 뉴딜(충북 예산)
41개 사업 3,570억원	**10개 사업 2,371억원**	**31개 사업 1,199억원**
디지털뉴딜 (7개 사업 673억원)	**4개 사업 554억원**	**3개 사업 119억원**
	① ICT기반 진단 기기개발을 통한 스마트 의료 플랫폼 시범모델(7억원) ②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개발 플랫폼 구축(100.5억원) ※ 대표사업 ③ 중부권 최고의 VR·AR 테마파크 조성(350억원) ④ 농공단지 스마트화(96.6억원)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64억원) ‣ 중소기업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45억원) ‣ 제조업 AI융합지원 (10억원)
그린뉴딜 (9개 사업 1,015억원)	**3개 사업 771억원**	**6개 사업 244억원**
	⑤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구축(260.2억원) ※ 대표사업 ⑥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 구축(340억원) ⑦ 태양광·ESS융복합 제조검증 기반구축(170.4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52억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76억원) ‣ 미세먼지 차단숲(3억원) ‣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9억원)
산업혁신 지 원 (3개 사업 1,046억원) ※고용안전망 확충(22개 사업 836억원)	**3개 사업 1,046억원**	**22개 사업 836억원 <고용 안전망 확충>**
	⑧ 글로벌 사이언스아카데미 빌리지 조성(366억원) ⑨ 미래유망산업 선점 기반구축(180억원) ⑩ 유망벤처·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창업 지원(500억원)	‣ 희망 일자리사업(407억원) ‣ 예술 뉴딜프로젝트(46억원) ‣ 긴급복지 지원(26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5억원) ‣ 치매관리센터 운영(84억원)

2. 지역균형 뉴딜 개념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경제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10.13일)

□ 한국판 뉴딜 中 지역사업(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지역투자 75.3조원)

○ (디지털 뉴딜) 58.2조원 중 24.5조원 투자('21년 4.2조원)

박물관·미술관 전시안내서비스 고도화(80개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원(1천개소),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기획전 등 지원, 국도(1.4만㎞) 50%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 스마트시티 솔루션 지원(27개 도시)

○ (그린 뉴딜) 73.4조원 중 50.8조원 투자('21년 8.8조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82만호), 그린 스마트스쿨 설계(715동),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25개소), 민간 주택·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학교 주변 전선로 지중화,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산단내 클린팩토리 구축(250개소)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지자체 자체재원 + 민자 추진)

○ (디지털 뉴딜) ICT·Io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관리, AI·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 (그린 뉴딜)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공공기관 자체재원 활용, 지자체 협업)

○ (디지털 뉴딜) AI 등 신기술 활용, 각 공공기관 추진사업 스마트화

○ (그린 뉴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3.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안) * 검토 중

1 추진체계

○ 비전 및 목표

(비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
(목표)	「위기극복」을 넘어 「지속성장」 대전환 발판 마련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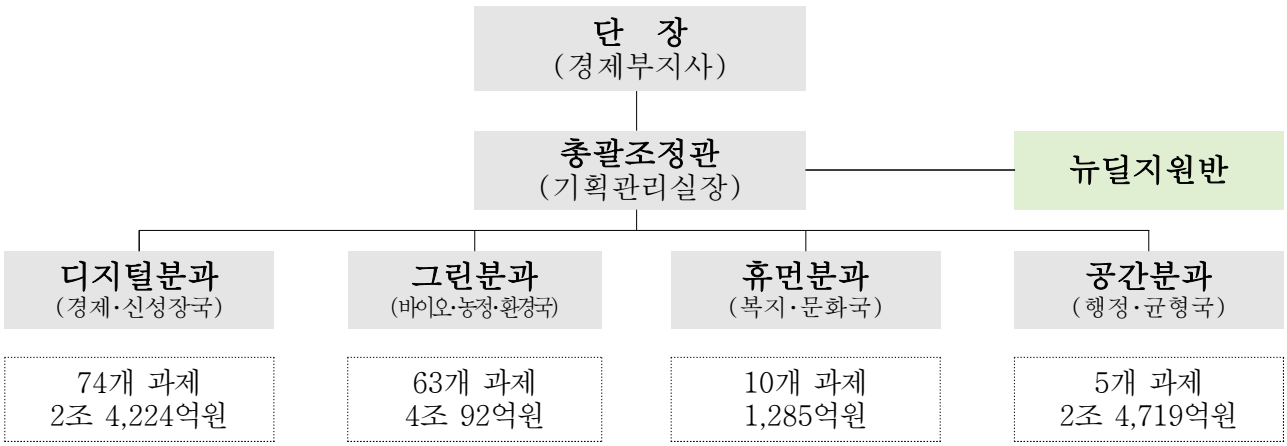
A. 디지털 뉴딜
-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 ▸ 신성장동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촉진
- ▸ AI, 초고속통신기술 보급 확대

B. 그린 뉴딜
- ▸ 저탄소·친환경 등 그린경제로 전환
- ▸ 수소·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 ▸ 스마트 제로에너지 도시 건설

C. 휴먼 뉴딜
- ▸ 문화·관광시설 확충 및 융복합화
- ▸ 의료·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
- ▸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D. 공간 뉴딜
- ▸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 ▸ 청주권·비청주권의 균형발전 실현
- ▸ 강호축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선도

○ 조직체계



* 뉴딜지원반 : 금년말까지 기획팀에서 운영, '21.1월 이후 조직개편 부서로 업무 이관

2 세부 실행과제(안)

○ 총 괄 : 4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152개 실행과제

구 분	실행과제(개수)	재원별 투자계획(억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52**	**90,319.6**	**49,623.6**	**8,100.1**	**11,312.2**	**21,283.7**
A. 디지털 뉴딜	**74**	**24,224.3**	**15,533.2**	**3,225.6**	**3,196.0**	**2,269.5**
① 스마트 산업 시스템 강화	26	2,777.3	1,315.4	675.3	369.0	417.6
② 신성장산업 고도화	20	16,346.7	11,999.6	1,767.4	1,313.7	1,266.0
③ 기술혁신 체계 구축	28	5,100.3	2,218.2	782.9	1,513.3	585.9
B. 그린 뉴딜	**63**	**40,091.6**	**16,165.5**	**4,047.2**	**7,545.0**	**12,333.9**
④ 스마트 물 관리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20	7,859.1	5,098.5	723.2	1,791.6	245.8
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구축	18	5,752.8	3,041.6	821.8	1,118.2	771.2
⑥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창출	25	26,479.7	8,025.4	2,502.2	4,635.2	11,316.9
C. 휴먼 뉴딜	**10**	**1,284.7**	**482.6**	**332.3**	**469.8**	**0.0**
⑦ 사회 안전망 강화	6	500.0	122.2	188.2	189.6	0.0
⑧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4	784.7	360.4	144.1	280.2	0.0
D. 공간 뉴딜	**5**	**24,719.0**	**17,442.3**	**495.0**	**101.4**	**6,680.3**
⑨ 도로·철도 등 SOC 확충	3	24,189.0	17,432.3	38.2	38.2	6,680.3
⑩ 균형발전 공간 네트워크 구축	2	530.0	10.0	456.8	63.2	0.0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20. 12. 7.(월) 1500
특별위원회 회의실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 그간 추진상황

2. 지역균형 뉴딜 개념

3.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안)

기획관리실

1.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 사업기간 : 2017～2021 (5년간)

○ 대상시군 :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사업유형 :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행복마을 사업, 국가균특사업

○ 총사업비 : 3,736억원(국 312, 도비 1,682, 시군비 1,742) ※ 자담·민자 제외

- 전략사업 : 1,771억원(도비 931, 시군비 840) * '17~'20(19개사업), 1,467억원
- 기반조성사업 : 987억원(도비 439, 시군비 548) * '18~'20(21개사업), 789억원
- 공모사업 : 118억원(도비 40, 시군비 78) * '17년(7개사업), 118억원
- 인센티브사업 : 125억원(도비 106, 시군비 19) * '17년(9개사업), 55억원
- 행복마을사업 : 30억원(도비 22, 시군비 8) * '17~'20(113개마을), 22억원
- 국가균특사업 : 705억원(균특 312, 도비 144, 시군비 249) * '17~'20(37개사업), 537억원

○ 연도별 투자실적 또는 계획 : 별첨

○ 주요재원 : 도 특별회계(보통세 5%이내), 국가균특

□ 추진상황(도 특별회계)

○ 전략사업(19개 사업, 1,467억원) : 완료 2, 공사중 17

○ 기반조성사업(21개 사업, 789억원) : 완료 4, 공사중 14, 실시설계중 3

○ 공모(7개사업, 118억원) 및 인센티브 사업(9개사업, 55억원) : 완료

○ 행복마을사업(1단계:79개, 2단계 34개, 22억원) : 완료 101, 추진중 12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 운영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17~'20, 15회), 관계관 합동워크숍('17~'19, 3회)등

□ 향후계획

○ 3단계 5차연도 사업 추진 : '21. 1. ~ 12.

○ 4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시달 : '21. 1.

○ 4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 '21. 2. ~ 12.

별첨자료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연도별 투자(실적·계획)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재 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합계	3,736	754	704	804	631	843
		국비	312	71	75	62	38	66
		도비	1,682	322	327	330	275	428
		시군비	1,742	361	302	412	318	349
보통세 징수액 5%이내	소 계	계	3,031	584	547	677	548	675
		도비	1,538	281	299	319	259	380
		시군비	1,493	303	248	358	289	295
	전략사업	계	1,771	405	388	367	307	304
		도비	931	201	226	209	137	158
		시군비	840	204	162	158	170	146
	기반조성 사업	계	987	-	152	303	238	294
		도비	439		68	105	119	147
		시군비	548		84	198	119	147
	공모사업	계	118	118	-	-	-	-
		도비	40	40				
		시군비	78	78				
	인센티브	계	125	55	-	-	-	70
		도비	106	36				70
		시군비	19	19				
	행복마을	계	30	6	7	7	3	7
		도비	22	4	5	5	3	5
		시군비	8	2	2	2		2
국가균특	균특사업	계	705	170	157	127	83	168
		국비	312	71	75	62	38	66
		도비	144	41	28	11	16	48
		시군비	249	58	54	54	29	54

참고자료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별 현황

① 전략사업

(단위 : 억원)

시군	세 부 사 업	구분	합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 계		합계	1,771.1	404.4	387.9	367.4	306.9	304.4
		도비	931.5	201.1	226.5	209.2	136.8	158.0
		시군비	839.5	203.3	161.4	158.2	170.2	146.4
제천	**자동차&바이오 산업육성** -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 제3산업단지조성 - 혁신역량강화	합계	253.1	18.4	90.7	109.1	19.5	15.4
		도비	126.5	10.1	49.9	47.4	10.7	8.5
		시군비	126.6	8.3	40.8	61.8	8.8	6.9
보은	**친환경-휴양(힐링)산업 육성** -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 - 농촌체험관 건립 - 과수원예 체험관 건립 - 혁신역량강화	합계	253.0	26.2	51.3	54.9	77.5	43.2
		도비	138.0	15.7	30.8	32.9	32.7	25.9
		시군비	115.0	10.5	20.5	22.0	44.8	17.3
옥천	**의료기기밸리 육성** - 제2의료기기 조성 지원 - 옥천 취정수장 증설 - 전략사업 육성 고도화 - 혁신역량강화	합계	253.0	183.8	24.8	18.8	12.8	12.8
		도비	126.5	88.4	13.6	10.3	7.0	7.0
		시군비	126.5	95.4	11.2	8.5	5.8	5.8
영동	**복합테마관광 기반 구축** -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 -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반구축 - 혁신역량강화	합계	253.0	69.7	47.3	21.0	56.0	59.0
		도비	138.0	41.8	28.4	12.6	27.6	27.6
		시군비	115.0	27.9	18.9	8.4	28.4	31.4
증평	**교육문화&스포츠산업 기반구축** - 에듀팜특구 기반조성 - 작은 교육문화특구 조성 - 종합운동장 건립 - 혁신역량강화	합계	253.0	46.0	46.0	46.0	46.0	69.0
		도비	103.5	20.7	20.7	20.7	20.7	20.7
		시군비	149.5	25.3	25.3	25.3	25.3	48.3
괴산	**유기농생태도시 조성** - 주민행복도시 조성 - 유기농엑스포광장 조성 - 혁신역량강화	합계	253.0	4.2	34.6	73.6	44.2	96.4
		도비	149.5	2.7	22.5	56.7	4.9	62.7
		시군비	103.5	1.5	12.1	16.9	39.3	33.8
단양	**녹색쉼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 - 세계동화마을 조성 -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 - 혁신역량강화	합계	253.0	56.2	93.2	44.0	51.0	8.6
		도비	149.5	21.6	60.6	28.6	33.2	5.6
		시군비	103.5	34.6	32.6	15.4	17.9	3.0

※ A그룹(도비65%) : 단양, 괴산, B그룹(도비60%) : 보은, 영동
C그룹(도비55%) : 옥천, 제천, D그룹(도비45%) : 증평

② 기반조성사업

(단위 : 억원)

연도	시군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18	소계	7개 사업	152	67.9	84.1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 시설 확충	19.4	9.7	9.7	
	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19.4	9.7	9.7	
	옥천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19.4	9.7	9.7	
	영동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9.4	9.7	9.7	
	증평	통합가족 지원센터 건립	30	9.7	20.3	
	괴산	버섯광장 조성사업	19.4	9.7	9.7	
	단양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25	9.7	15.3	
'19	소계	7개 사업	303	105	198	
	제천	물·놀이·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32	14	18	
	보은	뱃들놀이터 및 편의시설 조성	30	14	16	
	옥천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	65	18	47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아열대 온실 조성	52	13	39	
	증평	생활SOC형 행복 라키비움 조성	30	14	16	
	괴산	달래강 물빛따라 고향 가는길 조성	30	16	14	
	단양	두산지구 도로정비 사업	64	16	48	
'20	소계	7개 사업	334	119	215	
	제천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	120	15	105	
	보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기반조성	34	17	17	
	옥천	향수 호수길 기반시설 조성	44	17	27	
	영동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	34	15	19	
	증평	병영·문화·교육 이음길 조성	34	19	15	
	괴산	달빛 품은 화양구곡 길 조성	34	19	15	
	단양	매포 산업공해지역 도시공원 정비	34	17	17	

③ 공모사업

(단위 : 억원)

연도	시군	사 업 명	예 산 액			
			계	도비	군비	기타
'17	소계	7개 사업	118	40	78	
	제천	자동차부품 창업보육센터 건립	12	8.5	3.5	
	보은	속리산 전지훈련 및 휴양명소화 사업	15	4	11	
	옥천	청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	4.5	11.5	
	영동	영동 투자유치 촉진센터 건립	15	3.5	11.5	
	증평	항공우주과학 종합체험장조성	30	5.5	24.5	
	괴산	괴산새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12	6.5	5.5	
	단양	만천하 무궤도 낭만길 조성사업	18	7.5	10.5	

④ 인센티브사업

(단위 : 억원)

시군	시군	사 업 명	예 산 액			
			계	도비	군비	기타
'17		9개 사업	54.5	36	18.5	
	제천	의림지 주변 한전주 지중화 사업	8.0	8		
	보은	자연치유마을 체험시설 조성	10.0	8	2	
	영동	힐링관광 연계시설 구축	8.0	6	2	
	증평	나눔 베이커리 카페 조성	0.7	0.7		
		인삼 상설판매장 체험시설 설치	0.2	0.2		
		증평인삼 브랜드 홍보	0.4	0.4		
		보강천 물빛공원 활성화	4.7	4.7		
		물탱크 및 배수관로 설치	12.5	5	7.5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야간 경관조명 설치	10.0	3	7	

⑤ 행복마을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시군	2017			2018			2019			2020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도비
계	3.57	2.07	1.5	4.2	2.4	1.8	4.2	2.4	1.8	0.6
제천	0.09	0.09		0.69	0.39	0.3	0.33	0.18	0.15	0.09
보은	0.69	0.39	0.30	0.69	0.39	0.3	0.72	0.42	0.3	0.09
옥천	0.69	0.39	0.30	0.69	0.39	0.3	0.69	0.39	0.3	0.09
영동	0.39	0.24	0.15	0.39	0.24	0.15	0.09	0.09		0.12
증평	0.36	0.21	0.15	0.36	0.21	0.15	0.33	0.18	0.15	0.03
괴산	0.99	0.54	0.45	1.02	0.57	0.45	1.02	0.57	0.45	0.09
단양	0.36	0.21	0.15	0.36	0.21	0.15	1.02	0.57	0.45	0.09

※ 컨설팅 용역비 제외('17~'20) : 9.6억원(도비)

2.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상황

Ⅰ 추진배경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03.6.)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05.6.) 등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단계적 이전('12.12.)

○ 지역 간 불균형 시정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 마련

* 이전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집중

○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미흡 평가

Ⅱ 필 요 성

○ 공공기관 이전중심에서 벗어나 新성장지역거점으로 육성

○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과 상생발전 도모

○ 혁신도시에서 주변 지자체까지 공간 확대

Ⅲ 추진전략

1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반영('18. 2. 1.)

○ 3대 전략 및 9대 과제 중 **"혁신도시 시즌2"(산업)**

국 가 균 형 발 전 비 전 과 전 략 및 과 제			
비 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목 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3대 전략	사 람	공 간	산 업
9대 과제	① 지역인재 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 체계 구축	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② 도시재생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 지역으로	① 혁신도시 시즌2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③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19. 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계획으로서 **"혁신도시 시즌2"**를 **4가지 핵심과제**로 추진

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②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③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④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Ⅳ 과제별 추진상황

구분	핵심과제	세부추진상황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①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운영제도 추진**(달성실적) - '18년 18%(21.2%), '19년 21%(27.4%) **20년 24%(39.8%)**, '21년 27%, '22년 이후 30% - 지역인재협의체, 채용설명회 등 지원 강화 **② 이전공공기관 주관, 매년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 - 15개 기관(혁신도시 11, 오송지역 4) - '20년 : 5개 분야 234개 사업 시행 ※ '18년부터 첫 시작, 172개 사업, '19년 203개 사업
2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① 인프라 확충** 1) 복합혁신센터 : 복지편의시설, 기업지원 등 복합기능 - '18~'22(5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소재 - 부지 6,697㎡, 연면적 7,446㎡(지하1, 지상3) - 198억원(국 99, 도·군비 99) - 공연장, 일자리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2) 국립소방병원 : 소방공무원, 지역주민 진료 및 건강증진 - 300병상, 21개 진료, 연면적 39,343㎡, 맹동면 두성리 소재 - 1,401억원/ '20~'21 실시설계, '22~24 착수·준공

		②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협업사업 발굴 추진 - 사업명 :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 혁신도시·진천 일원, '21년(단년), 45억원(국비 100%) **- 공동주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진천군/ 도·진천교육청(지원)** - 내 용 : 비대면 교육특화, 교육콘텐츠 개발·학습 등
3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① 산업단지·특구 지정 및 운영** - 태양광특구 : '11부터 ~계속,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 유치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18~'24(7년), 지능형 첨단부품 산업 유치 -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 '19~'29(11년) - 에너지산학융합지구 : '19~'29(11년), 관련 대학·기업 유치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20~'30(11년), 에너지안전산업 유치 **② 입주기업 정착지원** - 매년 2억원 규모(도비), 30여 업체 대상 - 입주기업 임차료 및 부지매입 이자 지원, 최대 200만원 한도
4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① 문화진흥 네크워크 구축**(지역주민 및 이전공공기관) - 지역농산물직거래(1회), 환경정화(4회), 신규직원 스터디투어(1회) 지역공동체 8개소, 이전기관 문화프로그램 지원(3회) 등 **② 상생발전협의체 운영활성화 :** 연간3회(구성인원 22명) - 문화행사, 진로체험 등 안건상정 심의 - 지역주민 애로사항 불편해소 방안 논의 등

Ⅳ 향후계획

○ 산업단지·특구 현황 관리 및 지원 : 연중

○ 복합혁신센터 공사착공 및 완공 : '21 ~ '24

○ 국립소방병원 : '21~'22 실시설계, '22~'24 착수·준공

3.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상황

Ⅰ 필 요 성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 견인 한계

충북도에는 상주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통신, 교육, 공공서비스 기관의 이전으로 타 혁신도시에 비해 활성화가 저조하고 정주여건 확충에 불리한 실정

○ 공기업 및 대규모 기관(500인 이상)이 없고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되어 연관산업 유치 추진에 한계

- 공기업(15개)은 충북, 전북, 제주 배정 없이 7개 혁신도시에 배분(2~3개)

  * 강원(건보공단), 경북(도로공사), 경남(LH), 전북(연금공단), 광주전남(한전), 대구(가스공사) 등

○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실적 및 예산규모가 전국 하위 수준

- 지방세 납부실적 전국 8위(6.5%), 예산규모 10위(0.4%) 등

  * <참고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운영 현황 참조

Ⅱ 추진경과

○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 방침보고 : '17. 9. 25

○ 추가이전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2회) : '17. 9.

○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수립(충북연구원) : '17. 9 ~ '18. 5.

○ 공공기관 추가이전 지시(도지사) : '18. 5. 14

  *『수도권 내 미이전 ·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 위해 선제적 접촉 등 대응방안 마련

○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계획보고 : '18. 9. 20.

○ 국토부 추가이전 관련 방문·건의 : '19. 1. 2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추가이전 관련 방문·건의 : '19. 4. 5.

○ 충청권 민주당 당정협의회시 공기업 이전 건의 : '19. 6. 18.

○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전략회의(정무부지사, 실국장) : ’19. 7. 9.
○ 국토부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건의 : ’19. 8. 27.
○ 공기업(한국지역난방공사) 방문 및 이전건의 : ’19. 12. 19.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공약사업 반영건의 : ’20. 1. 20.
○ **VIP 충북혁신도시방문 시 추가이전 건의 : ’20. 2. 9.**
○ 국토부장관 이전공공기관장 간담회시 추가이전 건의 : ’20. 2. 13.
○ 국토부 이전공공기관 추가이전 건의 : ’20. 3. 17.
○ **균형위 방문 추가이전 건의(도지사) : ’20. 11. 18.**

[11. 18. 균형위 위원장 방문, 건의내용]
◦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예산규모·매출액 면에서 최하위 수준인 충북 혁신도시 보강 필요
⇒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 바이오, 에너지 관련 지역전략 산업과 부합하는 기관으로 배정 건의

Ⅲ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방침

○ 우리도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바이오 및 태양광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
- 태양광산업은 태양광 셀 생산의 70%를 점유하는 등 성과
- 바이오산업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보건의료 관련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폴리스와 연계, 시너지 효과기대

○ 이전기관 중 공기업 및 대규모 기관 유치하여 타 시도와 불균형 해소

○ 충북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관된 친환경에너지 기관 유치, 집적화 실현

○ 예산과 매출액이 큰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화

Ⅶ 향후계획

○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따른 중점유치대상기관 유치 활동 전개

- 예산규모와 매출액이 커서 상주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역성장 견인 및 지역발전 성장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관 적극 유치 활동

○ 공공기관 추가이전 중앙정치권 및 관련부처 등 탄력적 대응

- 관련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적극 유치 활동 전개

Ⅲ. 4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1. 1. 28.)

'21. 1월

제4차 균형발전특위원회 보고자료

< 목 차 >

1.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2.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

기획관리실

1.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 기본방향

○ 신행정수도권 시대에 따른 **충북 분야별 발전 도모**

- 청주공항, KTX오송역 활성화를 통해 **신행정수도권의 관문역할**
-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태양광·신에너지 등 **6대 신성장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 **청와대·국회이전에 따른 정부주요 기관 등 추가 유치**

○ **11개 시군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발전 + 4개 시·도 협의**

□ 추진상황 및 계획

① 행정수도 완성 추진관련 충북도 대응 전략 마련 연구용역 추진

▸ 개요 : ’21. 2. ~ 9. / 76,000천원 / 협상에 의한 계약
▸ 내용 : 충북의 영향 분석, 장·단기적인 충북도 대응 세부전략 마련

- (추진상황)

· 용역내용 논의·확정 : 충북연구원 협의(3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실국장, 교수 / ’20.9.25.)

· 계약의뢰(’21.1.13.) → 공고(1.19.~1.28.) → 제안서 평가(2.5.) → 계약(2.10)

- (향후일정)

· 착수보고회 : ’21. 2월말 / 실국장 등 / 용역방향, 내용 보고·논의

· 도민 의견 및 아이디어 수렴 : 토론회 개최(용역 중간보고회 활용)

② 충북 자체 민·관·정 TF 구성

▸ 구성 : 9 ~ 11명(학계·전문가 2명 / 정책기획관·균형발전과 등 5~7명 / 도의원 2명)

▸ 역할 :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한 충북(균형)발전 전략 도출
(용역추진과 병행하여 운영)

- (추진상황)

· TF 구성 및 추진방향 등 협의 : 도의회(1회), 균형발전과(3회)

※ 이상식 도의원 5분 자유발언('20.9.3.) : 행정수도 이전을 대비한 충북의 준비

- (향후일정)

· '21. 2. 10.까지 구성 / 월 1회 회의

· 충북(균형)발전 전략, 사업 발굴 → 용역에 반영

③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운영

▸ 구성 : 20명(시도지사 4, 시도의장 4, 국회의원 4, 민간 8)

▸ 역할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공조 대응(충북이 제안하여 출범)
– 분기별 개최 / 공감대 확산, 국회·정부 대응 등

- (추진상황)

· 출범 : '20. 9. 28(월) 10:30 / 사업계획 보고, 선언문 낭독 등

· 실무회의 : '20. 10. 30(금) / 4개 시·도 기획실장 등 / 세부사업 논의 등

- (향후일정)

· 1분기 협의회 : '21. 3월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건의 등

※ 주요활동 계획

분 야	주 요 내 용
공감대 확산	· 시도민 홍보매체 제작, 활용, SNS 홍보활동 전개 · 릴레이 언론기고 기획, 충청인 서명운동 전개 등
정부·국회 대응	· 대선공약 채택 요구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건의 ·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대응 등
시도민 의견수렴	· 4개 시도 권역별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 시민 단체 등 순회 간담회 등

④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한 광역지자체간 메가시티 추진 추세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 4개 시·도지사 합의문 서명(충청권행정협의회) : '20.11.20.

- 주요 추진내용

<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 > ※ 광역생활경제권의 핵심적 선제사업

▸ 국토교통부 공동건의 : '20. 12. 14. /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등 3개 노선

▸ 국무총리 건의 : '21. 1. 26. / 충북지사, 이장섭, 임호선 국회의원 등

·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 >

▸ (개 요)

· '21. 2월 ~ 12월 / (주관)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 (수행)4개시도 연구원

▸ (용역내용)

· 충청권 메가시티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 타 권역 메가시티와의 경쟁력 강화 방안(발전계획)

· 시도별·분야별 특화 발전 방안 및 기능 연계 방안

· 대규모 메가시티 사업 발굴 등

▸ (추진상황)

· 충청권 실무협의회 : '20.12.14. / 4개 시도 기획실장 / 용역 추진방안 협의

※ 기획단에 편성된 용역비 1억원 우선집행(부족액 추경반영, 1.5~2억원 예상)

- 향후일정

· 용역계약(2월), 연구용역 착수보고(3월), 중간보고(5~9월, 2회)

· 협의체구성(시·도민 의견수렴 등) : '21.2~3분기 중(용역 중간보고회 전후)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협력 사업 지속 추진

2.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 충북형 뉴딜(도 자체) 추진상황 ※ ’21.1.25일 기준

우리마을 뉴딜사업	➡	투자유치 뉴딜사업	➡	시군대표 뉴딜사업	➡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
708억원		1,930억원		3,979억원		3,570억원
①		②		③		④

① 3,673개 사업 추진, 연인원 120,754명 일거리 제공

▸ 완료 3,660개 사업, 이월 13개사업(’21.2월까지 완료 예정)

②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25개사 703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100억원)

▸ 타 지역기업 309억원, 도내기업 394억원

③ 국비 755억원(29개 사업) 확보, 추진중(기본계획, 설계용역, 착공 등)

▸ 증평 종합운동장(공사중, ’22년 완공 예정), 영동 체육공원(실시계획 인가중 ’21.2월 착공 예정), 수안보 스포츠타운(’21.3월 착공 예정)

④ 정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20.10.13)에 따라,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에 통합 추진

□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정부 한국판 뉴딜과 연계)

<추진상황>

○ 추진계획 확정·발표(’20.12.9.)

– 분 야 : 4대 분야(디지털, 그린, 휴먼, 공간 뉴딜)

– 실행과제 : 10대 프로젝트 157개 실행과제, 10조 8,662억원

– 예산확보 : 7,145억원(디지털 868, 그린 3,672, 휴먼 429, 공간 2,176)

※ 국비 4,688억원 확보, 유형별 사업 중점 관리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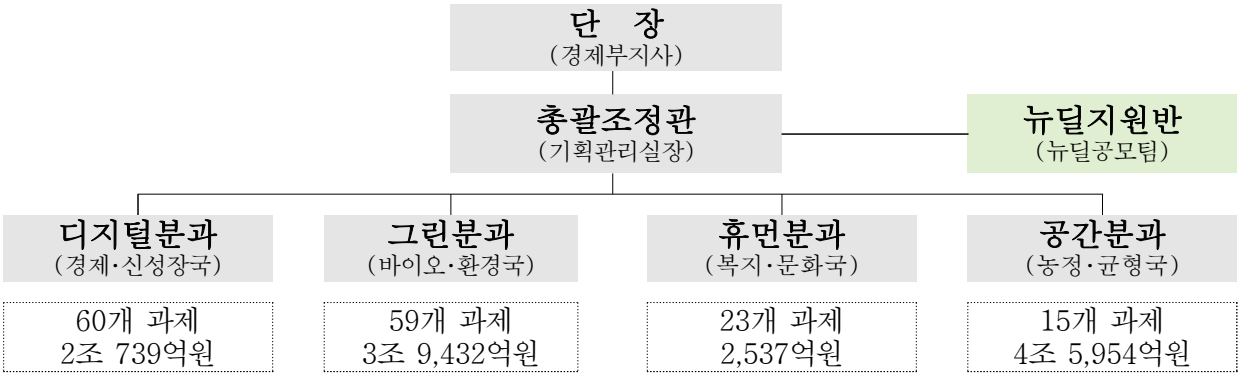
○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연계 11개 시군 자체뉴딜계획 수립**('21.1.8.)

– 11개 시군 830개 과제 10조 7,669억원

○ **뉴딜공모팀 신설 및 뉴딜추진단 운영**('21.1.10.)

– 뉴딜공모팀 : 팀장 1, 직원 4(6급3, 7급1)

–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 : 4대 분과, 경제부지사 단장



○ **공모사업 응모계획 심사평가단 운영**('21.1.20~. 매주 수요일 09시)

– 뉴딜공모사업(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중점) 타당성(중복사업, 재정여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검토 및 논리개발 대응

– 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참석

※ 필요시 실·국장, 충북연구원, TP, 과기원, 대학 등 전문가 참석

– 첫회(1.20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뉴딜공모 사업 2건 검토

○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21.1.25) ※ 17개 시·도 경제부지사 참석

–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등)

–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방안 발표(부처별)에 따른 시도별 대응 계획 수립 추진 논의 등

○ **지역균형뉴딜 및 공모사업 추진 관리계획 수립**('21.1.26.)

- 도 6대 신성장동력 산업과 연계한 대표사업 선정, 국비 확보 총력
- 공모사업의 논리 개발부터 응모, 선정, 대응까지 총괄 관리

※ 충북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타당성과 논리개발 완성도 제고

- 중앙부처 뉴딜·공모사업 동향파악, 신규사업 집중 발굴 등
- 뉴딜 붐 조성,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 부여로 범도민적 참여 유도

<향후계획>

○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

- 대표사업 선정, 국비 확보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집중관리
- 매월(도지사 보고), 분기별(실·국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

- 타 시·도 사례 분석우수사례 도입, 시·군 대표사업 중 중요사업 발굴

○ **시·군 뉴딜계획 종합 조정·관리**

- 시·군 추진상황 총괄 점검, 대표사업 관리

○ **뉴딜사업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자체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기타 국고보조사업

○ **뉴딜 붐 조성**(전문가 특강, 언론 홍보, 우수사례 발표회 등)

○ **인센티브 지원**(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우수직원 포상금 등)

참고 충북형 지역균형뉴딜(4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157개 과제, 10조 8,662억원)

구 분	실행 과제 (개수)	재원별 투자계획(억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57**	**108,661.7**	**67,808.6**	**8,839.6**	**11,287.9**	**20,725.6**
A. 디지털 뉴딜	**60**	**20,738.7**	**14,183.9**	**2,749.2**	**2,094.4**	**1,711.2**
① 스마트 산업 시스템 강화	21	2,084.3	1,090.8	619.9	267.0	106.6
② 신성장산업 고도화	18	16,339.0	11,933.3	1,756.0	1,383.7	1,266.0
③ 기술혁신 체계 구축	21	2,315.4	1,159.8	373.3	443.7	338.6
B. 그린 뉴딜	**59**	**39,431.6**	**15,861.5**	**3,980.7**	**7,291.5**	**12,297.9**
④ 스마트 물 관리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15	7,132.1	4,760.5	656.7	1,528.1	186.8
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구축	18	5,752.8	3,041.6	821.8	1,118.2	771.2
⑥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창출	26	26,546.7	8,059.4	2,502.2	4,645.2	11,339.9
C. 휴먼 뉴딜	**23**	**2,537.4**	**930.1**	**728.1**	**876.9**	**2.3**
⑦ 사회 안전망 강화	13	963.0	292.4	454.4	213.9	2.3
⑧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10	1,574.4	637.7	273.7	663.0	0.0
D. 공간 뉴딜	**15**	**45,954.0**	**36,833.1**	**1,381.6**	**1,025.1**	**6,714.2**
⑨ 도로·철도 등 SOC 확충	6	42,900.0	35,613.3	568.2	38.2	6,680.3
⑩ 균형발전 공간 네트워크 구축	9	3,054.0	1,219.8	813.4	986.9	33.9

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시멘트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

과세대상 (납세자)	세 율	세 수	주요 수혜지역
시 멘 트 (시멘트생산자)	1천원 / 톤 시멘트 40㎏ 1포 가격 5,000원 정도로 과세 시 5,040원 예상(40원↑, 0.8%↑)	522억원/연	강원, 충북

❍ [재원배분 변경] 지방재정법 개정(세수의 65%를 피해시·군에 배분)

- (현행) 도 70, 시군 30 → (개정) 도 35, 시군 65
- 시멘트세수가 피해지역에 우선 배분되도록 함

□ 그간 추진 경과

<20대 국회>

○ 지방세법(이철규의원)·지방재정법(권석창의원) 개정안 발의('16.9.29)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년간 논의('16~'19)

- 과세 전제로 세율·시행시기 등 논의 필요성 공감, '계속심사' 결정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폐기('20.5.29.)

<21대 국회>

○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이개호의원) 개정안 발의('20.10.16.)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안건 회부('20.11.23.)

- 본격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종료

※ 생산지역 국회의원, 주민 반대기류 형성으로 법안심사에 부정적 영향

▸ 엄태영의원 시멘트세 부과 반대, 기금(상생기부금) 조성 운용 찬성('20.11.27)

▸ 단양 31개 지역 단체 기금(상생기부금) 조성 찬성('20.11.28)

□ 추진상황

<시도 및 시군 연계 활동>

○ 시도지사 공동건의문(강원, 충북, 전남, 경북 도지사)('20.10월)

○ 시도의회 의장단 건의문(강원, 충북)('20.11월)

○ 강원 시장, 군수 공동건의문(강릉, 동해, 삼척, 영월)('20.9월)

○ 시멘트 생산지역 시장, 군수 공동협약서(동해, 삼척, 강릉, 영월, 제천, 단양)('20.11월)

○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의회 의장 공동 건의문(강원 강릉, 동해, 삼척, 영월 / 충북 제천, 단양 / 전남 광양, 장성)('20.11월)

○ 충북 11개 시장, 군수 공동 건의문('20.12월)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운용 공동 협약서(제천, 단양)('20.12월)

○ 시멘트세 설명자료(과세타당성, 업계기금 공공재원 사용 부적합성) 주민 배포('20.12~'21.1) ※ 단양군 및 제천시 이통장·주요기관단체 관련자료 우편 발송

○ 방송토론회 개최(CJB, 시사공방)('21.1.20)

<정부, 국회·정당 건의활동>

○ 행정안전부장관 건의(영동, 노근사건기념식)('20.7월)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무총리 방문 건의('20.9월)

○ 국회 행안위 충청북도 국정감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시 건의('20.10월)

○ 충북·강원 도지사 국회방문, 법안통과 건의('20.12월)

○ 임호선 국회의원 방문, 법안소위 심사 등 위원회 속개 건의('21.1월)

□ 향후계획

○ **지역 민관정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운영**('21. 2월)

- 충북・강원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100~150명정도

※ 2. 3.(수) 충북·강원 공조회의, 공동대책위 구성·운영계획 협의

- 주민설득 및 공감대 형성, 논리개발, 대안제시, 입장표명・건의 등

○ **시멘트세 신설에 대한 지역내 찬성 분위기 조성**

- 세금 vs 기금 간 찬반논쟁 종식(시멘트세 필요성, 환경피해, 세금 vs 기금 비교 등) 방송토론회 개최('21. 2~3월)

※ KBS청주·MBC충북, 국회의원·찬반 주민대표 등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충북세정포럼 개최('21. 3월, 제천)

※ 지역민 50명 정도 참여, 지방재정 확보방안, 시멘트세 신설 필요성, 찬반 토론 예정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설명 등 국회 입법활동 전개**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시멘트세 법안심사 속개 건의('21. 2월)

※ 매년 11~12월 심사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중 신세원(지역자원시설세 등) 분야는 국회 의사일정이 있는 경우, 수시로 법안소위에서 심사토록 건의

- 충북·강원 등 관련 지자체와 공조회의, 법안통과 추진

(시멘트세 입법방안 강구, 법안소위 심사 지원, 법안통과 건의 등)

※ 4개 시도지사(강원·충북·전남·경북) 국회 공동방문 입법통과 건의('21. 4월)

참고 주요 쟁점사항 대응논리

<기금 vs 시멘트세>

○ 재원조성의 법적근거 → 기금은 없으나 시멘트세는 있음
- (기금) 시멘트업계 자의적 기부(연 250억원 공언), 재원확보 불확실성 상존 - (시멘트세) 법에 납세의무 규정, 안정적·지속적 재원확보(연 522억원) 가능
○ 기금으로 해야만 피해지역 직접지원 → 세수 100% 피해지역 지원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신설되며, 65%는 시군 직접사용, 35%는 도 특별회계로 전액 지원
○ 재원사용의 용도제한 → 세금이 오히려 지역주민 재정수요에 부합하게 사용
- 기금에서 주장하는 건강검진, 경로당보수 등 세금도 사용가능 - 보건·환경개선 등 지역인프라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
○ 기금과 달리 세금은 지방교부세 수입액에 영향 → 영향 없음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신설, 제천·단양의 지방교부세 수입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자리 감소 및 임금 문제 → 세금과 기금 모두 무관
- 만약 관계 있다 하더라도 세금·기금은 같은 입장 - 세금만 일자리 감소와 임금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시멘트세 신설>

○ 타 제조업 과세확산 우려 → 아니다
- ('19.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발전업 > 시멘트제조업 > 제철제강업 > 석유화학제품업 → 환경피해 보전 측면에서 시멘트제조업은 타 제조업보다 과세 시급
○ 시멘트 및 건설자재 인상으로 국민부담 가중 → 국민부담 미미
-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소비자물가 +0.004%)은 미미(' 14년 한국재정정책학회 조계근 박사)
○ 시멘트 생산과 주민 피해 상관성 없음 → 주민피해 극심
- 타지역 164명과 시멘트 지역 41명 비교시 기관지 손상 확인(' 20. 강원대 환경보건센터) - 비산먼지 배출 등으로 각종 환경 및 건강피해는 지속되는 실정
○ 석회석과 이중과세 → 별개 과세
- 석회석(채광자, 광물가액)과 시멘트 생산(시멘트 생산자, 생산량)은 별개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21. 1. 28.(목) 14:00
특별위원회 회의실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Ⅱ.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

균형건설국

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및 추진상황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계획의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계획수립의 추진

○ '05. 07월 : 「철도건설법」 제정

○ '06. 03월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06~'15) 확정 및 고시

○ '11. 04월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확정 및 고시

○ '16. 06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확정 및 고시

○ '21. 상반기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수립 예정

* 공청회 개최('21. 2.) → 확정·고시('21.上)

❑ 4차 계획 반영 충북도 추진상황

○ '19. 04. :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20. 4.)

- 최적 노선 검토 및 타당성 검토(용역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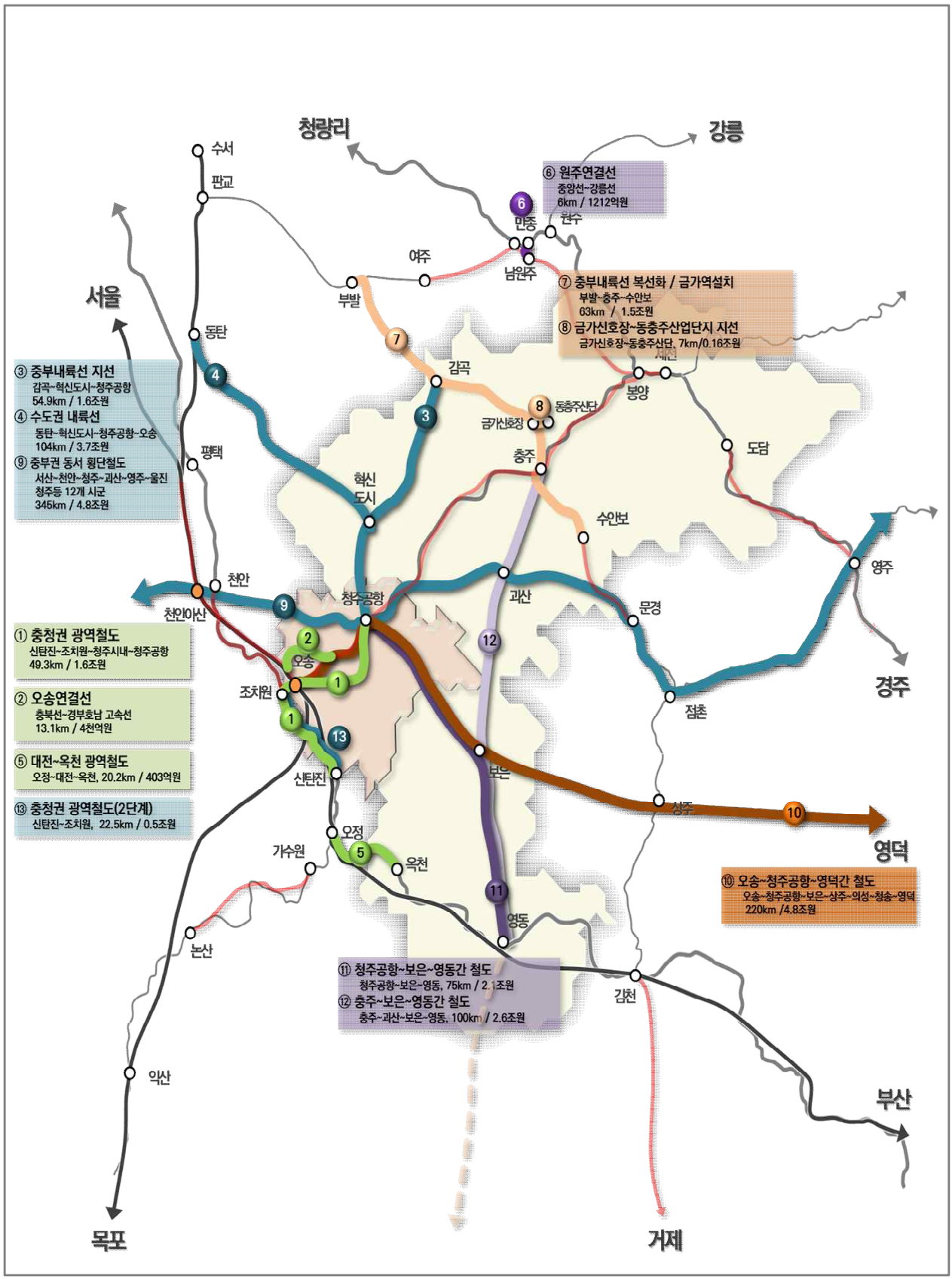
○ '19. 10. : 충청권광역철도 등 13건 건의(도 → 국토부, 붙임참조)

※ 국토부는 사업비 규모 관련 기재부와 협의 중으로 2월경 시안 마련과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확정할 계획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마련 중

붙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내역**

구분	사업명[구간]	규모	비고
1	**충청권 광역철도**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49.3km / 1.6조원	
2	**오송연결선** [경부·호남고속선~충북선]	12.6km / 0.4조원	
3	**중부내륙선 지선**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54.9km / 1.6억원	
4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동탄~혁신도시~청주시내~오송역]	104km / 3.7조원	
5	**대전~옥천 광역철도** [오정역~대전역~옥천역]	20.2km / 403억원	
6	**원주연결선** [중앙선~강릉선(만종역)]	6km / 1,212억원	
7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설치** [이천~수안보/금가역]	63km / 1.5조원	
8	**금가신호장~동충주산업단지 지선** [금가신호장~동충주 산업단지]	7km / 0.16조원	
9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산~당진~천안~청주~괴산~울진]	345km / 4.8조원	
10	**오송~청주공항~영덕간 철도** [오송~보은~상주~의성~영덕]	220km / 4.8조원	
11	**청주공항~보은~영동간 철도** [청주공항~보은~영동]	75km / 2.1조원	
12	**충주~보은~영동간 철도** [충주~괴산~청주~보은~영동]	100km / 2.6조원	
13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신탄진~조치원]	22.5km / 0.5조원	

참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노선



2. 건의사업 추진현황

1 충청권광역철도

□ 추진상황

○ `19.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

○ `20. 9.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대전·세종·충북) 국토부 제출

○ '20.12.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공동 반영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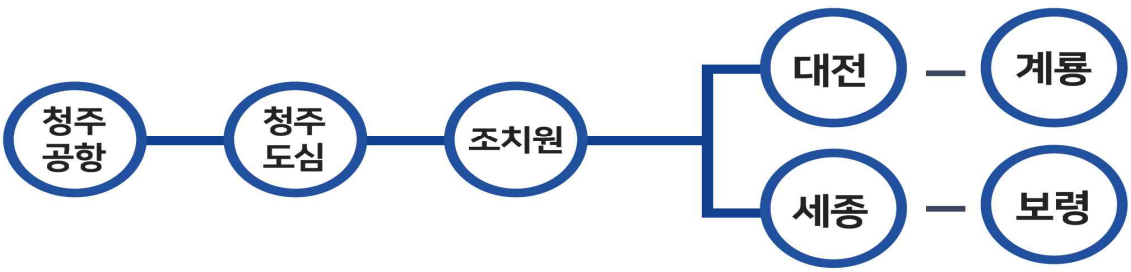
□ 필 요 성

○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청주·대전·세종·보령 등 신행정수도권내 **광역도시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하나의 생활권 형성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의 핵심사업**

○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급부상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핵심사업**

□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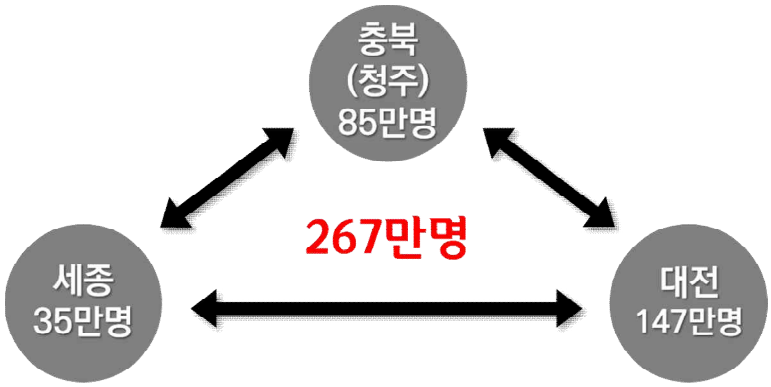
※ 전체 사업규모 : L=147.5km, 4조 5,776억원



구 간	구 분	거리 및 사업비
• 청주공항~청주도심~오송	광역철도	L=22.2km, 1조 3,882억원
• 오송~조치원(복선)		L=4.5km, 707억원
• 조치원~신탄진		L=22.6km, 1,187억원
• 조치원~세종	국 철	L=10.0km, 8,657억원
• 세종~보령		L=90.0km, 2조 1,343억원

□ 청주시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효과

①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 인적교류 예상 (1일) >

구분	현재	광역철도 구축시	비고
계	**16.5만 명**	**22.0만 명**	**33% 증**
청주 / 대전간	8.7만 명	11.7만 명	34% 증
청주 / 세종간	7.8만 명	10.3만 명	32% 증

② 청주/대전·세종간 시간 및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

		現 버스		광역철도		단축
(대전)	• 통행시간	120분	➜	50분	:	△ 70분
	• 교통비	6,050원	➜	2,150원	:	△ 3,900원
(세종)	• 통행시간	80분	➜	28분	:	△ 52분
	• 교통비	3,200원	➜	1,750원	:	△ 1,450원

③ 청주시민의 오송역 이용자 증가 예상

○ **오송역 이용객 : 현 860만 명(년) → 1,016만 명 (156만 명, 18% 증)**

* 현 청주-서울간 버스 이용객(267만 명)의 30%가 KTX전환 예상

* 현 청주-서울간 승용차 이용객(253만 명)의 30%가 KTX전환 예상

참고 충청권광역철도

제천
서울
청주국제공항
오송
KTX
조치원
경부고속철도
조치원~세종청사
일반철도
청주공항~청주시내
~신탄진 광역철도
세종청사
호남고속철도
보령
신탄진
세종~보령 일반철도
반석
대전1호선
오정
목포
대전
옥천
서대전
계룡
부산
목포

2 오송연결선

□ 추진상황

○ '19. 10.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 '19. 12. ~ '20. 4. : 오송 연결선 설치방안 연구용역 (충북도)

□ 추진방안

① 오송연결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 오송역 ~ 청주역
- 12.6km, 4,000억원 소요

* 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後 사업추진은 추후 별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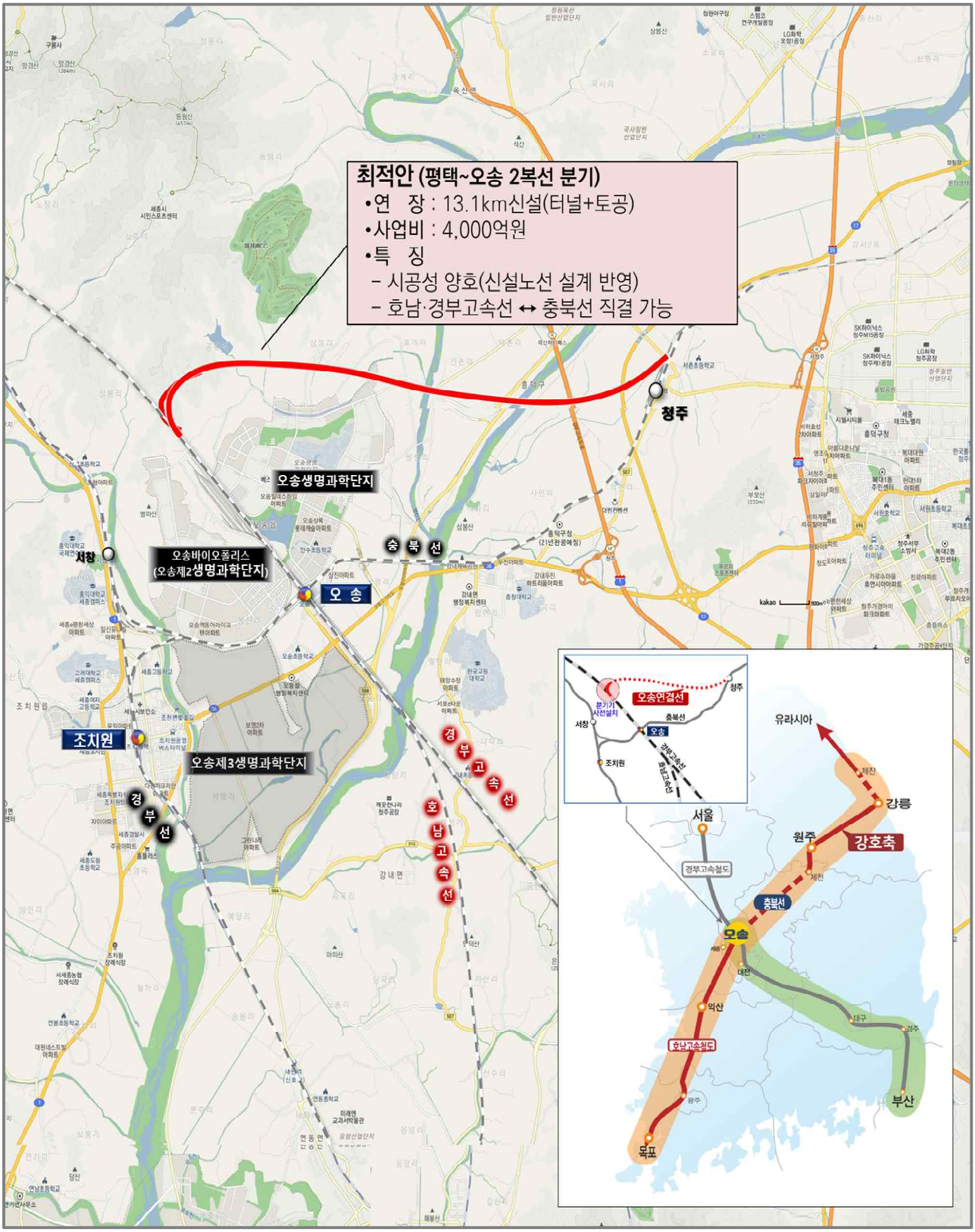
② 오송 분기기 설치

- 오송역 상행 7.0km 지점에 설치
- 550m, 220억원 소요

※ 신설노선내 분기로 운행노선 분기와 달리 기술적 문제 크지 않음

⇨ 先 오송분기기 설치, 後 오송연결선 추진

참고 오송연결선(호남·경부고속선↔충북선 직결)



3 중부내륙선 지선

□ 사업개요

○ 위　　치 : 감곡(음성)~혁신도시~청주공항

○ 사업규모 : 54.9km(단선)

○ 총사업비 : 16,499억원

□ 필 요 성

○ '16년 개통 경강선(성남-여주) 복선 전철과 '21년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선(부발-문경)철도,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및 강원권과 충청권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

○ 충북 북부권 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음성, 금왕, 충북혁신도시 등의 지역 거점의 발전과 주변지역으로의 경제 활성화 도모**

4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 사업개요

○ 위　　치 : 동탄~안성~선수촌~혁신도시~청주시내~오송역

○ 사업규모 : 104km, 광역철도

○ 총사업비 : 37,04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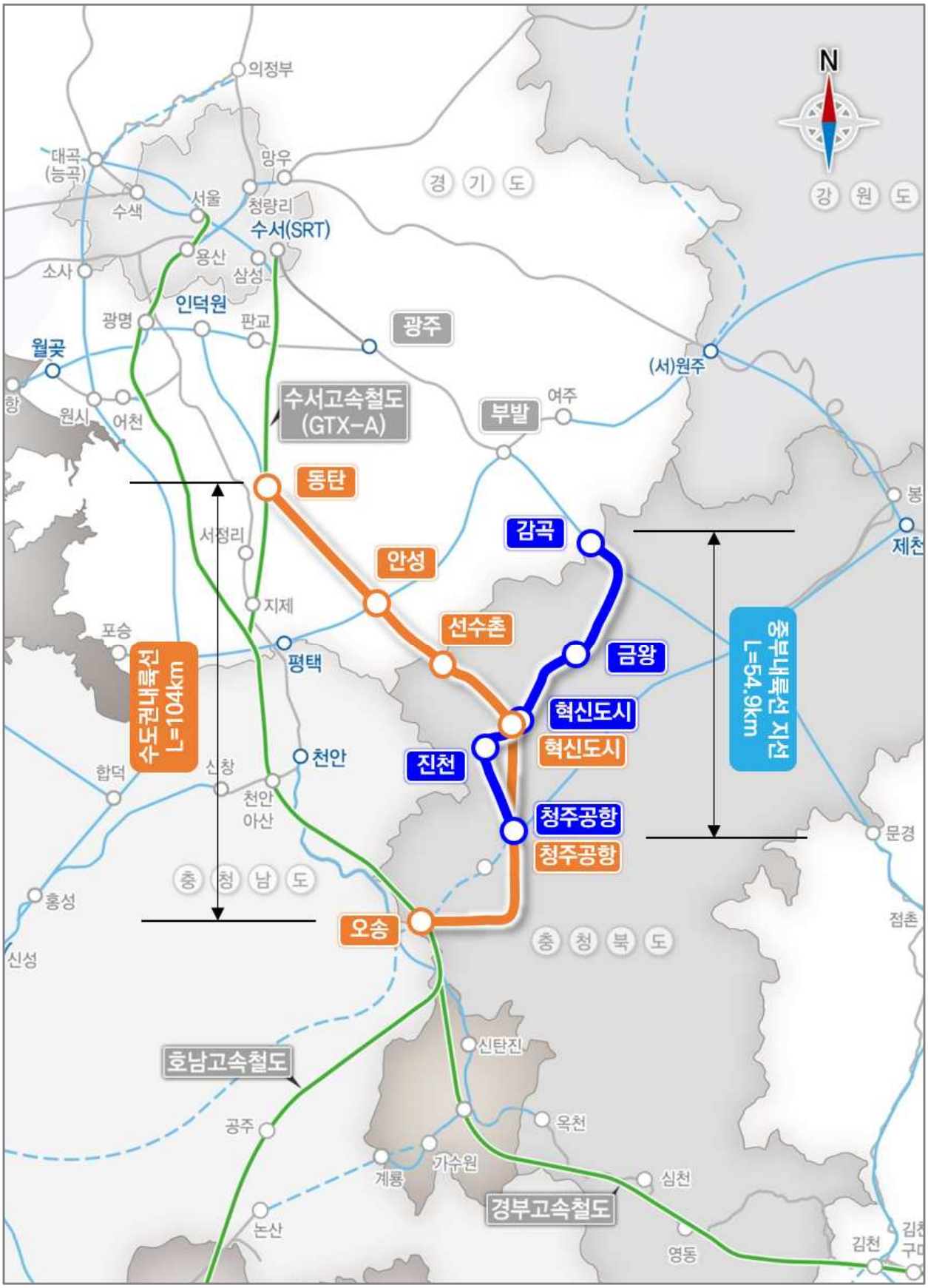
□ 필 요 성

○ 수도권 남부-충청권-경부·호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기능 분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접근성 개선**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오송역 활성화** 및 수도권과 대전광역권 연결로 **충북을 국가발전 구심점으로 도약**

※ **중부내륙선 지선**과 **수도권내륙선**은 노선 성격이 서로 다르나 중복구간(혁신도시~청주공항)이 있어 어느 한 노선이라도 반영될 경우, 나머지 노선 추진 용이

참고 중부내륙선 지선 &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⑤ 대전~옥천 광역철도

□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오정역) ~ 옥천

○ 사업기간 : 2017 ~ 2023(6년간)

○ 사업규모 : 20.2km(대전 12.3km, 옥천 7.9km)

○ 총사업비 : 403억원(국비 233억원, 지방비 170억원)

□ 필 요 성

○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나 교통연계 미흡으로 낙후도가 높은 **옥천군과 대전시를 광역철도로 연결하여 충청권 상생발전 도모**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1단계 연계를 통한 **충청권 대중교통망의 개선과 침체된 충북 남부권역 균형발전 견인**

□ 추진상황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추가사업 반영 : ‘16. 06.

○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선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 ‘16. 12.

○ 국토부·충북·대전 기본계획 추진 협의 : ‘19. 10.

* 대전 역신설 검토(신흥·식장산·세천), 충북·대전간 운영비 분담 추후 확정 전제

○ 기본계획수립(사업비 분담 포함) 용역 中 : ‘20. 02.~‘2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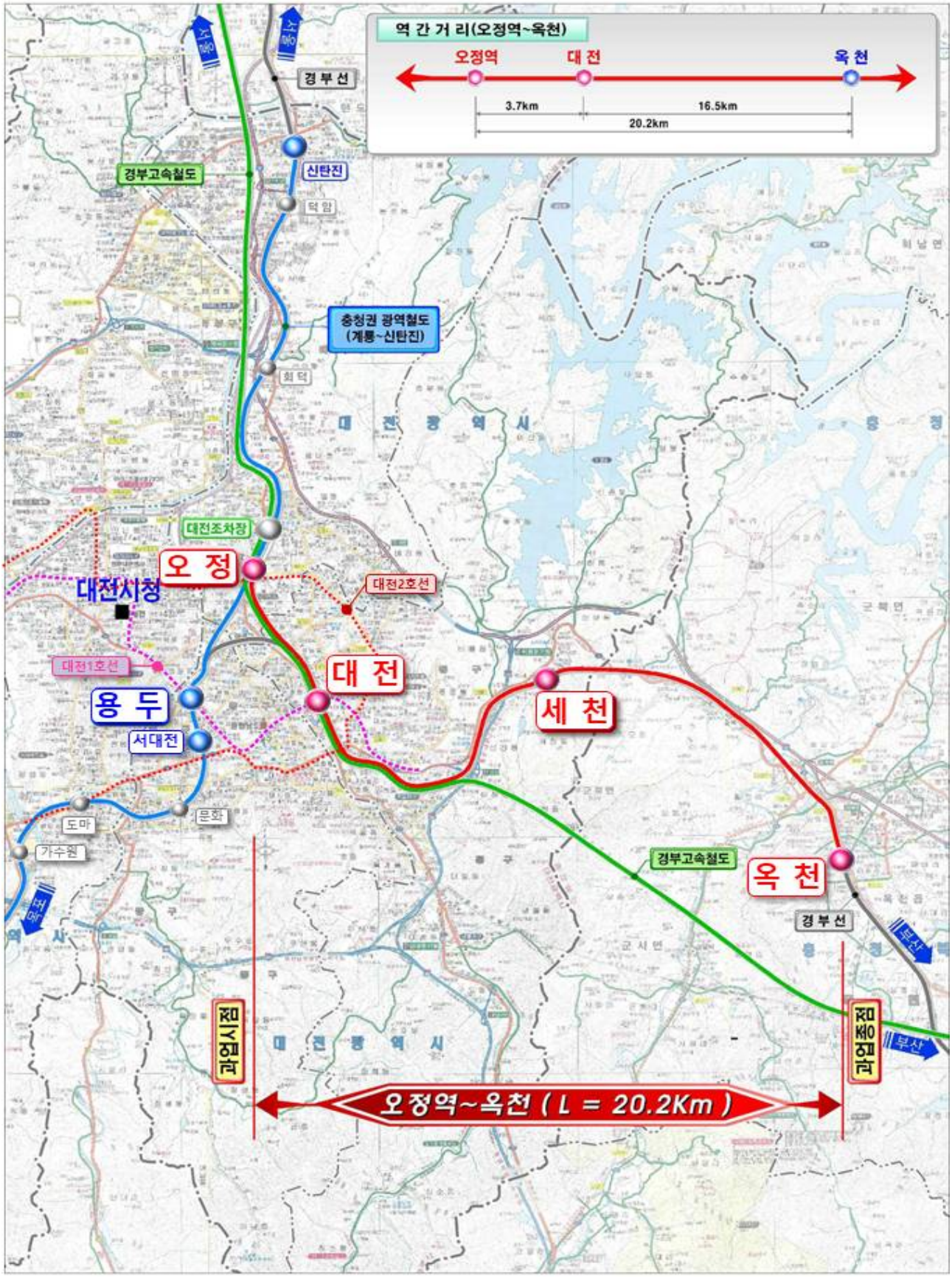
- 대전·충북간 사업비 분담안 합의 완료

* 건설비 : 거리비율에 따라 충북40% : 대전60%

□ 향후계획

○ 실시설계(`21) → 착공(`22) → 준공(`23)

참고 대전~옥천 광역철도


역 간 거 리(오정역~옥천)
오정역
대 전
옥 천
3.7km
16.5km
20.2km
경 부 선
경부고속철도
신탄진
덕 암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신탄진)
회 덕
대 전 광 역 시
대전조차장
오 정
대전시청
대전2호선
대전1호선
용 두
서대전
대 전
세 천
도 마
문화
가수원
경부고속철도
옥 천
경 부 선
부산
부산
과업시점
과업종점
오정역~옥천 (L = 20.2Km)

⑥ 기타사업

① 원주연결선(남원주역~만종역)

○ 사업내용 : 연결선 신설(단선 또는 복선)
○ 사업규모 : 단선 6km, 복선 9km
○ 총사업비 : 단선 1,212억원, 복선 1,764억원
○ 필 요 성
- 강호선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목포~강릉 직결 운행을 위한 필수 사업

②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설치(이천~수안보역)

○ 사업내용 : 복선전철
○ 사업규모 : 63km
○ 총사업비 : 15,000억원
○ 필 요 성
- 향후 남부내륙선 철도, 수서~광주구간 개통으로 인한 선로 용량 확보
- 금가역 기능변경으로 개발편중에 따른 상대적 소외지역인(동부 5개면)철도교통 편의 제공

③ 금가신호장~동충주산업단지 지선

○ 사업내용 : 단선전철
○ 사업규모 : 7km
○ 총사업비 : 1,579억원
○ 필 요 성
- 산업단지 활성화 및 철도 물류망 형성으로 물류비용 절감
- 충주역 여객 환승역으로, 화물수송기능은 산업단지 지선 신설로 기능분담
- 충주 동부지역 과거 개발소외(공군부대, 충주댐 등 환경규제) 해소 기여

④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당진~천안~청주~괴산~울진)

○ 사업내용 : 단선전철
○ 사업규모 : 345km
○ 총사업비 : 47,824억원
○ 필 요 성
- 중부권의 서해안 산업클러스터, 동해안 관광벨트를 상호연계하고 집적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신발전축 개발
- 남북축 중심의 교통망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 기여

⑤ 오송~청주공항~영덕간 철도(오송~보은~상주~의성~영덕)

○ 사업내용 : 복선전철
○ 사업규모 : 220km
○ 총사업비 : 48,000억원
○ 필 요 성
- 중부 내륙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

⑥ 청주공항~보은~영동간 철도

○ 사업내용 : 단선전철
○ 사업규모 : 75km
○ 총사업비 : 21,446억원
○ 필 요 성
- 청주공항 이용권역 확대
-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청주시의 광역도시화 기반시설 확보

⑦ 충주~보은~영동간 철도(충주~괴산~청주~보은~영동)

○ 사업내용 : 복선전철
○ 사업규모 : 100km
○ 총사업비 : 25,706억원
○ 필 요 성
- 충북 도내권역 북부권과 남부권을 잇는 철도건설을 통하여 접근성을 개선 및 도내 낙후지역이 없는 균형 발전
- 속리산 법주사 및 정이품송 등 관광지의 활성화 도모

⑧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 사업내용 : 복선전철
○ 사업규모 : 22.5km
○ 총사업비 : 5,081억원
○ 필 요 성
-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및 KTX 오송역 이용 활성화

Ⅱ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 추진배경

○ 도내 인구와 산업, 개발 수요가 청주권역에 집중되고, 진천·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의 지역불균형 문제 대두

○ 이에, 발전도가 낮은 저발전지역에 대하여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 도에서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 저하와 도민통합을 저해하는 지역불균형을 해소코자 추진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 주 재원

○ 도 일반회계 전입금(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 사업종류

○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공모·인센티브 사업, 행복마을 사업 등

<1단계>	• 지원시군 : 6개시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사업종류 :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2단계>	• 지원시군 : 7개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사업종류 : 전략사업, 공모사업, 협약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3단계>	• 지원시군 : 7개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사업종류 :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 지원시군 선정

○ 단계별로 지역발전도 분석을 통해 발전도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2.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2021 (5년간)

○ 총사업비 : 3,738억원(국 297, 도비 1,591, 시군비 1,850)

○ 대상시군 :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사업종류 :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 등

○ 대상사업 : 경제활성화, 도민 삶의 질 향상, 시군 특성화 사업 등

< 시·군별 3단계 전략사업 추진분야 >

- (제천) 자동차 부품산업
-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
- (증평) 교육문화&스포츠 산업
- (단양) 관광산업
- (보은) 친환경-휴양(힐링)산업
- (영동) 복합테마관광 플랫폼 구축
- (괴산) 유기농 생태도시 조성

□ 주요성과

○ 지역특성 고려한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3단계 발전도지표 전후 비교, 지역격차 완화

- 저발전지역 발전도 합 : ('16) -4.27 → ('20) -3.96
- 기타지역 발전도 합 : ('16) 4.27 → ('20) 3.96

3.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정부 및 도에서 균형발전정책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간 불균형 격차 지속

→ **인구, 산업, 경제 부문 등에서 저발전지역 점유율 감소세**

○ 도의 핵심 주력사업 청주권역에 집중, 성장·발전 동력 양극화 지속 예상

○ 이에, 상대적 자립 위축되는 남북부권의 **지역발전 성장동력 구축 도모를 위한 특별지원 필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저발전 시·군 집중 지원으로 지역격차 해소

2 4단계 지원대상 시·군 선정

□ 기본방향

○ 도내 지역간 불균형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선정

○ 선정지표 활용 지역발전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선정

□ 지표선정(안)

○ 기존지표 보완 및 전문가 자문통한 공정·객관적 지표 선정

○ 정부·도의 정책부합성에 기반한 대표성 있는 지표 고려

○ 지역민 삶의 질 및 사회변화에 따른 최신지표 반영 필요

3 지원기준 및 재원 검토

□ 지원기준

○ 사업유형 :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 사업 등

※ 전략사업은 5년계획수립, 그 외사업은 매년 수립

○ 지원방법 : 발전도 분석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등

□ 재원검토

○ 재　　원 : 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 예산규모 : 보통세 3%이상 수준 유지

4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5년간)

○ 대상지역 : 지역발전도 낮은 시·군

○ 사업규모 : 미 정

○ 대상사업

- 도 핵심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강호축 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산업 등)
- 국가 및 도 종합계획과 연계 국비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
- 지역 미래 성장동력 기반 사업, 지역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 등

□ 추진일정

○ '21. 2. : 저발전지역 선정을 위한 불균형 실태 분석

○ '21. 4. : 시·군별 사업계획 발굴·제출

○ '21. 6. : 시·군별 사업계획 검토(도, 센터)

○ '21. 7. : 시·군별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 '21. 8. :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확정

Ⅳ. 5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1. 3. 22.)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21. 3. 22.(월) 14:00
특별위원회 회의실(신관5층)

제5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보고자료

< 목 차 >

1.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2.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우리도 대응계획

기획관리실

Ⅰ.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 및 중앙부처 공모대응 방안

①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

□ 투자계획

○ 4대 분야(디지털, 그린, 휴먼, 공간 뉴딜), 157개 실행과제

○ ('20～'25) 10조 8,662억원 ※ '21년까지 계획 : 18,791억원

– (디지털) 2조 739억원 (그린) 3조 9,432억원 (휴먼) 2,537억원 (공간) 4조 5,954억원

□ 추진상황

○ 사업비 확보현황 : 1조 6,598억원 ('21년까지 투자계획 대비 88.3%)

– 분야별

구분	계획 대비 확보액(억원)						
	계 획	확 보	예 산 액				계획대비 확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08,662**	**16,598**	**10,896**	**1,011**	**2,220**	**2,471**	**15.3%**
디지털	**20,738**	**1,084**	740	107	224	13	5.2%
그린	**39,432**	**8,328**	3,539	728	1,607	2,454	21%
휴먼	**2,538**	**605**	147	154	303	1	23.8%
공간	**45,954**	**6,581**	6,470	22	86	3	14.3%

– 유형별

구분	계획 대비 확보액(억원)						
	계 획	확 보	예 산 액				계획대비 확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08,662**	**16,598**	**10,896**	**1,011**	**2,220**	**2,471**	**15.3%**
한국판뉴딜	**34,221**	**8,325**	3,607	711	1,577	2,430	24.3%
지자체주도	**1,142**	**239**	-	113	126	-	20.9%
공공기관선도	**45**	**47**	47	-	-	-	104%
기타국비보조	**73,254**	**7,987**	7,242	187	517	41	10.9%

○ 사업별 추진상황

분야별	계	완료	정상 추진	지연 (부진)	추진 불가	비고
계	**157**	-	139	16	2	
디지털 뉴딜	60		51	8	1	
그린 뉴딜	59		54	5		추진불가(2) -부처사업 취소(1) -장기추진과제(1)
휴먼 뉴딜	23		21	1	1	
공간 뉴딜	15		13	2		

○ 신규사업 추가 발굴 : 10건 / 1,817억원

- **(디지털)** 6건 1,194억원 **(그린)** 3건 214억원 **(휴먼)** 1건 409억원

□ 향후계획

○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 준비

- 공모개요

· **대　　상** :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지자체별 2개 사업 응모**

· **공모과제** :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 확산이 가능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 **선정규모** : 25개 사업(특교세 총 300억원)　※ **지원한도 : (광역) 30억원 (기초) 10억원**

· **심사기준** : 정합성(디지털·그린), 효과성, 구체성, 창의성, 민간 등 협업, 추진역량

- 추진일정

· 우수사업 제출(4월초) → 1차 서면심사(4월) → 대국민투표(5월초) → 우수사업 경진대회(5월말) 최종선정

② 중앙부처 공모대응 방안

□ '21년 공모사업 선정목표 : 167건 / 6,739억원

※ '20년 선정 : 133건 / 5,237억원(방사광가속기 제외)

□ 공모사업 대응 추진상황

○ **공모사업 사전 심사평가회의 개최**(2. 8.)

- '21년 응모 대상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적정성, 대응논리 등 심사

※ 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20건 / 4,067억원)

○ **중점관리대상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2. 23.)

- 응모 前 : 동향파악, 사업계획서 컨설팅·최종점검회의(경제부지사 주재)
- 응모 後 : 담당 실·국 공조, 부처 대응
- 실국별 전담자 지정 관리 : 뉴딜공모팀

○ **주요 공모사업 자문인력 구성**(3. 10.)

- 12개 분야, 100명(ICT, 데이터·AI,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농정, 환경, 문화관광 등)
- 공모사업 응모 전,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자문

○ **주요 공모사업 점검회의**(1. 20.~ 매주 수요일)

- 5회 / 6건(스마트시티 챌린지·솔루션 확산사업 등)

※ 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담당 실국장

-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논의

❖ 주요 공모사업 대응 추진체계

▸ 정부공고 → 소관부서,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 뉴딜공모팀 컨설팅 → 분야별 자문위 구성 및 자문 → 사업계획서 최종점검회의(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 응모

□ 향후 대응방안

○ **뉴딜관련 정부 추가 공모동향 파악**

- 부처설명회, 공모일정, 주관기관, 선정요건 등
- 매주 공모동향 파악, 관련 부서 및 기관 전파

○ **사업계획서 완성도 제고**

- 사업계획서 컨설팅(대응논리, 추진전략, 세부과제 등)
-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서 논리 보완
- 사업계획 최종 점검회의(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 **실국 공조, 부처 대응**

- 필요 시 지역인사(국회, 지역연고 부처 공직자 등) 활용 대응

2.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우리도 대응계획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개요

○ 추진배경

– **수도권 일극화 대응**과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 ❖ 국토 다극체제 전략 : 3+2+3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더불어민주당, 2020. 12월)
> - (연합형) 수도권, 부울경, 충청권 + (통합형) 대구·경북, 광주·전남
> + (강소권 메가시티) 전북, 강원, 제주

○ 주요내용(4개 시·도 합의문)

–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

– 사회, 경제,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서 공동발전 협력 강화

–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공동 연구용역 추진

–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공동사업 협력 추진 등

○ 주요 추진상황

– 4개 시·도지사 합의문 서명(충청권행정협의회) : ’20. 11. 20. / 세종수목원

–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진(교통과)

· 국토부 공동건의(’20.12.14.), 국무총리 건의(’21.1.26.) 등 다수

–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 추진 논의 : ’20. 12. 14.~

· 시·도 기획실장 회의(3회), 시·도 실무+연구원회의(1회) 등

> ❖ 공동연구용역 체결 : ’21. 3. 11.(착수일로부터 9개월) / 1억원
> - (주관)대전세종연구원 (참여) 충북.충남연구원
>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비전 제시, 분야별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등

○ 향후일정

–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 : ’21. 4월초(시·도지사 참석)

– 시·도지사 정례 간담회(신규, 매월) : ’21. 4월 ~

– 시·도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21. 6월

□ 우리도 대응계획

○ 추진방향

– 충청권 내에 충북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 도모

· 청주공항, KTX오송역 활성화를 통해 향후 신행정수도권의 관문으로 도약

· 바이오, 신에너지 등 6대 신성장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 충청권 시·군의 공통 특성을 활용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추진으로 도내 균형발전 기여

– 타 메가시티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과 더불어 충청권 내에서 충북의 발전전략 모색

○ 추진계획

– 행정수도 완성추진 대응 충북도 용역과 민·관·정 TF 활용으로 충북 발전을 이끌 메가시티 전략·사업 발굴

① 행정수도 완성 추진관련 충북도 대응 전략 마련 연구용역 추진

❖ 개요 : ’21. 2. ~ 10. / 69백원 / 충북연구원
❖ 내용 : 충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단기적인 충북도 대응 세부전략 마련

· **(추진상황)**

▸ 계약(’21.2.26.), 착수보고회(’21.3.4. / 행정부지사, 관련 실국장 등)

· **(향후일정)**

▸ 중간보고회 : ’21. 7월 / 실국장 등 / 용역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도민 의견 및 아이디어 수렴 : 토론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② 충북 자체 민·관·정 TF 구성·운영

❖ 구성 : 13명(교수 2명, 연구원 2명, 정책기획관·균형발전과 등 도 관련부서 8명, 도의원 1명)
❖ 역할 : 행정수도 이전, 메가시티 대응 충북(균형)발전 전략 도출
※ 용역추진과 병행하여 운영

· **(추진상황)** TF 구성(’21.2.25.), TF 제1차 회의(’21.3.19.)

· **(향후일정)** 격월 개최(실행 가능한 충북발전 전략, 사업 발굴)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공동연구 용역에 충북의 전략과 우선 사업을 반영 추진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21. 3. 22.(월) 14:00
특별위원회 회의실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Ⅰ.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도 준비상황

Ⅱ.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Ⅲ.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균형건설국

Ⅰ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도 준비상황

1.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상황

□ 추진배경

○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1~'40) 재수립에 따라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 전국 14개 광역계획권 중 중복 지정으로 계획간 일괄성 상실

  * 행복도시, 대전, 청주, 공주역세권 권역 중복 문제발생

- 각각의 중심도시가 달라 배후지원도시 설정과 개발축 설정 등 불일치

○ 지역적으로 중복된 행복도시,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광역도시계획의 상충방지 및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필요

* 추진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용 역 개 요〉

- ▸ 목표연도 : 2040년 * 수립주기 20년
- ▸ 용역기간 : 2019. 4. 29. ~ 2021. 7. 14.
- ▸ 용역주체 : 행복청, 대전·세종·충북·충남
-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 ▸ 용 역 비 : 18억원(행복청 5.4억원, 4개 시·도 각 3.15억원)
- ▸ 주요내용 : 광역계획권 설정, 공간구조 구상, 기능분담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광역시설계획 등

□ 추진상황

○ ’18. 03월 : 행복청과 4개 시도 공동수립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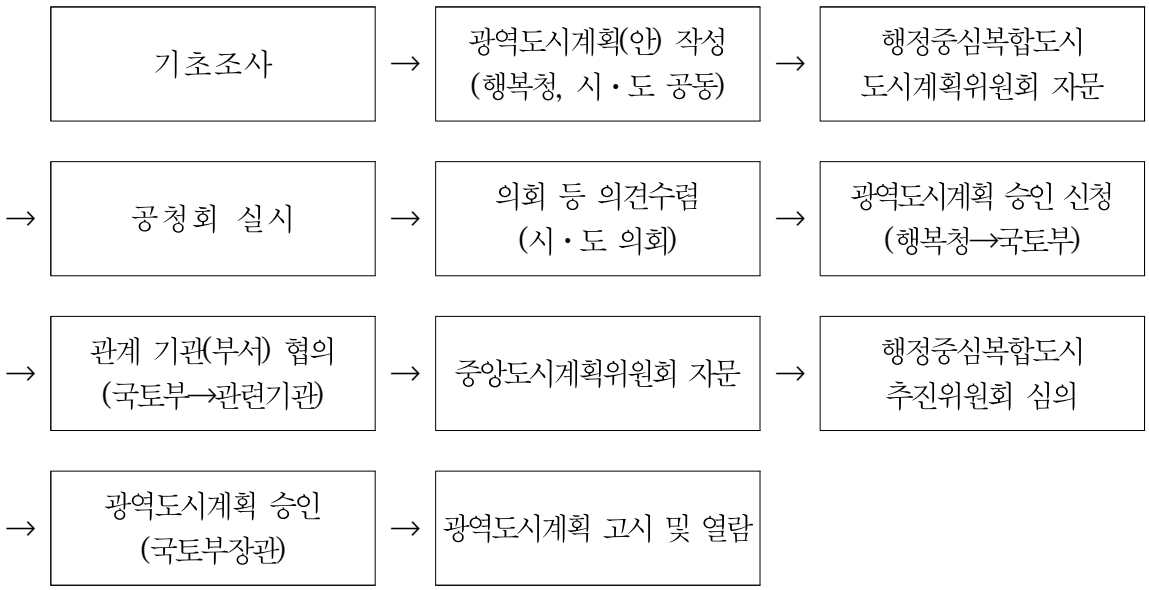
○ ’19. 04월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 착수

○ ’20. 03월 : 용역 일시정지(광역계획권 협의지연) 및 용역 재착수(10월)

○ ’21. 01월 : 광역계획권 조정(안) 국토부 협의 완료

○ ’21. 03월 : 광역계획권 조정(안) 지자체 의견 조회(국토부→지자체)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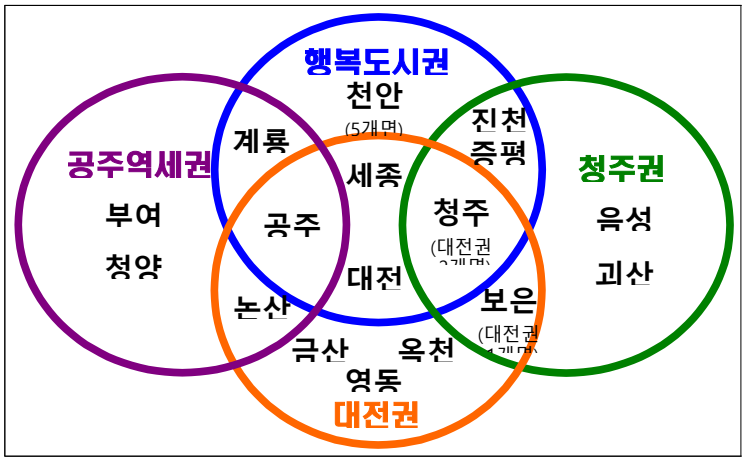
□ 향후계획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부) 및 공청회 : ’21년 상반기

○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 ’21년 하반기

2.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 충청권내 광역계획권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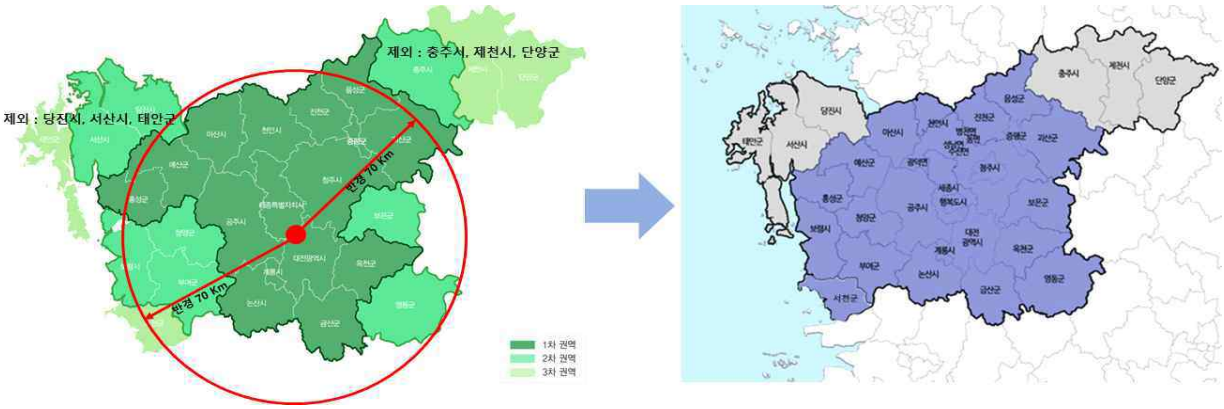


권역별	목표연도	면적(㎢)	계획인구(만명)
청주권 (최초'01.12) (변경'10.12)	2020	3,403	142
대전권 (최초'05.1.) (변경'10.1.)	2020	4,634	274
행복도시 (최초'07.6.)	2030	3,597	370
공주역세권 (최초'16.12)	2030	2,584	60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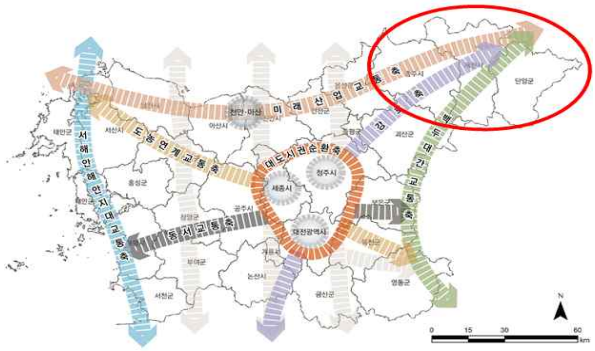
○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70㎞** 범위로 설정

* 시간 거리 **1시간 내외** 지역으로 광역권 **관문공항/항만**, 행정기능, 소멸위험 중·소도시를 포함한 균형발전·포용적 측면에서 아우를 수 있는 범위



○ 향후 광역도시계획수립시 **개발축·교통축·녹지축** 구상 및 충청권 상생협력사업 발굴로 **충청권 전역**을 고려

개발축 구상(안)



교통축 구상(안)

○ 광역계획권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확대 동의, 다만 시군 의견 수렴
- 실행력 담보를 위해 교통·환경 등 부문별 광역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제외 시군 포함 : 충주, 제천, 단양, 당진, 서산, 태안

3. 광역계획권역 확대 · 조정에 따른 우리도 준비상황

□ 추진방향

○ 여건변화에 따른 **행복도시권 위상**과 연계한 충북도 **미래발전상** 정립

○ 중복된 3개 계획권에서 1개 광역계획권으로 통합

- **상위계획과**의 유기적 연계 및 기존 계획의 문제 해결
-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적 계획**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시·군 및 연구진과 협의

> *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및 경관계획 등

⇒ 우리도의 **각종 현안사업 및 전략적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누락 되지 않도록 대처

□ 추진절차

광역계획권(안) 작성 (행복청, 시·도 공동) → 광역계획권 지정 신청 (행복청→국토부) → 관계기관 의견 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심의 →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부장관)

□ 향후계획

○ 3월 의견수렴(국토부→시군)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거쳐 4월 광역계획권 지정(국토부)

Ⅱ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 사업개요

※ 전체 사업규모 : L=161.5km, 5조 6,342억원

구 간	거리 및 사업비
• 청주공항~청주도심~오송	L=22.2km, 1조 3,882억원
• 오송~조치원~세종	L=12.7km, 9,364억원 (오송~조치원 단선 2.7km, 707억원 포함)
• 세종~반석	L=14.0km, 1조 548억원
• 조치원~신탄진	L=22.6km, 1,187억원
• 세종~보령	L=90.0km, 2조 1,343억원

□ 필 요 성

○ 수도권 집중화(일극화)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충청권 메가시티 급부상**

○ **충청권 메가시티(초광역생활권)의 근간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절대적

- 대전~세종~청주간 인적·물적 교류 기여

○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메가시티·행정수도 완성의 최고 효율적 수단**

충청권 광역철도망 완성 ⇨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 행정수도 완성

□ 추진상황

○ `19.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

○ `20. 9.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대전·세종·충북) 국토부 제출

○ `20.12.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공동 반영 건의

□ 충청권 광역철도망 청주도심 통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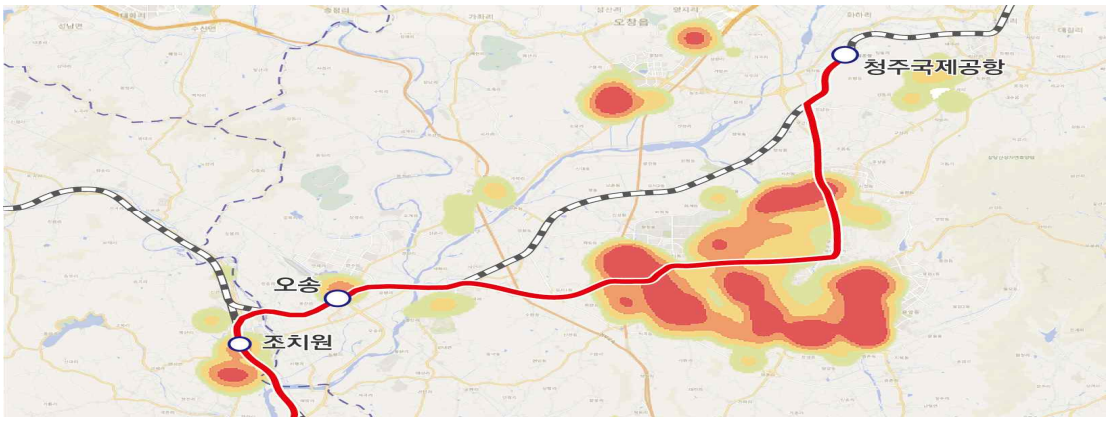
① 기존의 충북선은 청주 도심에서 10㎞ 외곽에 위치하여 청주시민과 대전/세종 시민간의 철도이용은 거의 불가능

○ 현 청주시민 철도이용률 : 전국 63개 도시중 60위(수도권 제외)

○ 1일 철도 이용자수(인구 천명당) : 최고 76명, 평균 19명, **청주 2명**

* 청주역 80명/일, 오근장역 223명/일(철도이용률 전국 최하위)

<충북선 위치와 청주시 인구분포>



② 청주시는 철도사각(외면) 도시로 도시환경 최악 상태

○ 자동차 위주의 도시교통으로 전국 최악의 초미세먼지 발생

- 연평균 농도('19) : 청주(28㎍/㎥) ⇒ 전국평균(23㎍/㎥)

* 서울 23, 부산 21, 대구 22, 인천 23, 광주 23, 대전 22, 울산 20

○ 청주 도심 간선도로(상당로, 사직대로) 서비스수준 "F"(최악)

- 첨두시 통행속도 : 상당로(8.3km/h), 사직대로(11.2km/h)

※ 1920년 개통한 충북선 철도는 청주도심을 통과하였으나, 1968년 1차 외곽 이전, 1980년 2차 외곽이전으로 청주시는 철도사각(외면)도시로 전락

⇒ "잃어버린 철도를 되찾자"는 청주 시민의 기대가 강함

③ 기존 충북선 활용시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아닌 「대전·세종시민의 청주공항 전용철도」로 전락

○ 충청권 광역 도시간 쌍방(雙方)철도가 아닌 **일방(一方)철도**

○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간의 철도이용 교류는 전무

□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효과

①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 **267만명** : 청주85만, 대전 147만, 세종 35만

< 인적교류 예상 (1일) >

구분	현재	광역철도 구축시	비고
계	**16.5만 명**	**22.0만 명**	**33% 증**
청주 / 대전간	8.7만 명	11.7만 명	34% 증
청주 / 세종간	7.8만 명	10.3만 명	32% 증

② 청주/대전·세종간 시간 및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

		버스		광역철도		단축
(대전)	• 시 간	120분	→	50분	:	△ 70분
	• 교통비	6,050원		2,150원	:	△ 3,900원
(세종)	• 시 간	80분	→	28분	:	△ 52분
	• 교통비	3,200원		1,750원	:	△ 1,450원

③ 충청권 국가기간 교통시설인 오송역·청주공항 활성화

○ **오 송 역 이용객 : 현 860만 명('19년) → 1,000만 명 돌파**

○ **청주공항 이용객 : 현 300만 명('19년) → 400만 명 돌파**

④ 생산유발효과 2조 7,497억원 등 충청권 경제활성화 및 도시 상권의 폭발적 성장

* 충북연구원

	생산유발(억원)	부가가치유발(억원)	취업유발(명)
계	27,497	14,754	47,232
• 충 북	9,026	4,781	15,382
• 대 전	11,913	6,432	20,542
• 세 종	6,558	3,541	11,308

※ 특히 청주는 구 도심권 상가활성화 및 도시재생 효과 극대화

충청권 광역철도

서울
제천
청주국제공항
오송
조치원
경부고속철도
세종청사~조치원
청주공항~청주시내~
오송~조치원
신탄진~조치원
세종청사
호남고속철도
보령
신탄진
세종~보령 일반철도
세종청사~반석
반석
대전1호선
목포
오정
서대전
대전
옥천
계룡
부산
목포

Ⅲ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 중부내륙선 지선

<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

< 사 업 개 요 >

- 구　간 :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 연　장 : 78.8km(광역철도)
- 사업비 : 2조 3,246억원(국비 1조6,272억원, 지방비 6,974억원)

□ 필 요 성

○ 수도권 남부-충청권-경부·호남권을 연결하는 국가 광역교통망 확충

○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에 부합되고 경기 내륙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기여

□ 구축효과

① 수요 및 교통 접근성 측면

○ 1일 수송수요 2.8만 명 예상(개통시 1,265억원/년 편익발생)

○ 획기적인 통행시간 단축(107분) / 비용 절감(약 1,200원)

		버스		광역철도		단축
(동탄) ~ (청주공항)	• 시　간	141분	→	34분	:	△ 107분
	• 교통비	8,800	→	7,593원	:	△ 1,207원

② 생산유발효과 3조 9,554억원 등 충청내륙권의 경제 활성화 기대

구　분	생산유발(억원)	부가가치유발(억원)	취업유발(명)
충 북	39,554	23,792	22,580

< 중부내륙선 지선 >

< 사 업 개 요 >

- 구　간 :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 연　장 : 54.9km(일반철도)
- 사업비 : 1조 6,499억원(전액 국비)

□ 필 요 성

○ 경강선(성남~여주),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권·강원권과 충청권 접근성 대폭 개선

○ 중부내륙지역 철도 수혜 확대로 음성, 금왕, 충북혁신도시 등 충청내륙 지역 거점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구축효과

① 수요 및 교통 접근성 측면

○ 1일 수송수요 1.4만 명 예상(개통시 1,078억원/년 편익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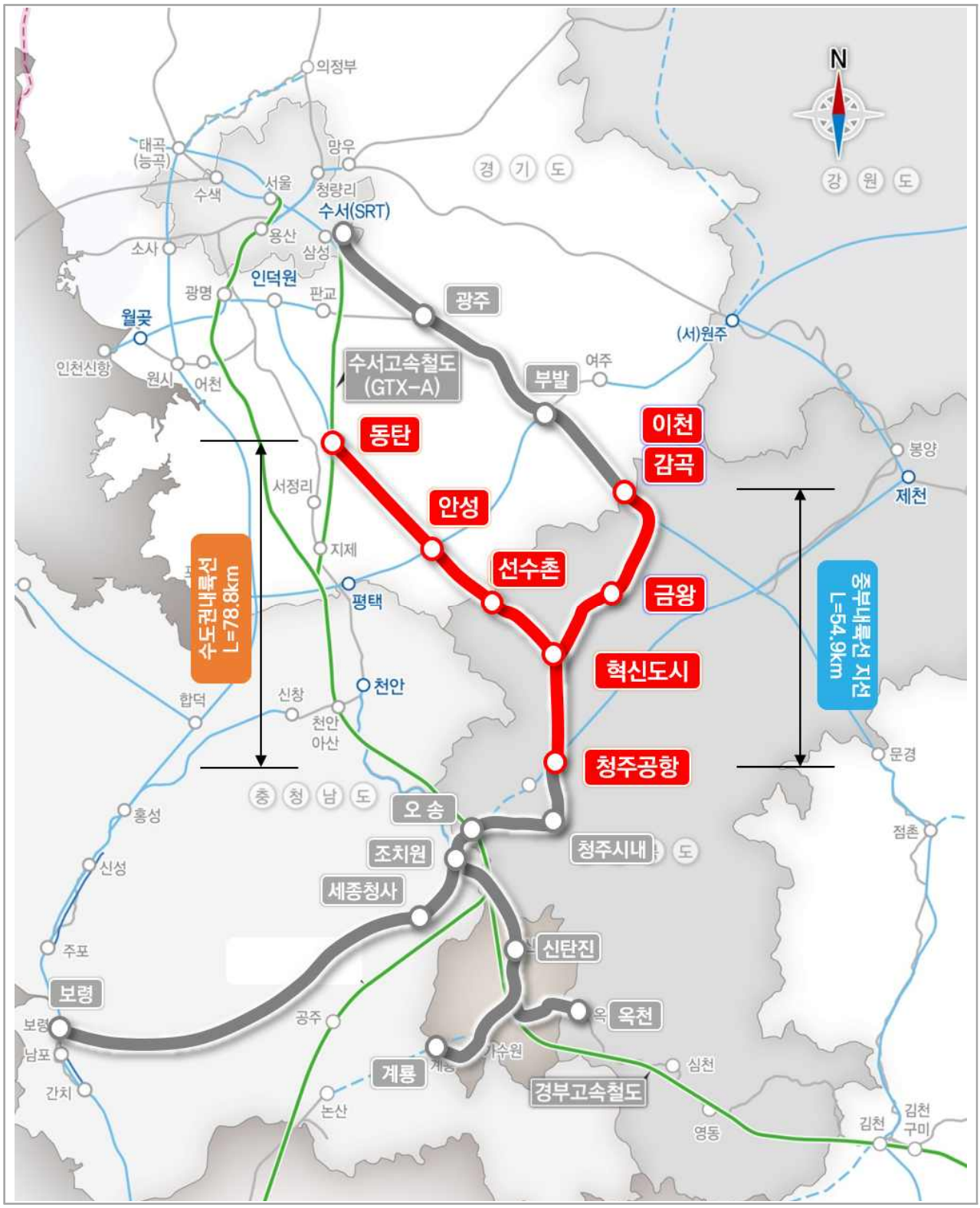
○ 획기적인 통행시간 단축(180분) / 비용 절감(약 4천원)

		버스		철도		단축
(수서) ~ (청주공항)	• 시　간	232분	➜	52분	:	△ 180분
	• 교통비	12,450원	➜	8,100원	:	△ 4,350원

② 생산유발효과 2조 9천 억원 등 충청내륙권의 고용효과 기대

구　분	생산유발(억원)	부가가치유발(억원)	취업유발(명)
충 북	29,000	17,000	19,193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 중부내륙선



Ⅴ. 7차 회의 업무보고 자료

(2021. 10. 14.)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21. 10. 14.(목) 14:00
특별위원회 회의실(신관5층)

제7차 균특위 보고자료 및 시나리오

< 목 차 >

1.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2.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상황
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

기획관리실

1.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충북도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1. 2. 17. ~ 2021. 12. 2.

○ 계약금액 : 69,018천원(국 50%, 도 50%)

○ 계약상대자 : (재)충북연구원 대표 정초시

○ 주요내용 :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향 및 영향분석, 장·단기적인 충북 대응 전략 마련

❑ 추진상황

○ 연구용역 계약 : 2021. 2. 16.

○ 착수보고회 개최 : 2021. 3. 4.

○ 충북 민・관・정 TF 회의 : 2회(3월, 8월)

○ 시・군 간담회 : 2021. 6. 15.(시군 기획부서 주무팀장 참석)

○ 권역별 시・군 간담회 : 2회(9월/중북부권, 중남부권)

○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9. 30.

○ 결과보고회 : 2021. 11월중(예정)

❑ 중간보고 결과 [분야별 사업 발굴, 62건]

○ **(인프라 구축, 27건)** : 청주도심 연결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공항 위계 재설정 등

○ **(미래신산업, 18건)**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이차전지 특화단지 완성 등

○ **(문화·관광분야, 13건)** :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등

○ **(유관기관 유치, 4건)** : 국회(국립) 과학기술 박물관 유치, (가칭)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구축 등

1-세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응 전략

❑ 전　　망

○ **(인　　구)** 공공기관 이전 가속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유치로 청년·파워엘리트 계층의 유입 지속, 반면 세종시 주변 지역인 청주·충주·옥천의 인구유출 심화 가능

○ **(인 프 라)** 도로·철도 인프라의 조기 건립 청신호, 오송역·청주공항의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전망

○ **(산업경제)** 충청권 GRDP 총량 증가, 방송·언론·협회 등의 이전에 따라 유동인구 및 문화관광 수요 증가

○ **(공공기관 등)**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탄력,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계협력으로 수청권 공간구조 강화 예상

❑ 우리도 대응전략

○ 추진방향

- **(단기적)** 국회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 **(장기적)**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의 신수도권 관문 역할 강화, 바이오, 반도체・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충북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선도기지 육성전략 마련 등**

○ 세종과 충청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및 공조체계 지속 유지하면서,

- 도로, 교통, 공항, 주거환경 등 **세종시와 주변도시를 연결・소통할 수 있는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 국토 균형발전에 맞는 **광역적 협력사업 추진**
- 관광, 문화예술을 통한 **광역적 시설 연계로 교류협력 활성화**

➤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　　능)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충청권의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구　　성) 20명(시도지사 4, 시도의장 4,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4, 民 대표 8)

・(역　　할)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활동방안 강구 등

・(추진상황) 출범식('20.9.28.), 실무회의('20.10.30.), 충청권 상생발전포럼 개최(3회)

2.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상황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권 형성

- 미래 초광역권역 환경 대비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

- 국가차원의 신성장 축 형성과 광역적 국가혁신허브 구축에 기여

○ 충청권 지역의 공동번영과 동반성장 도모

- 새로운 경제·생활권 형성 전략 마련, 초광역 협력권 확대

❑ 추진경과

○ **('20. 11. 20.)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

- 제29회 충청권 행정협의회(1995~현재) 광역생활경제권 추진합의문 채택

> **[주요내용]** ① 충청권 4개 시·도간 상호협력 강화, ② 연구용역 공동 수행, ③ 충청권 광역사업 추진 적극 협력, ④ 추진협의체 구성 및 행정협의회 기능강화

○ **('20. 12. 14.)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공동건의** / 4차 국가철도계획 반영

○ ('21. 1. 29.) 충청권 상생협력 공동연구용역 추진회의

- 4개 시·도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기본구상 논의 / 실무진+연구진

○ ('21. 3. 15.) 충청권 상생협력 연구용역 '충청권 메가시티' 착수 결정

- '21년 중 포괄적 아젠다(전략수립) 설정 → 향후 매년 공-동용역 실시

○ ('21. 4. 5.) 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과업목표 수립, 비전·목표·핵심전략·사업추진 체계 등 기본구상 협의

> **[단계별 과제설정]** ① 현황·여건 분석 → ② 이슈 진단 및 어젠다 도출 → ③ 생활경제권 설정 → ④광역행정 거버넌스 구축 → ⑤메가시티 사업추진 구조 설정

○ ('21. 7. 23.) 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공간·시간·내용범위 및 기본 추진방향 설정, 추진사업(안) 협의

> **[주요내용]** ① 네트워크 도시 중심 메가시티 권역(생활경제권) 형성 ② 충청권이 공감하는 공동발전의 비전과 목표설정 ③ 단일 경제·생활권 지원 광역거버넌스 구축

< 연구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1. 3. 19. ~ 12. 13.
- 계약금액 : 95,000천원 ※ 4개 시·도 공동부담
- 주 관 : 대전세종연구원 (참여) 충북·충남연구원
- 주요내용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의 당위성과 비전 제시, 핵심 분야별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등

❑ 주요 추진과제(안)(3개 분야, 9개 전략, 23개 세부사업)

○ (산업경제) 글로벌 경쟁력 기반 미래신산업 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충청권 연결의 경제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자족형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산업벨트 육성**
* 융합 소재·부품 연구개발 추진, AI 가반 소재 빅데이터 구축 등

► **글로벌 인적지원 선도 혁신 역량강화**
* 인재양성 및 글로벌 창업투자 플랫폼 구축, 산학연 혁신성장 고도화 등

○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 형성

► **광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시간 기능분담**
*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통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기반 구축 등

► **충청권 균형발전과 초광역 상생협력 강화**
* 광역도로망 및 철도망 건설사업 추진 → 충청권 50분 광역교통망

► **생활권 공동체 서비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공공데이터 허브 구축,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및 공동 대책수립 등

○ (사회문화) 지역성 기반 충청민의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 **충청권 문화관광 초광역 브랜드 강화**
* 충청권 콘텐츠 기반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및 통합관광센터 구축

► **충청권 문화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충청권 공동체 연계 문화관광 거버넌스 기능 확대**
* 충청권 관광진흥협회 서비스 강화 및 광역관광본부 신설

❑ 향후계획

○ ('21. 11.) 메가시티 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

○ ('22년) 공동협력 사업추진체계 마련, 신규 광역협력사업 발굴 등

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상황

❑ 법안 개요

과세대상	세 율	과세주체	세수규모
시멘트 생산	1천원/톤 40kg(1포)당 40원 5,000원 → 5,040원(0.8%↑)	도	522억원(추정) 강원 276억원,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

※ 지자체 재정 소요액 기준(859원/톤)과 외부불경제 기준(4,353원/톤)의 범위 내에서 업계 부담을 고려 최소화(1,000원/톤)

※ **(지방재정법 동시 개정) 세수의 65%**(현행 30%) **피해 시군 배분**(화력.원자력발전과 동일)
↳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목적세로서 '특별회계'로 운영, 시멘트 생산시설 소재 시군 전액 지원

< 환경오염피해 3대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역사 >

	최초 생산연도	본격 생산연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연도
• 화력발전	1930년	1983년	2014년
• 원자력발전	1978년	1988년	2006년
• 시멘트	1919년	1971년	-

❑ 동법안 국회 논의 과정

❍ 19대 국회 : 강은희 의원 발의('15. 8. 26.)
※ 업계 반대 및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16. 5. 29.)

❍ 20대 국회 : 이철규(동해·삼척), 권석창 의원(제천·단양) 발의('16. 9. 29.)
※ 필요성 공감, 업계 반대 및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0. 5. 29.)

❍ 21대 국회 : 이개호 의원(전남 장성) 발의('20.10.16),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중
※ 업계 및 이철규·엄태영 의원 반대,
업계와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원)간 기금조성 협약('21. 2. 25.)

❑ 제21대 국회 발의 지역자원시설세 3대 법안

구 분	기 존	개 정(안)	세수증가
• 화력발전세	0.3원/kWh ('14년부터 징수)	1~2원/kWh	현 1,064억원 → 3,765억원 **(증 2,704억원)**
• 원자력발전세	발전량 1원/kWh ('06년부터 징수)	시설용량 5,000원/kW (영구정지발전소 2,500원/kW)	현 1,562억원 → 4,236억원 **(증 2,674억원)**
(방사성폐기물세)	-	사용후핵연료 비용의 1.7~2.5%	
• 시멘트세	-	1,000원/톤	**(증 522억원)**

❑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 · 자치단체 피해동향

○ 주민의 정신적 · 건강적 피해 심각 : 분진 · 소음 · 악취 등

- 공장주변 주민 10,952명중 967명이 유소견자(만성폐쇄성 폐질환 933, 진폐증 34)로 판명('16, 환경부 조사)
- 공장주변 장기간 노출주민들, 기관지변형 최초 입증('20, 강원대병원)

○ 소멸위기의 자치단체로 전락

- 인구 유출 심각(주민등록인구 기준)

	1980년	2020년	증 감
• 영월군	95,506명	38,662명	△56,844명 (△59.5%)
• 동해시	104,370명	90,593명	△13,777명 (△13.2%)
• 제천시	162,013명	133,018명	△28,995명 (△17.8%)
• 단양군	72,946명	29,155명	△43,791명 (△60.0%)

- 재정자립도 하위 수준

전국 평균	제천시	단양군	동해시	영월군	삼척시
45.2%	15.3%	11.6%	16.7%	15.2%	13.5%

○ 생산지역의 외부불경제(환경오염, 도로파손 등) 요인 심각

- 대기오염 배출량 비교 : 발전업 〉 시멘트 제조업 〉 제철 · 철강업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중 시멘트 업체 8개소(1위) 차지

※ 석회석 이외에도 유연탄·폐기물 혼합 사용이 더 큰 문제

❑ 주요 추진상황

<시도 및 시군 연계 활동>

- ○ 시도지사 공동건의문(강원, 충북, 전남, 경북 도지사)('20. 10월)
- ○ 시도의회 의장단 건의문(강원, 충북)('20. 11월)
- ○ 충북·강원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장, 군수 공동협약서('20. 11월)
- ○ 충북·강원·전남 시멘트 생산지역 8개 시,군의회 의장 공동건의문('20. 11월)
- ○ 시멘트 세금 VS 기금 논란종식 방송(4회)('21. 1. ~ '21. 3.)
- ○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21. 3. 12.)
- ○ 시멘트세 신설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제5회 충북세정포럼 개최('21. 3. 29.)
- ○ 관계기관 합동회의(행안부, 충북도, 단양군, 강원도, 삼척시)('21. 7. 6.)
- ○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서영교 행안위원장 제천방문시 건의('21. 8. 3.)

<정부, 국회·정당 건의활동>

- ○ 행정안전부장관 건의(2회: '20. 6. 10, '20. 7. 29.)
-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국회 행안위원장·국무총리 방문 건의('20. 9월)
-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건의('20. 10. 26.)
- ○ 충북・강원 도지사 국회 방문 법안통과 건의('20. 12. 7.)
- ○ 시멘트세 관련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관 당정회의('21. 6. 14.)
- ○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 방문 건의(15회)('21. 2~8월)
-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안건 회부(3회: '20.11.23., '21.4.22., 8.27.)
- ○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시 시멘트협회장 증인 심문(이형석의원, '21. 10. 1.)
- ○ 청와대 방문 건의(정무수석 - '21. 9. 30. / 경제수석 - '21. 10. 6.)

❑ 향후계획

- ○ 국회 방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속 건의
- ○ 시멘트세 신설 필요성 언론 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 충북·강원 등 관련 지자체 공조, 연내 법안통과 추진
- ○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한 입법 활동 추진

참고

시멘트업계·산업통상자원부 반대논리 검토

○ 시멘트업계 수익 동향(한국시멘트협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율
(2019년)	43,218억원	3,984억원	2,763억원	9.2%
(2020년)	39,692억원	5,048억원	3,246억원	12.7%

※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한국은행) : '19년 4.4% / '20년 4.9%

○ 업계 주장 기금과 세금의 차이

구 분	기 금	세 금
• 재원규모 지속성·안정성	미확보	확 보
• 미이행시 강제수단	없 음	법으로 보장
• 재원배분	주민 개개인에만 배분 → 공공사업 불가, 갈등우려	주민 이외에 도·시군에도 배분 → 공공사업 가능
• 이중과세	석회석 광산에 기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주장	석회석 광업과 시멘트 제조업은 별개

※ 매년 100억원~190억원 정도 사회공헌기금 지원 주장하나(입증 불가),
주민직접지원 사회공헌기금은 연간 40~50억원 정도에 불과(한국지방세연구원)

○ 타 제조업 과세 확대 우려

- 시멘트 생산지역의 외부불경제(건강·환경·경제피해 등) 요인 심각, 수익자·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시멘트세 과세가 시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발전업 11.2만톤 〉 시멘트제조업 6.3 〉 제철·철강업 5.7
- 제철·철강업 등 타 산업 파급은 불확실, 피해 인정된다면 과세가 합당

○ 물가인상 등 경제적 영향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세는 전기요금 인상 우려 있으나, 시멘트세는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
- 1,000원/톤(1포당 40원) 부과 → 시멘트 가격 0.8% 인상 및 소비자물가 0.004% 상승 예상으로 효과는 극히 미미
  - '71년 이후 소비자물가 인상 : 1,794%('71년 시멘트 본격 생산이후)

2021. 10. 14.(목)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내륙권 종합계획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목 차

1.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2.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균형건설국

1 내륙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수립

내륙권(내륙첨단산업·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수립 추진현황

□ 종합계획 수립개요

○ (근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시·도지사 공동**으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을 **권역별로 입안**하여야 함(법 제5조)
- 전국 6개권역 : 동·서·남해안, **내륙첨단산업, 백두대간,** 대구-광주(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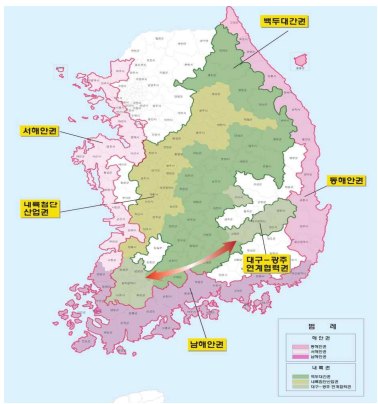
○ (목적)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간 교류증대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

○ (내용) **관광, 산업, 인프라**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략 마련,** 이를 바탕으로 **추진사업 발굴**

○ (계획기간) 2014~2020년

○ (계획범위) ※ 우리 道 : 2종

구분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계획범위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 (25개 시군구)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27개 시군)
(우리 道)	청주·충주·제천·증평·진천·음성 (6개 시군)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5개 군)
용역수행	**(주관) 충북도** / 충북연구원 * 6개 시도연구원 공동	(주관) 강원도 / 강원연구원 * 6개 시도연구원 공동



※ 계획 수립('14.6월) 이후 법령 개정('18년, 계획기간 2020년→2030년)으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수립이 필요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계획 수립중('20.2~)

- (사유) 계획기간의 변경(당초 2014~2020년 → 변경 2021~2030년)

□ 계획수립 절차

※ 해안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제6조, 제22조

종합계획 입안 (권역별)	→	의견수렴 (공청회 등)	→	발전공동협의회 심의	→	관계부처 협의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종합계획 결정·고시
시·도 공동입안		·주민열람(14일이상) ·공청회		6개시·도 단체장, 의장 등		20일		(1차)국토평가 →(2차)종합심의		국토부장관

□ 그간 추진경과

○ ’14. 6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결정·고시**(국토부)

* 우리 도 : 2종(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계획기간(2014~2020)

○ ’18.12.31. **해안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유효기간 연장 2020년→2030년)

○ ’20. 2~5월 국토부 및 관련 시·도 종합계약 협정, 용역계약 체결

* 내륙첨단산업권 : 충북도 주관으로 용역계약(국토부 90백만원, 시·도 162백만원)

* 백두대간권 : 강원도 주관으로 용역계약(국토부 78백만원, 시·도 105백만원)

○ ’21. 5~6월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 내륙첨단산업권(6개시·도 공동) : 6. 10., 유튜브(온라인) 생중계

* 백두대간권(6개시·도 개별) : 우리 도 6. 18.

○ ’21. 6~7월 종합계획 변경(안)* **발전공동협의회 심의**

* 내륙첨단산업권 : 전체 150개사업, 13조 7,859억원 / 충북 41개사업, 3조 5,467억원

* 백두대간권 : 전체 150개사업, 3조 803억원 / 충북 32개사업, 3,492억원

※ ’21.4월 협의회 구성(24명, 6개시·도 단체장, 의장, 연구원장 등) → ’21.7.1. 심의 및 국토부 제출

○ ’21. 7.15.~8. 4. 종합계획 변경(안) **관계중앙부처(16개부처*) 협의**

*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산자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국방부 등

○ ’21.8.25.~9. 8. 종합계획 변경(안)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 심의(완료)

○ (~’21.10.21) 종합계획 변경(안) **국토정책위 종합심의** 최종 예정

* ~’21.10.21. 종합심의 → 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및 보완하여 **10월말 결정·고시 예정(국토부)**

□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세부내용)

1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안)

○ (목적) 내륙첨단산업권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미래성장축 정착 정책방향과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촉진

○ (공간범위) **6개 시·도**(대전, 강원, 충남·북, 전북, 세종), **25개 시·군·구**

○ (비전)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

○ (**추진전략**) ①미래지향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②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③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④지역인프라 구축

○ (**사업구성**) 추진전략별로 **총 150개 사업** 추진을 위해 **13조 7,859억원**

- 추진전략별 사업비

(단위:개,억원)

추진전략	사업수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150	137,859	63,303	35,137	39,419
1.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41	69,632	32,583	14,702	22,347
2.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28	27,980	16,230	7,361	4,389
3.지역자산 기반 문환관광 거점 확충	56	36,247	14,448	13,032	8,767
4.권역 내 연계 지역인프라 구축	25	4,000	42	42	3,916

- 시·도별 사업비

구분	계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사업비(억원)	137,859	15,516	10,668	15,953	35,467	41,578	18,677
사업수(개)	(150)	(16)	(6)	(21)	(41)	(40)	(26)
					25.7%		

○ (세부사업 내역-충북)

(구분) 추진전략·세부사업	총사업비(억원)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35,467	13,936	8,156	13,375	
Ⅰ.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17,816**	**5,719**	**3,281**	**8,816**	
① 미래특장차 특수환경 신뢰성센터 구축	261	100	161		
② 수소버스 부품 시험평가 지원센터 구축	192	103	89		
③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415	209	206		
④ 미래 자동차 부품 특화산단 조성	5,088			5,088	
⑤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조성	410	170	220	20	
⑥ 시스템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	850	338	2	510	
⑦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	190	95	95		핵심

(구분) 추진전략·세부사업	총사업비 (억원)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⑧ 순환경제혁신센터 조성	215	90	105	20	
⑨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 육성	9,845	4,294	2,373	3,178	연계
⑩ 방사광가속기 DNA센터 구축 및 운영	250	250			
⑪ 방사광가속기 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원	100	70	30		
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9,816**	**5,107**	**2,909**	**1,800**	
⑫ 뷰티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40	20	20		
⑬ 뷰티헬스 특화산업단지 조성	1,505	140		1,365	
⑭ 바이오 현장중심 전문인력 양성	439	298	101	40	연계
⑮ 국가주도 정밀의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1,820	1,263	447	110	
⑯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실용화센터 건립	200	140	60		
⑰ 오송 R&D융합 연구병원 건립	1,500	940	275	285	
⑱ 소방가족치유힐링센터	300	300			
⑲ 음성 융복합 바이오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1,500	750	750		
⑳ 고려인삼 광역 융복합사업	200	100	100		
㉑ 음성화훼단지 조성사업	201	100	101		
㉒ 푸드테크 융합산업화 허브 구축	1,791	806	985		
㉓ 한약재 집하 및 유통센터 건립(기존)	320	250	70		
Ⅲ.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	**7,835**	**3,110**	**1,966**	**2,759**	
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3,003	1,625	519	859	
㉕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196	98	98		**핵심**
㉖ 남한강 친환경 수상레저 거점 기반조성	186	93	93		
㉗ 미호강 친수공간 확충	1,500	750	750		
㉘ 충주 시민의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0	35	35		
㉙ 충주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2,520	310	310	1,900	
㉚ 폐철도 부지 관광자원화 사업	120	60	60		
㉛ 탄금대 역사공원화	240	139	101		
Ⅳ. 권역 내 연계 지역인프라 구축	**128,194**	**47,651**	**40,543**	**40,000**	
㉜ 음성 감곡IC-이천 진암 도로건설	1,112	1,112			
㉝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IC) 확장	2,625	2,625			
㉞ 충북선 고속화 사업 달천구간 선형 개선	1,000	1,000			
㉟ 충주 살미-제천 한수 국도 건설	916	916			
㊱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간 도로연결	1,051	508	543		
㊲ 용기-금대간 도로개설공사	260	260			
㊳ (충북선 철도 삼탄~연박) 고속화사업	2,200	2,200			
㊴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	23,245	23,245			
㊵ 충청권 광역철도	15,785	15,785			
㊶ 청주국제공항 복합신도시 조성	80,000		40,000	40,000	

2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변경안)

○ (목적) 국토의 중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가치 제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경쟁력 확보로 관광객 유치**를 증진

○ (공간범위) **6개 도**(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27개 시·군·구**

○ (비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

○ (**추진전략**) ①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③지속가능한 녹색환경, ④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 (**사업구성**) 추진전략별로 **총 150개 사업** 추진을 위해 **3조 803억원**

- 추진전략별 사업비

(단위:건,억원)

추진전략	사업수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150	30,803	15,828	13,132	1,843
1.지역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27	7,725	4,152	2,190	1,383
2.고유성확보 및 융복합형 녹색여가벨트	68	13,457	6,244	7,123	90
3.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28	7,031	4,039	2,792	200
4.안정된 생활기반조성 및 지역간 연계강화	27	2,590	1,393	1,027	170

- 시·도별 사업비

구분	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연계
사업비(억원)	30,803	4,022	3,492	2,550	1,360	4,868	2,788	11,723
사업수(개)	(150)	(12)	(32)	(18)	(14)	(19)	(22)	(33)
			11.3%					

○ (세부사업 내역-충북)

(구분) 추진전략단위사업	총사업비(억원)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3,492	1,604	1,753	135	
Ⅰ.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5)	**525**	**225**	**225**	**75**	
① 충북 백두대간 농산촌형 MICE 산업 육성	100	50	50		
② 광물(바이오미네랄)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테마파크 조성	175	50	50	75	
③ 유기농산과 연계한 오가닉 테라피단지 조상사업	50	25	25		
④ 지역특화자원 연계한 사회적 경제 육성	100	50	50		
⑤ 과수산업과 연계한 미래전략 신품종 과수허브단지 조성	100	50	50		
Ⅱ. 고유성 확보 및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20)	**2,526**	**1,189**	**1,277**	**60**	
⑥ 백화산 복합산림문화 유양단지 조성사업	100	30	20	50	
⑦ 옥천 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사업	90	33	57		
⑧ 백두대간 휴양치유관광벨트 조성	498	249	249		핵심
⑨ 호수 생태 관광시설 조성	165	80	85		
⑩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180	90	90		핵심
⑪ 속리산 말티재 치유의 숲 체험단지 조성사업	120	60	60		
⑫ 일라이트 삼도봉 치유 힐링로드 구축사업	100	50	50		
⑬ 도마령 및 용성골 명소화 사업	60	30	30		

(구분) 추진전략단위사업	총사업비 (억원)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⑭ 충북 백두대간 여행자 플랫폼 조성	170	55	105	10	
⑮ 백두대간 지역 커뮤니티 창업 및 일자리 지원	50	25	25		
⑯ 충북 백두대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운영체계 구축	56	28	28		
⑰ 자연친화적 산림레포츠 관광벨트 조성	240	120	120		
⑱ 시구산 개발	43	19	24		
⑲ 묘목산업과 연계한 융복합화 힐링숲단지 조성사업	240	115	125		
⑳ 원터 및 마방터 복원	20	10	10		
㉑ 조령 제4관문(수옥대관문)	30	13	17		
㉒ 옥천묘목공원 명소화 사업	68	34	34		
㉓ 자연친화적 지역특화 문화예술벨트 조성	240	120	120		
㉔ 충북 백두대간 통합축제 및 콘텐츠 발굴	26	13	13		
㉕ 궤방령 장원급제길 조성	30	15	15		
Ⅲ.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4)	**411**	**175**	**236**		
㉖ 숲속 에코 사운드 음악치유센터 건립	50	25	25		
㉗ 백두대간 국립생태원 건립	200	100	100		
㉘ 백두대간 공충생태 체험 연구관 건립	101	50	51		
㉙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60		60		
Ⅳ.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간 연계 강화(3)	**30**	**15**	**15**		
㉚ 백두대간 순환관광도로 조성					핵심
㉛ 백두대간 순환관광코스 운영	30	15	15		
㉜ 무주~영동~상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 그간 우리도 국비 확보내역(백두대간권)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2022년도(신규)			세부내용
	계	국비	군비	계	국비	군비	
계	256	128	128	4	4	-	
①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140	70	70	2	2 (설계비)	-	·위치: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7-1 장계관광지 일원 ·내용 : 출렁다리 및 야간조명 설치 - 출렁다리(450m),전망데크·카페(1,266㎡), 인포리숲길(1.6km), 쉼터(1,900㎡)
②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116	58	58	2	2 (설계비)	-	·위치: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52-6 일원 ·내용:산막이마을 연계 생태휴양단지 조성 - 트리하우스(2,469㎡),숲속놀이터(19,255㎡), 전망대 등(1,971㎡), 주차장등(5,402㎡)

※ '22년 정부(안) 반영

□ 향후계획

○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우리 도 요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 계획**

- 국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수립, 구역지정, 실시계획승인 등 사업 추진 철저('22~)

※ ~'21.10.21. 종합심의 → 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및 보완하여 **10월말 결정·고시 예정(국토부)**

2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상황 및 4단계 추진계획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도내 인구, 산업, 개발 수요가 청주권역에 집중되고, 진천·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상대적 지역불균형 문제 대두**

○ 이에, 도내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사업 발굴·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자립성장 기반 구축 필요**

□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 (**지원대상**)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낮은 시·군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7개 시·군

○ (**지원규모**)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5% 이내

- 2006~2011(1단계) : 1,200억원(도 788, 군 412)
- 2012~2016(2단계) : 1,777억원(도 1,142, 시군 635)
- **2017~2021(3단계)** : 3,741억원(도 1,938, 시군 1,803) * 추진 중
- 2022~2026(4단계) : 3,806억원(도 1,905, 시군 1,901) * 준비 중

○ (**지원사업**)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 경제·사회 구조 변화 등 지역균형발전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신규(4단계) 추진 中

○ (**재원**)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 추진배경

○ 정부 및 도의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으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

- 인구, 산업, 경제 부문 등에서 **저발전지역 점유율 감소세**

○ 도의 핵심 주력사업 청주권역에 집중, **성장·발전 동력 양극화 지속** 예상

○ 이에, 상대적 자립 위축되는 **지역발전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특별지원 지속 필요**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저발전 시·군 집중 지원**으로 **지역격차 해소**

□ 지원대상 시·군 선정

○ **(선정방법)** 지역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발전도 산출 및 저발전지역 선정

- 인구감소, 고령화 등 심화로 지역발전 저해 지역
-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및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 일자리 및 문화·복지시설 기반이 취약한 지역 등

*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GRDP, 재정력지수, 지가변동율, 문화복지시설 접근성 등

○ **(선정결과)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

※ 3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군과 동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2026(5년간)

○ **(대상지역)**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사업유형)** 전략, 미래신성장동력, 기반조성, 행복마을사업 등

※ 전략·미래신성장동력사업은 5년단위 계획, 그 외 사업은 매년 계획 수립

○ **(사업규모) 3,806억원**(도 1,905*, 시군 1,901)

- 전략사업 (1,820억), 미래신성장동력사업 (560억), 기반조성사업 (1,291억), 행복마을 사업 (44억), 인센티브 (65억),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26억)

※ ('22년 당초예산 435억원 요구) 전략 (192억), 미래신성장 (59억), 기반조성 (107억), 행복마을 (7억), 인센티브 (65억), 혁신역량강화사업 (5억) 등

○ (**대상사업**)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국가 및 도 종합계획과 연계 국비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
- 도 핵심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강호축 개발, 신성장산업 등)
-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 사업, 주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 등

□ 그간 추진상황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침 결정('21.2.)

○ 「4단계 전략사업 발굴 추진계획」 수립('21.3.) 및 시군 사업발굴('21.3.~5.)

○ 4단계 사업발굴 자문위원 컨설팅('21.8.~10., 2회)

- 총 19개 사업(전략사업 11, 미래신성장동력사업 8) 발굴 중

□ 향후계획

○ 3차 자문위원회 컨설팅('21.10.27.)

○ 4단계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21.11.) 및 균형발전위원회 심의('21.12.)

○ 4단계 사업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22.1.) 및 사업추진('22.1.~)

참 고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	사업유형	사업명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19개 사업	230,000	121,000	109,000
제천 (2)	전략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	26,000	13,000	13,000
	미래신성장	미래차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구축	8,000	4,000	4,000
보은 (3)	전략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13,000	7,150	5,850
		속리산 비룡 생태문화단지 조성	13,000	7,150	5,850
	미래신성장	미래신소재 연구·실증지원센터	8,000	4,400	3,600
옥천 (3)	전략	옥천애(愛) 금강쉼터 조성	18,000	9,000	9,000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8,000	4,000	4,000
	미래신성장	충청권 광역철도 교통물류허브 구축	8,000	4,000	4,000
영동 (2)	전략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26,000	14,300	11,700
	미래신성장	일라이트 클러스터 조성	8,000	4,400	3,600
증평 (3)	전략	4C 문화산업플랫폼 조성	26,000	10,400	15,600
	미래신성장	4D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	3,000	1,200	1,800
		4차산업 기술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5,000	2,000	3,000
괴산 (3)	전략	메가파크로드 조성	15,000	9,000	6,000
		행복깃든보금자리주택 조성	11,000	6,600	4,400
	미래신성장	시스템반도체 첨단 AI 기반 분석플랫폼 구축	8,000	4,800	3,200
단양 (3)	전략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19,800	11,880	7,920
		다리안 D-CAMP 플랫폼 조성	6,200	3,720	2,480
	미래신성장	※ 발굴 중			